

정책보고서 2009-6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신윤정 정경희 김수봉 손창균 이수형 이지혜

2009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 순위 조사」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한지가 거의 5년이 흘렀다.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별다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출산율 회복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1년은 제2차 기본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서 보다 효과적인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대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었던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증가하여 왔지만 실제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취약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급여와 서비스 수준이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였다. 제한된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기술 분석 중심의 조사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 규모의 표본

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와 우선 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신운정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정경희 연구위원, 김수봉 연구위원, 손창균 부연구위원, 이수형 선임연구원, 이지혜 연구원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강민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세나 사무관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주)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부장, 유은정 과장, 성현정 대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이삼식 연구위원과 오영희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향후 다가올 저출산·고령사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현황 및 평가.....	13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5
1. 제1차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16
2. 2008년 주요 수정 보완 사항.....	18
제2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평가.....	23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23
2. 전문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25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인식도 선행 조사 결과.....	27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의 중요성.....	33
1.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정의 중요성.....	33
2. 정책 체감도 및 우선 순위 개념 정의.....	34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개요.....	37
제1절 연구 방법론.....	39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개요.....	39
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방법 개요.....	44
제2절 조사 방법론.....	49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49
2. 주요 조사 내용.....	49
3. 표본 설계.....	51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6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결과	59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61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61
2. 결혼관 및 자녀관	69
3. 노후에 대한 준비	74
4. 새로마지 플랜의 효과성 및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8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우선 순위 분석 결과	84
1. 저출산 분야	84
2. 고령화 분야	89
3. 성장 동력 분야	98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104
1. 저출산 분야	104
2. 고령화 분야	115
3. 성장 동력 분야	128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대안 평가	137
1. 출산 및 양육 지원	137
2. 사회 문화 조성	141
3. 기타 정책	144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성	 147
제1절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평가	149
1. 저출산 분야	149
2. 고령화 분야	152
3. 성장 동력 분야	154
제2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방향성	156
1. 저출산 분야	156
2. 고령화 분야	160
3. 성장 동력 분야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71
부록 1 - 표본 할당표	173
부록 2 - AHP 분석 대상자 수	174
부록 3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평균 점수	176
부록 4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mapping 분석	185
부록 5 - 설문지	206

표 목차

〈표 3-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주요 내용 및 분석 대상	47
〈표 3- 2〉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	50
〈표 3- 3〉 층화 기준	52
〈표 3- 4〉 지역별 조사구 및 가구 표본배분	53
〈표 3- 5〉 지역별*연령별 표본배분	54
〈표 3- 6〉 응답자 특성 빈도 분석	57
〈표 4- 1〉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62
〈표 4- 2〉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63
〈표 4- 3〉 저출산 현상의 본인연관성	64
〈표 4- 4〉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65
〈표 4- 5〉 고령화 현상의 본인연관성	66
〈표 4- 6〉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V뉴스/신문기사 접촉정도	67
〈표 4- 7〉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홍보물 접촉정도	68
〈표 4- 8〉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본 광고/홍보물 종류	69
〈표 4- 9〉 인생에서 결혼의 필요성	70
〈표 4-10〉 인생에서 자녀의 필요성	71
〈표 4-11〉 자녀 수에 따라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72
〈표 4-12〉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보다 1명만 잘 키우는 것이 더 낫다	73
〈표 4-13〉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녀를 여러 명 갖는 것이 더 좋다	73
〈표 4-14〉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정도	75
〈표 4-15〉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	76
〈표 4-16〉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정도	77
〈표 4-17〉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1순위)	79
〈표 4-18〉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2순위)	80
〈표 4-19〉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3순위)	80
〈표 4-2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과성	81

〈표 4-21〉 직장여성의 자녀출산·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82
〈표 4-22〉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84
〈표 4-23〉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86
〈표 4-24〉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87
〈표 4-25〉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88
〈표 4-26〉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89
〈표 4-27〉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91
〈표 4-28〉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92
〈표 4-29〉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94
〈표 4-30〉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96
〈표 4-31〉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97
〈표 4-32〉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99
〈표 4-33〉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100
〈표 4-34〉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101
〈표 4-35〉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102
〈표 4-36〉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103
〈표 4-37〉 저출산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109
〈표 4-38〉 고령화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121
〈표 4-39〉 성장동력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132
〈표 4-40〉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137
〈표 4-41〉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시 방향	138
〈표 4-42〉 맞벌이 가정 보육비 지원	139
〈표 4-43〉 양육수당 확대 방안 (1순위)	140
〈표 4-44〉 양육수당 확대 방안 (2순위)	140
〈표 4-45〉 둘째아 지원	141
〈표 4-46〉 ‘출산과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대한 의견	142
〈표 4-47〉 정시퇴근문화 정착의 일가정 양립 도움 정도	143
〈표 4-48〉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	145

〈표 4-49〉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방향	145
〈표 4-50〉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생각	146
〈표 5- 1〉 저출산 영역 정책별 대상자	150
〈표 5- 2〉 고령화 영역 정책별 대상자	154

그림 목차

[그림 3-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	43
[그림 3-2] IPA 도표	45
[그림 4-1] 저출산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106
[그림 4-2] 저출산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실행도	107
[그림 4-3] 저출산 IPA 그래프 (전체)	111
[그림 4-4] 고령화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117
[그림 4-5] 고령화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도	118
[그림 4-6] 고령화 IPA 그래프 (전체)	122
[그림 4-7] 성장동력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130
[그림 4-8] 성장 동력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실행도	131
[그림 4-9] 성장동력 IPA 그래프 (전체)	133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보다 효과적인 제2차 기본 계획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정책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정책 지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정책 우선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 정책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기술 분석 중심의 조사 사업 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분석적인 측정 도구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과학적인 연구 결과 제공
 - 본 연구의 결과는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2. 연구 방법

-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 5월 15일~7월 1일까지 600개의 조사구와 123개 예비조사구에서 조사를 진행
 - 지역, 성, 연령 인구수에 비례하는 표본 비율에 따라 최종 6,189명을 분석 대상 샘플로 확정
 - 주요 조사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안 평가, 통계 분류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평가를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적용
 - 조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세가지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 분석
 - 대영역내 중영역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영역내 소영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평가를 위하여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적용하여 소영역 내 세부 영역 정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이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연령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
 - 주요 분석틀로 빈도 분포 분석, mapping 분석, 집단별 t-test 분석을 수행

3. 주요 연구 결과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정책의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세가지 중영역 사업 중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와 ‘건강한 미래세대 육상’은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높은 우선 순위를 보임.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서는 소영역간의 뚜렷한 우선순위가 발견되지 않아 두 소영역 사업에 국민들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
- 저출산 분야 세부 영역 사업(총 27개 사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 고령화 및 성장 동력 정책과 비교하여 국민들이 부여하는 중요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실행도 체감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
 -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정책 실행도 체감이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보편적인 형태에 가까운 지원일수록 체감도가 높다는 사실이 지적
 - 일가정 양립 분야 사업의 경우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실행도 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요청되는 사업으로 지적.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산전후 휴가 급여’ 정책의 경우 동 영역 사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사업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은 모두 평균 수준의 중요도를 보이나, 실행도 점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사업이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동안 정부가 육아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경제적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반영
 - 신혼부부 출발 지원 사업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매칭 서비스 중심 사업이 아닌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 마련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지적

(2) 고령화 분야

- 고령화 정책의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

고 보호 받는 노후생활 보장,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 조성’ 순서로 우선 순위가 나타난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구축’ 분야에서는 ‘공적연금내실화’를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보다 높은 우선 순위 부여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분야에서는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을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보다 높은 우선 순위 부여
-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 마련’에서는 ‘고령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을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보다 더 우선시함.
-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조성’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고령자 사회 참여여건조성’과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보다 높은 우선 순위 부여

□ 고령화 분야 세부 영역(총 18개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저출산 보다 약간 낮지만 성장 동력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임. 실행도는 저출산 영역과 성장동력 영역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동 영역 사업 중 특히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이 가장 중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실행도 역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임.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 대상에 따라 중요도와 실행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임. 적용 범위가 넓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특수지역연금제도 개선’ 사업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
 -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와 같은 사적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에서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 사업은 평균 수준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보이는 반면,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을 보임.
-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동 영역의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와 실행도를 보임. ‘노후생활 설계 기반 마련’은 평균 이하의 실행도를 보임.

(3) 성장 동력 분야

- 성장 동력 분야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순서로 우선 순위가 파악됨.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에서는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순위 부여
- 성장동력 분야 세부 영역(총 12개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저출산 분야 사업과 고령화 분야 사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실행도는 저출산 분야 사업 보다는 높고 고령화 분야 사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과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연장’에 대해서 중요도는 높으나 낮은 실행도 체감율을 보임.
 - 반대로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도 체감은 높은 것으로 분석

5

요약

4. 정책적 시사점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기존의 양육지원 중심에서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선화해야 할 것임.
 -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정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
 - 저소득층 중심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형태로 정책 추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세자녀 중심에서 두자녀 중심으로 확대
-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급여 및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고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발굴 필요

(2) 고령화 분야

-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적인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요양보호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어서는 안될 것임.
 - 치매 노인 보호 대책 및 장기 요양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양적 및 질적 강화 방안 모색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소득 창출로서의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창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기타 노인의 성, 심리적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상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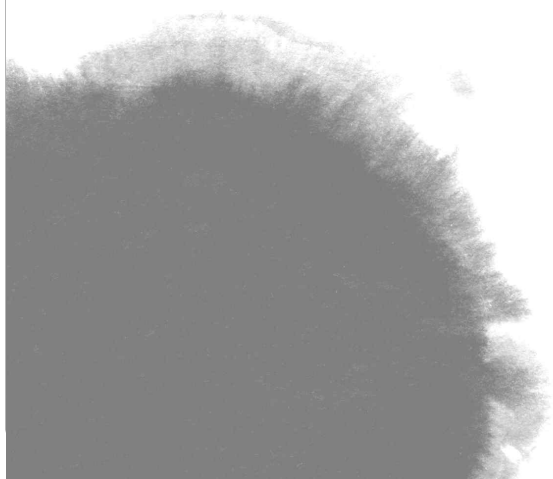
(3) 성장 동력 분야

- 잠재 인력 활용 정책을 취약 계층 대상 소득 보전 정책에서 고급 인력 활용 정책으로 발전
 - 여성 고급 인력 활용 정책 및 전문직 고령 은퇴자 노동력 활용 등
- 잠재 인력 활용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인종별 인식 차이 극복 및 사회 통합 유도
 -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필요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년제도 연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화

01

K
I
H
A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명 이상을 차지하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여 200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직결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의 낮은 출산율 수준이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해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8.2%를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노동 인구 비율이 감소되어 지속적인 국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1인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 개인적인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세수 및 사회보장 부담금이 감소되는 반면, 노인 부양

을 위한 연금 및 건강 보험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초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매 5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제2차 기본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다. 보다 효과적인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제1차 기본 계획 추진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각 연도마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책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중요시 여기며 실제로 정책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미진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체감도가 높을 때 국가 정책이 더욱 힘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최근 국가와 국민간의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책 입안자가 국민이 어떠한 정책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중요시 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 국가는 더욱 힘을 받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국가와 국민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정책 우선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 체감도와 우선 순위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기술 분석 중심의 조사 사업 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분석적인 측정 도구를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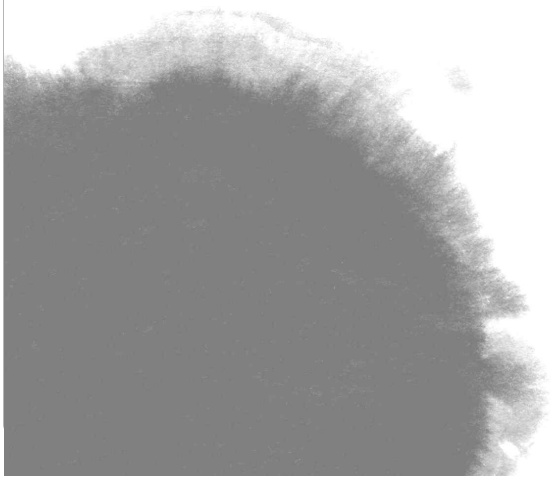
2장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 및 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고찰한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소자화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정책 체감도 및 우선 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정책 평가와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국민 체감도와 우선 순위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과 조사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HP 분석 방법과 IPA의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분석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한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대상, 주요 조사 내용 등을 제시한 후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국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분석 한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우선 순위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대안 평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5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출산 분야, 고령화 분야, 성장 동력 분야로 나누어 국민의 시각에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평가하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기술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현황 및 평가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현황 및 평가

제1 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정책 추진 기구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출산을 하라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출산·양육에 어려움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을 회복 기반을 마련하며, 둘째,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성장 동력의 3대 분야에서 70대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

여 이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과 아울러 기존 정책의 변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완하고 동시에 정책간 효과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기존에 수립하였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 기술한다.

1. 제1차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에서의 3대 이행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것,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이행과제 내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비용 지원이나 서비스, 인센티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이나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및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나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가치관 등을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해 강화

하고 가족생활 교육 등을 통해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는 안전사고, 학대나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영역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 역시 3대 이행과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 하여 다층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 주거·교통·여가·문화 등 각 분야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고령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서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사적 소득보장 제도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확충하여 노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 위주의 평생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노인 요양 보호 기반을 확충하여 개인 및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평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자 가구를 위한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시 편리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활성화하며 노인 권익 증진 및 효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마지막 영역인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에서는 이행과제가 4개이다.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여성이나 고령자,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제한된 인적 자원이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개발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예

방하는 것, 고령사회에 적합한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첫 이행과제인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 고용 정책이나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 및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이나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 절차 개선이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착,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이행과제에서는 학교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거나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이행과제를 위해서는 역모기제도 활성화나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장기국채시장 육성과 같은 정책이 포함되며, 마지막 이행과제인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지원과 함께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2. 2008년 주요 수정 보완 사항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2008년 새정부 출범이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등을 반영하여 보완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비전과 목표는 그대로이고 세부 추진과제만 조금 바뀌었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로 도입된 드림스타트나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에서 변경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었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나 양육지원수당,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반영되었다.

영역별 과제를 보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10개 과제가 늘어 96개가 되었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20개 과제가

줄어 66개가 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서는 6개 과제가 늘어나 71개가 되어 총 과제 수는 보완판에서 233개 과제로 원판 237개 과제보다 4개 과제가 줄었다. 신규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23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25개,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서는 12개 과제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크게 변화된 부분을 보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첫 번째 중영역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였으나, 보완판에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로 바뀌어 결혼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신혼부부 출발지원’이라는 하위 영역이 추가되어 결혼 및 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이나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등 5개 세부 과제가 생겼다. 이 외의 하위 영역들은 모두 원판 그대로이며, 각 하위 영역 안에서의 과제들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 먼저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에서는 현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되는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가 추가된 반면, 국내입양 활성화 영역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으로 이동했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빠졌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나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이 추가되었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서는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이 추가되어 사전검사로 지원이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과제가 추가되었고, 이 외에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급여 확대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가 추가되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의 두 번째 중영역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은 보완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으로 변경되었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원판의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모성보호 강화’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으로 나뉘어졌다. 모성보호 강화에서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가 포함되었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과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족

간호휴직제도 도입,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중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보원판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은 보원판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의 마지막 중영역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은 원판 그대로인 반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어, 원판에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에 있던 국내입양 활성화가 이 영역으로 들어왔고, 원판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과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빠진 반면 아동의 발달 지원이라는 세부 영역의 4개 과제가 들어왔고,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이라는 소영역이 추가되어, 새로 시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가 과제로 포함되었다. 이 외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나 유해환경 차단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원판 그대로 보원판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서는 원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로 다소 명칭이 변경되었고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은 보원판에서도 원판 그대로이다. 반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은 보원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뉘어졌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서 첫 번째 중영역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보원판에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로 명칭이 다소 변경되었으며, 소영역은 원판의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보원판에서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로 바뀌었고, ‘사적 소득보장 제도 확충’은 보원판에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으로 세부 과제에 있어서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는 2008년부터 경로연금 대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보원판에서는 원판에 있던 경로연금 확대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 추가된 점이다.

고령사회 부분 두 번째 중영역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에서는 원판

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으로, ‘노인 영양보호 기반 확충’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으로 바뀌었고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없어지고 ‘노인 권익 증진’이라는 소영역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소영역의 세부 과제에서는 원본에서 ‘노인 영양보호 기반 확충’ 소영역 과제였던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이 이 영역으로 이동했고 또한 원관의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소영역의 사업들이 대부분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의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세부 과제로 들어왔다. 두 번째 소영역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과제들이 재편되었고 새로 생긴 소영역인 ‘노인 권익 증진’은 원관의 세 번째 중영역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서 세 번째 소영역인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에 있던 것이 이동해 온 것이다.

고령사회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중영역인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원본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서 나뉜 것인데,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은 원본에서 소영역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의 내용이 다소 변경된 것이다. 즉, 원래의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 놓여준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이 없어지고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은 새로 들어왔다. 마지막 네 번째 중영역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주로 원본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소영역 과제들인데, 이에 더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신규 과제로 추가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대영역인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에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는 원본과 같지만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과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은 보완판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합쳐졌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중영역인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에서는 소영역이나 세부 과제들이 원판과 거의 같다. 다만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에서는 세부 과제로 ‘여

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이, 세부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나 '산업체 퇴직연구인력고용 지원', '외국인력 적정도입 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같은 것들이 추가되었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사업이 추가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원판의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과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부분은 보완판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통합되었으며, 원판이 대체로 초기 단계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면 보완판에서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제2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평가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은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이삼식의 200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는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와 성과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행계획의 자체 성과 평가 자료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개발한 성과평가지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전년에 수립한 목표 대비 실제 사업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성과지표 체계에 의한 평가는 대부분 사업 수행에 따라 합계출산율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실제로 당해 연도에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요성과, 예산집행, 성과목표 달성도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문(저출산 대영역),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부문(고령사회 대영역),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성장동력 대영역)의 각각 중영역에 포함된 세부 정책 및 사업이다.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전년도에 수립한 정책의 목표 및 예산을 당해 연도에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정책 실무자의 정책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는 중앙부처 총 67지표, 지자체 총 27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중앙부처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성장동력분야에 대해 각각 대표 성과지표, 중영역 성과지표, 소영역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수행 후 즉시 나타나는 결과

라기 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지표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3대 대영역에 대한 평가 외에도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다. 대표 성과 지표는 ‘저출산·고령사회 인식도’로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 각각에 대한 심각성과 본인연관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지표로서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한 점수를 이용하고 있다. 동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와 더불어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있다. 평가단에 의한 평가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지표 중 일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 자료 중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인프라(조직 등), 시행계획 추진 및 평가 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지자체 제출 실적이 현장에 존재하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 자체 정책(사업)에 대한 우수성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하고 지역사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한다. 전문가들이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여부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 각 개별 사업들의 중요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 전문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윤홍식(2006)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한국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기본계획이 합리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이 한국복지의 패러다임 즉 젠더관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와 정책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젠더 관점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평가하였다. 첫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 방향이 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화시킴으로써 부모가 돌봄 노동 이외의 다른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창출하는가,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보살피는자의 전형적 가구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지원하는가, 셋째,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직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가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서의 아동 양육과 관련된 휴가 정책은 낮은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기본계획에서의 아동보육정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가 공적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과 공적부문이 어떠한 비중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기본계획은 공적 보육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명도 없고 공적보육 확대를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아동이 있는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2009년 7월부터 도입이 시작된 양육수당제도에 대해서 동 제도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 재정 지원이 아닌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국가가 성별분업을 유지·강화시켜 젠더 관점에서 복지체제의 재편 과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양육수당제도는 장기적으로 여성에게

일과 돌봄이 양립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다가서게 함으로써 출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아버지 출산 휴가 제도는 단순히 형식적 대상 확대와 도입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소득과 적절한 기간을 보장하며, 부모의 노동시장과 사회 조건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진경(2005)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 중 출산 축하금 지급만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주거지원 강화,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 감면,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자녀 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는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세제 감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지적하였다. 향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양성평등문화정착, 가족 문화 조성의 순서대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녀 양육비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사회계층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형성과 결혼 및 가족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의식 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산전 후 휴가 및 육아 휴직의 확대에 대한 욕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동 제도들에 대한 내실화가 적극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인식도 선행 조사 결과

가. 국내 조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6~2008년 동안 매 해 수행되었다. 2006년에는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 영역별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500명 (2007년)과 2,000명(2008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007년 31.5%, 2008년 28.8%로 나타났다. 이는 2006~2008년 3개년 기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약 3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새로마지플랜 2010 핵심과제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은 2008년 37.9%로서 2006년 28.3%와 2007년 24.9%에 비해 정책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차등 및 전액 지원’,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수당 지원’, ‘임신·출산 관련 부담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가장 높아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와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도 역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방과후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 주는 경제적인 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세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저소득 노인 대상 기초노령연금 지급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알선 및 직업 교육 실시 대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국민 연금제도 내실화’와 ‘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도 역시 ‘국민 연금 제도 내실화’와 ‘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최근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으며 노후의 소득을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세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역모기지 제도’, ‘임금피크제’,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정부가 도입하였거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근로자 평생학습 및 직업 능력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적하였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도 역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나. 일본 ‘소자화 대책’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일본은 1989년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엔젤플랜(1995~1999년), 신엔젤플랜(2000~2004년), 아동·육아 응원플랜(2005~2009년)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을 법적인 기반 하에 추진하기 위해 2003년 7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을 기초로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을 마련하였다. 동 대강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진척상황과 그 결과, 출산율 동향을 매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각 플랜을 마무리하는 연도에는 정책의 목표를 재검토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각 플랜이 마무리되는 연도에 5년 간의 정책 진척 상황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대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 2009).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는 ‘소자화 대책에 관한 특별여론조사’와 ‘소자화 대책에 대한 이용자 의향 조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조사는 ‘이용자의 관점에 입각한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제4차 소자화 대책(2010~2014)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아동·육아 응원 플랜 (2005~2009)’ 추진 결과를 국민적 시각에서 평가한 2009년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1) 소자화 대책에 관한 특별여론조사 결과 (2009년 1월)

낮은 출생률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장래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가 83.0%로 나타나 2004년 조사의 76.7%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출산율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소자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연금 및 의료비 부담 등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76.1%, ‘노동력인구의 감소 등 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 62.4%, ‘사회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 41.3%, ‘육아에 대한 부담 등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39.6%로 지적하였다. 소자화의 급속한 진행은 세제 및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부담 증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 사회 및 경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2004년 조사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화 대책에서 특히 기대되는 정책(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무방식의 재검토 촉진’ 58.5%, ‘육아에서의 경제적 부담 경감’ 54.6%, ‘임신·출산의 지원’ 54.6%, ‘육아를 위한 안심, 안전한 환경정비’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과 생활의 양립지원과 근무방식의 재검토 촉진’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50%를 넘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2009년도 조사 결과의 특이한 점은 ‘임신·출산의 지원’이 2004년 조사보다도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 사회의 산부인과 및 분만시설의 감소와 산부인과의 출산 기피 및 산모 출산 수용처 부족 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한 임신·출산에 대한 대국민 우려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위한 안심, 안전한 환경정비’ 및 ‘지역에서의 육아지원’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육아 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소 부담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선진국가의 저출산 정책을 일본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입해야 한다’가 89.6%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 중심의 육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육아에 관한 고민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60.9%)’, ‘육아를 하는 부모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들기 활동(49.9%)’, ‘육아 가정의 가사를 지원하는 활동(41.0%)’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2004년도 조사 결과 보다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육아 부모의 교류 촉진 및 육아 등에 관한 상담·원조 등 지역 전체에서 육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편, 사회보장국민회의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8년 11월) 결과에 따르면 소자화 대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이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42.4%, ‘상응한 부담 증가는 어쩔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12.8%로 나타나 부담 증가를 용인하는 사람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자화 시책 이용자 의향조사 (2008년 12월 ~ 2009년 1월)

일본은 2008년 7월 ‘소자화 사회대책추진 점검·평가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소자화 사회대책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 서서 점검하고 평가함과 동시에 평가의 기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동 검토회의 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소자화시책

의 진척 상황 및 통계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용자의 실제 의식 및 감각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에 걸쳐, ‘이용자 의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소자화사회대책’에 나타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달성 및 정부의 움직임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무방식의 재검토’에 관한 항목의 평가가 낮았다. 가족 구성별로 보면 기혼이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의 평가가 낮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지방’보다 ‘도시부’의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저출산 정책을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달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 ① 봉사 활동 체험, 자연 체험, 사회 체험 활동 등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 ② 교육을 받을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가 경제적 이유로 수학을 단념해야 하는 일이 없는 사회, ③ 임신, 어린이 및 어린이 동반자가 배려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평가가 낮은 항목으로는 ① 청년이 의욕을 갖고 취업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 ② 희망자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 등을 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정비된 사회, ③ 육아기에 이직을 여지없이 하는 자의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육아가 일단락한 뒤의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한 사회, ④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상승함과 동시에, 육아기에 있는 남녀 장시간 근무가 시정되는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희망자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 등을 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정비된 사회’의 달성 평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무방식의 재검토’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의 달성 평가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지방이 도시보다도 평가가 긍정적인 추세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보육 정책’이 특히 도시보다 지방의 평가가 높은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저출산 정책이 농촌 등 주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조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의 합) 항목으로는 ① 충실한 장학금을 도모하는 움직임, ② 지역에서의 육아지원 거점 등 정비 및 충실한 기능을 도모하는 움직임, ③ 충실한 아동수당을 도모하고, 세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심화하는 움직임, ④ 육아 배리어 프리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 ⑤ 방과 후 대책을 충실히 하는 움직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정책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남성의 육아 참가촉진을 위한 부친 프로그램 등 보급의 움직임, ② 노동시간단축 등,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근무방식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의 움직임, ③ 임신·출산의 지원체제, 주산기 의료체제를 충실히 하는 움직임, ④ 임신·출산하더라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항목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 중 가장 정부가 실현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으로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아동 수당과 조세 지원 등 경제적 지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① 소아의료체제 확충 정책, ② 임신·출산 지원체제, 주산기의료체제 지원 정책, ③ 충실한 아동 수당 및 조세 지원 정책, ④ 근무시간단축 등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근무방식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의 움직임, ⑤ 임신·출산 하더라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를 제시하였다.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의 중요성

1.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정의 중요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전과 비교하여 정책을 추진한 후에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통계적인 수치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육아 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다면 인상 전과 비교하여 육아 휴직 이용률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파악될 수 있는 성과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향상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 때 정부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을수록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진욱, 2008).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기존에 수행하여 왔던 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약 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국민들의 체감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도한 자녀 보육·교육비와 일 가정 양립의 곤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유

발한 원인이 비단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은 그 중요도가 높은 반면 체감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탄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 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이 정책에 대해 어떠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 정책 입안자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체감도 및 우선 순위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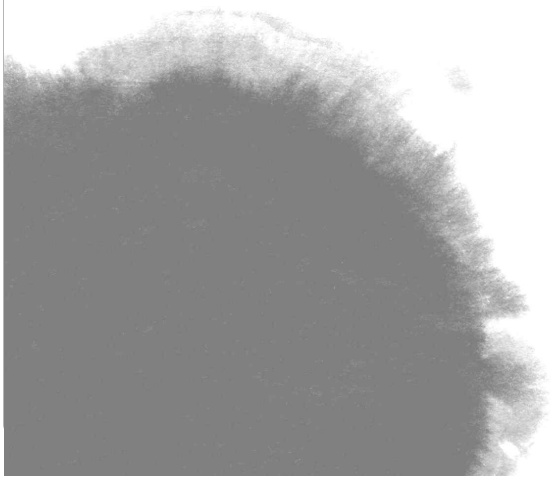
체감도(perception)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체감의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개인이 인식하는 실제치 간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ochberg, 1956; Law & Wong, 1999, 최진욱,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와 그 개인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정책 실행도와 차이로 정의내릴 수 있다. 만일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실행도가 낮다면 국민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체감도는 체감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식(schema)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개인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Axelrod, 197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경우, 과거 직간접적인 경험과 관찰에 의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및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개인은 정책 체감도를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개인에게 내재된 기억이나 지식은 인지도식이 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새로운 정보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인지도식과 얼마나 부합

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인지도식과 체감도는 유지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으며 혹은 약화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체감도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 과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작화를 통하여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차원적인 구성개념(multidimensional construct)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구성요인이나 결정요인을 쉽사리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감도의 구성요인과 결정요인은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Hochberg, 1956) 선행 연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차원에서 개인들의 직업 인지도 혹은 직업 체감도(job perception)는 과업 다양성, 과업 중요도, 자율성의 정도와 같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다(Salancik & Pfeffer, 1977). 정부 효율성에 대한 체감도는 예산의 효율성, 인력의 효율성,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해당 규제 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와 규제 개혁으로 인한 다양한 세부적 효과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측정하고 있다 (강인호, 2004; 최진욱 외 200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개요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개요

제1절 연구 방법론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개요

가. AHP 분석 개요

1970년 Saaty에 의해서 개발된 AHP 기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다.

AHP 기법은 평가요소간의 가중치를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최적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서 이해가 쉽고, 전문가의 주·객관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부합한다(고길관·하혜영, 2008). 이러한 장점을 가진 AHP는 최근 합리적인 대안 선택,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결정, 각종 사업의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다음 4단계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1) 1단계: 의사결정문제의 계층화(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이 단계는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요소들로 계층화하여 문

1) AHP 4단계과정은 조운주의 논문(AHP를 이용한 의복평가기준의 우선순위 분석, 2007)내 AHP 개요를 정리 요약한 것임.

제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이 놓여지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다. 이들 속성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 것일수록 구체적인 것이된다. 여기서 한 계층내의 각 요소들은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되어진다.

2) 2단계: 평가기준의 쌍별 비교(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s)

다속성 의사결정일 때는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를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AHP에서는 속성들을 두 개씩 뽑아 쌍별 비교를 한다. 어떤 계층에 있는 한 기준의 관점에서 직계하위계층에 있는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대상 기준들 간에 쌍별 비교를 행하고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쌍별 비교의 과정에서는 평가기준 등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정도를 먼저 어의적인 표현에 의하여 나타내고 이를 계량화 과정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하며 AHP에서는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쌍대비교는 다음과 같다.

$$A = \begin{pmatrix} 1 & a_{12} & a_{13} & \cdots & a_{1n} \\ a_{21} & 1 & a_{23} & \cdots & a_{2n} \\ a_{31} & a_{32} & 1 & \cdots & a_{3n} \\ \vdots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a_{n1} & a_{n2} & a_{n3} & \cdots & 1 \end{pmatrix}$$

3) 3단계: 가중치의 추정(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한 계층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n 개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w_i (i = 1, \dots, n)$ 라 하면, 쌍별 비교행렬에서의 a_{ij} 는 $w_i/w_j (i, j = 1, \dots, n)$ 로 추정할 수 있으며, a_{ij} 와 w_i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a_{ij} = w_i/w_j (i, j = 1, \dots, n)$$

$$\sum_j^i a_{ij} \cdot w_j \cdot 1/w_i = n (i, j = 1, \dots, n)$$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sum_j^i a_{ij} \cdot w_j = n \cdot w_i (i, j = 1, \dots, n)$$

위 식은 선형대수론에서의 고유치 문제와 같다. 즉, 요소 a_{ij} 로 구성되는 행렬 A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A = \begin{pmatrix} \frac{w_1}{w_1} & \frac{w_1}{w_2} & \frac{w_1}{w_3} & \dots & \frac{w_1}{w_n} \\ \frac{w_2}{w_1} & \frac{w_2}{w_2} & \frac{w_2}{w_3} & \dots & \frac{w_2}{w_n} \\ \frac{w_3}{w_1} & \frac{w_3}{w_2} & \frac{w_3}{w_3} & \dots & \frac{w_3}{w_n} \\ \vdots & \vdots & \vdots & \dots & \vdots \\ \frac{w_n}{w_1} & \frac{w_n}{w_2} & \frac{w_n}{w_3} & \dots & \frac{w_n}{w_n} \end{pmatrix}$$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A \cdot w = n \cdot w$ (여기서, $w = [w_1, w_2, w_3, \dots, w_n]$ 은 행렬 A 의 우측 고유 벡터임)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w 를 모르며 평가자에 의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w 를 추정한다.

쌍대비교행렬 A 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 w 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을 A' 라 하고 이 행렬의 가중치 추정치 w'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구한다.

$$A' \cdot w' = \lambda_{\max} \cdot w' \text{ (여기서 } \lambda_{\max} \text{는 행렬 } A' \text{의 가장 큰 고유치를 말함)}$$

그러나 쌍대비교행렬에서 응답자가 각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는 쌍대비교 행렬 A' 의 정합성이 낮아 w' 의 추정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Saaty는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일관성 지수(CI)는 $\frac{\lambda_{\max} - N}{N - 1}$ 에 의해 계측되며, 쌍대비교행렬이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0이며 일관성이 적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일관성비율(CR)은 $\frac{CI}{R}$ 로
계측되는데 쌍대비교행렬의 CI를 계산하여 무작위 일관성지수(R)로 나눈 값이다.

4) 4단계: 가중치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대안의 종합적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및 상대적인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나. AHP 분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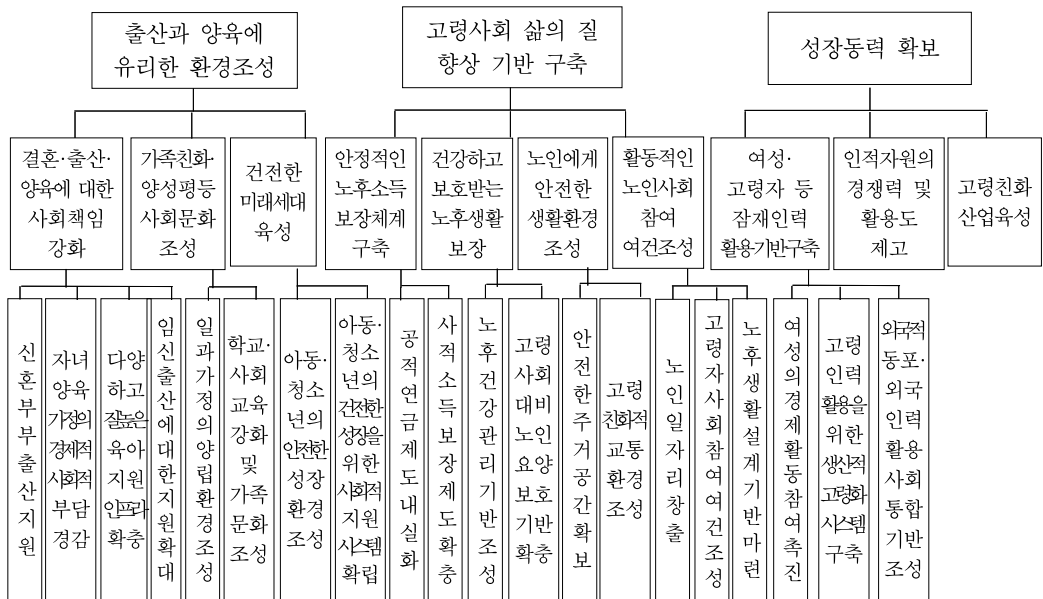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AHP 분석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
인들을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 집단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AHP는 이론의 단순성,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성으로 여러 의사결정분야에서 응용되며 점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부산시내 거주자 중 특
1등급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50명을 대상으로 호텔 레스토랑 선택
속성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이정실의 연구(2006)와 부산거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의복 구매시 의복평가기준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조윤주의 연구(2007) 등이 있다.

AHP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자 전원(25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세가지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대영역내 중영역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영역
내 소영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는
2006년도에 도입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08년도에 제
시한 기본계획 보완판의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에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세가지 대영역의 모든 중영역 사업과 소영역 사
업이 포함된다. 단,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중영역 사업인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
용도 제고’와 ‘고령친화산업육성’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소영역 사업 내용이 전문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동 두 중영역 사업에 대해서는 소영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지 않았다²⁾.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구조는 [그림 3-1]과 같으며 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기준의 쌍별 비교를 위한 척도로는 Saaty가 제안한 9 점 척도 대신 3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명과 정책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부록 5 설문지 참조).

[그림 3-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



AHP 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³⁾을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의 소영역 사업으로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가 포함되며, ‘고령친화산업육성’의 소영역 사업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이 포함된다 (2008년도 기본계획 보완판).

3) 정책 A, 정책 B, 정책 C를 비교함에 있어 정책 A가 정책 B보다 2배 더 중요하고, 정책 B가 정책 C보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조운주, 2007). Saaty(1982)는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이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0.2이하이면 가용범위의 일관도라 칭하며 특히, 0.1이하이면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일관성 지수 0.1이하(고위 일관성 가정) 및 일관성 지수 0.2 이하(저위 일관성 가정)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관성 지수 0.1 이하 집단과 일관성 지수 0.2 이하 집단별로 우선 순위 및 중요도 점수(가중치) 크기에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각 샘플수는 〈부표 2〉 참조,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이에 본 고에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영역 사업과 소영역 사업을 비교함에 있어 일관성 지수 0.1 이하를 모두 만족시킨 응답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최종 우선순위는 전체 응답자를 포함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우선 순위 비교를 제시하였으며 우선순위는 STATA 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방법 개요

가. IPA 분석 개요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IPA)은 제공되는 서비스나 추진사업의 중요 속성들에 대하여 중요도(importance) 및 실행도(performance)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서 개발된 기법이다.

IPA는 〈그림 3-2〉와 같이 평가요소의 중요도(importance)와 실행도(performance)를 측정하여 2차원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하면 IPA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분면에 대해 각각 ‘유지’, ‘과잉’, ‘저순위’, ‘집중’으로 표시하는데 ‘유지’에 표시된 평가

다 2배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정책 A는 정책 C에 비해 4배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완전한 일관성 CR=0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가 0.1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 A가 정책 C에 비해 4배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에 있어 10%의 편차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속성은 중요도가 높고, 실행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의미하며 ‘과잉’면에 표시된 평가속성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 과잉 실행된 상태이므로 실행을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중단하여도 좋을 의미를 의미한다. 한편, ‘저순위’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은 상태이며, 의사결정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집중’면에 표시된 평가속성은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향후 개선의 집중 대상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4개 분면을 통해서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속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IPA 매트릭스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집중’면에 속한 항목들이 개선의 우선 대상이 된다(최기중, 박상현, 2001).

[그림 3-2] IPA 도표

중요도(고)

<div>집중</div> <div>(Concentrate Here)</div>	<div>유지</div> <div>(Keep up the Good Work)</div>
<div>저순위</div> <div>(Low Priority)</div>	<div>과잉</div> <div>(Possible Overkill)</div>

중요도(저)

실행도(저)

실행도(고)

자료: Martilla and James(1977)

IPA에서 중심점은 평가요소가 어떤 영역에 속하게 될지를 구분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한데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 척도의 중앙값, 2) 표준편차에 의한 계산, 3) 평균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앙값, 4) 임의적인 방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척도의 중앙값을 중심점으로 하는 방법은 평가 요소가 전체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속성들이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어떤 속성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표준편차에 의한 계산방법은 5점 척도에서 표준편차 2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중앙값 또는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결정하는데, 분포의 형태를 수치로 판단하고 중심점을 결정하게 된다. 평균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우선 각 평가속성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IPA 매트릭스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심점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앙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최기종, 박상현, 2001).

나. IPA 분석 적용

AHP 분석과는 달리 유의미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해 각 세부 영역 사업의 대상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연령 그룹에 한하여 해당 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 정도를 질문하였다. AHP에 의한 우선 순위 조사 질문과 마찬가지로 IPA 질문에 대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영역 정책의 명칭을 쉽게 풀어 사용하였다(부록 5 설문지 참조). 해당 정책별 조사 대상지는 <표 3-1> 과 같다.

중요도와 실행도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영역 사업에 한하여 5점 척도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주요 분석들은 크게 빈도 분포 분석, mapping 분석 그리고 집단별 t-test 분석이다. 빈도 분포 분석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응답 빈도를 전체, 성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분석하였고 mapping 분석에서는 세부 영역 사업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4분면상에 위치시켜 각 정책이 4분면상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중심점은 세부 영역 사업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으로 이용하였다.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으로써 소영역 간의 비교와 함께 같은 소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단, 정책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 분야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과 고령화 분야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조성’의 중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그룹으로 도식화하였다. 집단별 t-test 분석에서는 성, 지역, 소득 수준별 집단 간 중요도 및 실행도 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IPA와 관련된 모든 분석은 SPSS 12.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주요 내용 및 분석 대상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 이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	△		
			양육수당 지원	○	△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		
			야간 보육 활성화	○	△		
			시간제 보육 활성화	○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불임부부 지원	○	△		
			산모도우미 지원	○	△		
	가족 친화 양성 평등 사회 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	○	○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	○	
			기초노령연금 확대		○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	○	○	
			개인연금 활성화	○	○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	○	○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	○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	○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조성	노인 일자리 창출			○	○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
		노인요양보호 기반 마련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

〈표 3-1〉 계속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외국적 동포의 활용	○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		

주: △표시는 40~44세임.

제2절 조사 방법론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전국 6,000가구의 만 25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한 600개의 조사구와 123개의 예비조사구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한 후, 컴퓨터(노트북)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48일간이다.

본 조사에 앞서 5월 14일 서울사무소 면접원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5월 15일 부산, 5월 18일 광주, 5월 19일 대전, 5월 20일 대구 순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총 103명의 면접원을 대상으로 면접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이후 5월 15일부터 보완조사가 마무리된 7월 1일까지 총 48일간 전국 6,285표본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클리닝 후 지역, 성, 연령 인구수에 비례하는 표본 비율에 따라 최종 6,189명을 최종 분석 대상 샘플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제 분석대상은 총 6,189명이다. 조사구 지역에서의 실사, 조사 자료 수집 및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주)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2. 주요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목적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정책 우선순위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조사의 설문은 총 5가지 영역, 즉, A.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B.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평가, C.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평가, D.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대안 평가, E. 통계분류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

부 문	내 용		
A. 저출산 ·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2)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평가 및 영향도 (3)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평가 및 영향도 (4)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도나 광고홍보물 노출 빈도 및 내용 (5) 결혼 및 자녀 필요성 (6) 직장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평가 (7)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 (8) 노후준비 관심도 및 준비에 대한 인식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예상효과 (10) 출산과 양육 친화 문화 확산에 대한 평가		
B.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도, 실행도 평가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정책 (2) 가족친화·양성 평등 사회 문화 조성 정책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정책 (4)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정책 (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정책 (6)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7)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 정책 (8)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정책 (9)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정책		
C.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우선순위 평가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 (2)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정책 (3) 가족친화·양성 평등 사회 문화 조성 정책 (4)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정책 (5)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 (6)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정책 (7)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정책 (8)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9)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 정책 (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정책 (11)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정책 (12)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정책		
D.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대안 평가	(1)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2) 출산 및 양육지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3) 양육수당 혜택범위나 대상 확대 방안 (4) 맞벌이 가정 보육비 지원 방안 평가 (5) 둘째 자녀 양육지원 확대 방안 평가 (6) 기초노령연금제 변화 방향 (7)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8)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내용 포함 방안 평가		
E. 통계분류를 위한 사항	<table border="1"> <tr> <td>(1) 가구원수 (3) 혼인 상태 (5) 자녀수 (7) 보육시설 및 사교육 시설 이용 실태 (9) 자녀 출산 계획 (11)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13) 맞벌이 여부 (15)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여부 (17)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여부 (19) 건강상태 (21) 학력</td> <td>(2) 가족 구성 (4) 결혼 년수 (6) 자녀의 연령, 성별, 취학상태 (8) 월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 (10) 직업 (1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인식 (14) 취업의향 (16) 정부지원 경험 여부 (18) 보건소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여부 (20) 생활만족도 (22) 가구총수입</td> </tr> </table>	(1) 가구원수 (3) 혼인 상태 (5) 자녀수 (7) 보육시설 및 사교육 시설 이용 실태 (9) 자녀 출산 계획 (11)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13) 맞벌이 여부 (15)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여부 (17)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여부 (19) 건강상태 (21) 학력	(2) 가족 구성 (4) 결혼 년수 (6) 자녀의 연령, 성별, 취학상태 (8) 월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 (10) 직업 (1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인식 (14) 취업의향 (16) 정부지원 경험 여부 (18) 보건소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여부 (20) 생활만족도 (22) 가구총수입
(1) 가구원수 (3) 혼인 상태 (5) 자녀수 (7) 보육시설 및 사교육 시설 이용 실태 (9) 자녀 출산 계획 (11)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13) 맞벌이 여부 (15)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여부 (17)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여부 (19) 건강상태 (21) 학력	(2) 가족 구성 (4) 결혼 년수 (6) 자녀의 연령, 성별, 취학상태 (8) 월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 (10) 직업 (1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인식 (14) 취업의향 (16) 정부지원 경험 여부 (18) 보건소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여부 (20) 생활만족도 (22) 가구총수입		

3. 표본 설계

가. 모집단 및 추출틀의 정의

조사목적상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 수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모집단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거주유형, 학력, 성별, 주택소유형태 등의 분포를 파악하고, 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사구 유형중에서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등의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목표모집단 : 2009년 4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섬, 특수시설 조사구 제외)
- 추출틀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 리스트(섬, 특수시설 조사구 제외)

나. 표본의 규모

표본의 규모는 전국 600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10가구를 조사하며 가구당 연령대를 지정하여 1명만을 조사함으로서 총 6,000명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는 모비율(만족도)을 최대 0.5로 상정할 경우 허용오차 0.01291을 만족하는 규모로서 다음의 산식으로부터 계산된다.

$$n = \frac{t_{\alpha/2}^2 PQ}{d^2}$$

여기서 d 는 목표허용오차, P 는 모비율, $Q=1-P$ 이다.

다. 표본의 대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2009년 현재 신도시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부재 및 거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층에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

여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의 경우 가구단위 조사가 아닌 개인단위 조사로서 조사관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 및 가구를 1차 및 2차추출단위로 고려한다. 따라서 최종 조사단위는 개인으로서 개인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사구별 연령대 분포를 감안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추출단위는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지역별로 계통추출하여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즉,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16개 특광역시)과 동부 및 읍면부로 층화하고, 내재적 층화를 위해 조사구 유형에 따라 정렬한 후 표본조사구를 확률비례 추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본조사구 내의 가구는 조사구당 동일한 규모로 10개 가구를 단순임의 추출하여 표본가구의 가구원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만일 표본가구 내에서 해당자가 없는 경우 나머지 가구로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10가구가 조사되도록 하였다.

〈표 3-3〉 층화 기준

표본추출단위	층화 변수	표본추출방식	표본수
조사구	1) 지역(16개 시도 및 동부와 읍면부) 2) 조사구 유형(일반, 아파트)	층화 확률비례 추출	600개 조사구
개인(가구)	1) 연령대(25~39, 40~54, 55~64, 65세이상) 2) 성별(남, 여)	단순임의 추출	6,000명

마. 표본규모의 결정

표본규모는 전국 600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며, 추출된 가구내에서 연령대별로 1인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표 3-3>에서 정의한 층화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사구별 연령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층별 표본을 배분하도록 한다. 이는 추후 추정산식을 제시할 때 자체

가중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 25세 이상 성인 남녀의 비율에 따라 조사구 및 가구를 배분한 결과가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지역별 조사구 및 가구 표본배분

지역	조사구			가구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600	482	118	6,000	4,820	1,180
서울	128	128	-	1,280	1,280	-
부산	46	45	1	460	450	10
대구	31	29	2	310	290	20
인천	31	30	1	310	300	10
광주	17	17	-	170	170	-
대전	17	17	-	170	170	-
울산	13	11	2	130	110	20
경기	129	105	24	1,290	1,050	240
강원	19	11	8	190	110	80
충북	18	11	7	180	110	70
충남	24	8	16	240	80	160
전북	23	15	8	230	150	80
전남	24	10	14	240	100	140
경북	34	17	17	340	170	170
경남	39	23	16	390	230	160
제주	7	5	2	70	50	20

다음으로 지역별로 배분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연령대 비율에 따라 가구 당 1인을 조사하므로 결과적으로 가구내 개인의 연령에 따라 표본을 재 배분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서울 및 광주, 대전지역은 읍면지역이 없기 때문에 표본 이 배분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별로 25세 이상 가구원 비 율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개인 표본에 대해서는 총 6,000명에 대해 지역별, 연령대별로 배분된 <표 3-5> 로부터 최종적으로 각 지역별, 연령대별 성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표 3-5〉 지역별*연령별 표본배분

(단위: 명)

지역	계	동부					읍면부				
		계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 이상	계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국	6,000	4,820	1,940	1,720	630	530	1,180	310	350	210	310
서울	1,280	1,280	520	440	180	140	-	-	-	-	-
부산	460	450	150	170	70	60	10	-	-	-	10
대구	310	290	110	110	40	30	20	10	10	-	-
인천	310	300	130	110	30	30	10	-	-	10	-
광주	170	170	70	60	20	20	-	-	-	-	-
대전	170	170	70	70	20	10	-	-	-	-	-
울산	130	110	50	40	10	10	20	10	10	-	-
경기	1,290	1,050	450	380	110	110	240	90	70	40	40
강원	190	110	40	40	10	20	80	20	30	10	20
충북	180	110	40	40	20	10	70	20	20	10	20
충남	240	80	30	30	10	10	160	40	50	30	40
전북	230	150	60	50	20	20	80	10	20	20	30
전남	240	100	40	30	20	10	140	30	30	30	50
경북	340	170	70	60	20	20	170	40	50	30	50
경남	390	230	90	80	40	20	160	40	50	30	40
제주	70	50	20	10	10	10	20	-	10	-	10

바. 추정 방법

1) 가중치의 계산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의 경우 약 237천여개의 조사구로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600개 조사구를 층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함으로써 각 조사구당 추출확률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와같이 1차 추출단위들의 추출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가중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최종가중치는 3가지 가중치의 곱으로 표현된다. 단, 본 조사는 개인 가중치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가구가중치를 개인가중치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비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 기본가중치 : w_k
- 무응답 가중치 : $w_k^{(r)}$

- 사후층화 조정가중치 : w_{post_k}

즉, 최종 가중치(W_k)는 $W_k = w_k \times w_k^{(r)} \times w_{post_k}$ 으로 표현된다.

2) 추정치의 계산

정책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추정식에 필요한 기호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dots, L$)
-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i = 1, \dots, n$)
- j :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j = 1, \dots, m_h$)
- N_h : h 층의 모집단 크기
- n_h : h 층의 표본 조사구수
- m_{hi}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가구수(=10)
- $n = \sum_{h=1}^L n_h$: 총 표본 조사구수
- $N = \sum_{h=1}^L N_h$: 총 모집단 크기
- y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관찰값
-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정책만족도 및 복지욕구 등의 주요 변수에 대한 전국 단위의 평균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hat{\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quad (1)$$

여기서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이며, i 는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W_{hij} 는 h 층의 i 번째 표본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이다.

표본평균 $\hat{\bar{Y}}$ 의 분산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hat{V}(\hat{Y}) = \sum_h^L \frac{n_h}{(n_h - 1)} (1 - f_h)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2)$$

여기서 $e_{hi.} = \sum_{j=1}^{m_{hi}} W_{hi} (y_{hij} - \hat{Y}) / \sum_h^L \sum_i^{n_h} \sum_{j=1}^{m_{hi}} W_{hij}$,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한편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다.

$$\hat{CV}(\hat{Y}) = \frac{\sqrt{\hat{V}(\hat{Y})}}{\hat{Y}} \times 100(\%) \quad (3)$$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이 49.2%, 여성이 50.8%로 남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분포는 25~39세가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54세가 35.5%, 55~64세가 13.8%, 65세 이상이 15.2%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동부(도시)가 83.4%로 읍·면부(농촌)의 16.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경제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7.9%, 대학교 재학 이상이 36.1%, 중졸 이하가 25.7%로 대상자의 74%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관리/전문직 20.0%, 판매/서비스직 19.6%, 생산/기능/노무직 16.4%, 주부 25.3%, 무직/퇴직/군인 10.8%, 학생이 2.2%로 40% 정도가 미취업자였고 61.6%는 취업자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대가 19.5%, 200만원대가 25.6%, 300만원대가 16.5%로 전체 응답자의 60%가 100~300만원대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조사 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4인 가구의 비율이 35.3%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의 비율은 9.8%로 가장 낮았다. 가구 구성은 2세대 가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3.4%로 가장 많았고 1세대 가구의

4) 본 연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에는 가구원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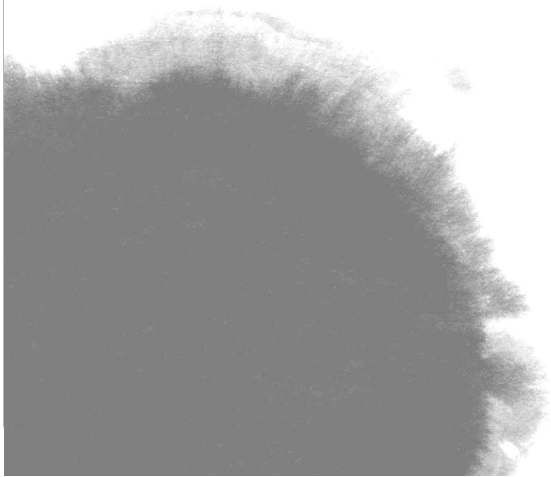
비율은 26.3%, 3세대 가구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기혼자가 75.8%, 미혼자가 13.4%였으며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는 10.8%였다. 결혼을 한 사람 중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16.5%,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41.3%,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2.8%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였다.

〈표 3-6〉 응답자 특성 빈도 분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3,048	49.2	가구원수	1명	609	9.8
	여성	3,141	50.8		2명	1,217	19.7
연령	25~39세	2,190	35.4		3명	1,318	21.3
	40~44세	812	13.1		4명	2,185	35.3
	45~54세	1,387	22.4		5명 이상	860	13.9
	55~64세	857	13.8	가구구성	1세대가구	1,631	26.3
	65세 이상	943	15.2		2세대가구	3,922	63.4
학력	중졸이하	1,588	25.7		3세대가구	578	9.3
	고졸	2,343	37.9	혼인상태	기타	59	1.0
	대학 재학 이상	2,237	36.1		미혼	828	13.4
	모름/무응답	21	.3		기혼	4,690	75.8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1,240	20.0	이혼/별거/사별		670	10.8
	판매/서비스직	1,216	19.6	자녀수	0명(미혼 포함)	1,201	19.4
	농/임/어업	346	5.6		1명	1,024	16.5
	생산/기능/노무직	1,017	16.4		2명	2,554	41.3
	주부	1,566	25.3		3명 이상	1,410	22.8
	학생	134	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59	31.7
	무직/퇴직/군인	670	10.8		외벌이	2,731	44.1
				배우자 없음		1,499	24.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12	13.1	거주지역	동부	5,159	83.4
	100~199만원	1,209	19.5		읍면부	1,030	16.6
	200~299만원	1,583	25.6	전체		6,189	100.0
	300~399만원	1,024	16.5				
	400~499만원	691	11.2				
	500만원 이상	508	8.2				
	모름/무응답	361	5.8				

주: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제1 절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본 절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 인지 정도, 저출산 고령화 관련 뉴스나 광고, 홍보물 등에 대한 접촉 정도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부터 결혼관이나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 새로마지 플랜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응답이 49.7%로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상당히 관심 있다’를 합해 관심 있다는 응답이 64.3%로 관심 없다는 응답 35.6%에 비해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 성별로는 여성이,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경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심 있다’는 응답은 동부가 64.6%로 읍면부 62.7%보다 약간 높았지만 ‘상당히 관심 있다’는 응답은 읍면부가 18.4%로 동부 13.8%보다 4.6%p 높았다.

〈표 4-1〉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구분	전혀 관심없다	별로 관심없다	어느정도 관심있다	상당히 관심있다	계	(명)	χ^2
전체	3.5	32.1	49.7	14.6	100.0	(6,189)	
연령							
25~39세	3.9	36.3	51.1	8.7	100.0	(2,189)	
40~44세	2.8	32.9	50.3	13.9	100.0	(811)	
45~54세	2.5	30.3	50.1	17.1	100.0	(1,388)	135.08***
55~64세	3.6	27.1	50.4	18.9	100.0	(857)	
65세 이상	4.8	29.0	45.0	21.2	100.0	(944)	
성							
남성	3.2	33.7	48.1	15.0	100.0	(3,048)	
여성	3.8	30.7	51.3	14.2	100.0	(3,141)	9.55*
지역							
동부	3.3	32.0	50.8	13.8	100.0	(5,159)	
읍면부	4.5	32.8	44.3	18.4	100.0	(1,030)	23.3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0	33.9	44.4	17.7	100.0	(1,359)	
150~399만원	3.6	33.1	51.1	12.2	100.0	(3,269)	71.02***
400만원 이상	1.8	26.0	55.2	17.1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및 본인 연관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83.5%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5/6 정도가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1/6 정도인 16.5%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08년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보건복지가족부·월드리서치, 2008)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10.7%p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2%p가 증가했다. 특히, ‘상당히 심각하다’는 응답은 2009년 31.5%로, 2008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14.7%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많아졌다⁵⁾.

인구 집단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경우, 읍면부인 경우 ‘상당히 심각하다’는

5) 2008년 조사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의 5점 척도인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보통이다’가 빠진 4점 척도이므로, 결과를 판단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음.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경우 대체로 다산 문화에 있던 세대였기 때문에 최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읍면부인 경우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로 마을에서 젊은 세대나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본 조사 결과 자녀수가 적었기 때문에(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78명, 150~399만원 1.92명, 400만원 이상 1.89명, $F=251.23$, $p<.001$)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2〉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단위: %, 명)							
구분	전혀심각 하지않다	별로심각 하지않다	어느정도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계	(명)	χ^2
전체	.9	15.6	52.1	31.5	100.0	(6,189)	
연령							
25~39세	1.1	20.1	55.1	23.6	100.0	(2,189)	
40~44세	1.4	12.9	55.4	30.3	100.0	(812)	
45~54세	.6	14.1	49.3	36.0	100.0	(1,388)	156.35***
55~64세	.6	11.8	53.0	34.6	100.0	(858)	
65세 이상	.5	12.7	45.3	41.5	100.0	(943)	
성							
남성	1.1	15.6	50.8	32.5	100.0	(3,048)	6.09
여성	.7	15.5	53.2	30.6	100.0	(3,141)	
지역							
동부	.9	15.6	53.5	30.0	100.0	(5,159)	35.23***
읍면부	.6	15.4	45.0	39.0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	16.0	47.7	35.8	100.0	(1,360)	
150~399만원	.9	16.5	53.8	28.7	100.0	(3,269)	46.02***
400만원 이상	.6	11.3	54.2	34.0	100.0	(1,200)	

† $p<0.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7.6%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2.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인식 조사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3%,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11.6%, 보통이라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본

조사에서 21.2%로, 2008년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 12.1%에 비해 9.9%p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에 비해 25~54세가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몇십 년 후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별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왔다.

〈표 4-3〉 저출산 현상의 본인연관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임	상당히 영향을 미칠것임	계	(명)	χ^2
전체	1.1	21.3	56.4	21.2	100.0	(5,172)	
연령							
25~39세	.8	17.5	60.3	21.4	100.0	(1,724)	
40~44세	1.3	19.7	56.2	22.8	100.0	(696)	
45~54세	.4	18.3	56.4	24.9	100.0	(1,183)	120.24***
55~64세	.8	27.0	54.9	17.3	100.0	(751)	
65세 이상	2.9	30.0	49.6	17.5	100.0	(818)	
성							
남성	1.1	20.0	56.8	22.1	100.0	(2,539)	
여성	1.1	22.6	56.0	20.3	100.0	(2,633)	5.90
지역							
동부	1.2	20.6	57.4	20.8	100.0	(4,308)	
읍면부	.9	24.9	51.0	23.2	100.0	(865)	13.7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1	26.1	54.3	17.5	100.0	(1,135)	
150~399만원	.9	21.0	57.8	20.3	100.0	(2,699)	82.46***
400만원 이상	.6	13.8	58.6	27.0	100.0	(1,058)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및 본인 연관성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8%로 저출산보다 6.3%p가 높아 저출산보다는 고령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77%,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보통이라는 응답이 18.6%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는 응답은 17.2%,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9.8%, ‘보통이다’는 응답은 18.6%,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3.9%,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0.6%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보다 고령화에 대해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인 경우,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상당히 심각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거나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화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단위: %, 명)

구분	전혀심각 하지않다	별로심각 하지않다	어느정도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계	(명)	χ^2
전체	.6	9.6	49.0	40.8	100.0	(6,189)	
연령							
25~39세	.7	12.3	55.1	31.8	100.0	(2,190)	
40~44세	.6	8.1	52.2	39.0	100.0	(812)	
45~54세	.9	7.9	45.4	45.9	100.0	(1,387)	154.52***
55~64세	.1	7.9	46.0	46.0	100.0	(857)	
65세 이상	.3	8.4	40.3	51.0	100.0	(943)	
성							
남성	1.0	10.7	50.7	37.6	100.0	(3,049)	40.39***
여성	.3	8.5	47.4	43.9	100.0	(3,142)	
지역							
동부	.6	9.5	50.0	39.9	100.0	(5,159)	
읍면부	.9	10.1	44.0	45.0	100.0	(1,030)	13.6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3	10.2	44.9	43.7	100.0	(1,360)	
150~399만원	.4	10.0	51.3	38.3	100.0	(3,269)	48.00***
400만원 이상	.3	6.2	49.6	43.9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8.6%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 저출산보다 11%p나 높게 나타났다. 즉, 저출산보다 고령화 현상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본인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저출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거나, 자녀를 낳을 연령층을 벗어났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 저출산 문제는 후대의 문제이지 본인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매우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19%, ‘관련이 있는 편이다’가 59.7%, ‘보통이다’가 16.8%, ‘관련이 없는 편이다’가 4.1%, ‘전혀 관련이 없다’가 0.4%로 나타났다.

인구 집단별로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 고령화 현상의 본인연관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미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별로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지금보다는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에서 더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은 경우 본인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고령화 현상의 본인연관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임	상당히 영향을 미칠것임	계	(명)	χ^2
전체	.4	11.0	57.3	31.3	100.0	(5,559)	
연령							
25~39세	.6	9.6	61.3	28.5	100.0	(1,904)	62.55***
40~44세	.1	8.0	60.0	31.9	100.0	(740)	
45~54세	.1	10.7	55.1	34.2	100.0	(1,267)	
55~64세	.8	12.1	54.9	32.2	100.0	(788)	
65세 이상	.7	16.1	51.3	31.8	100.0	(861)	
성							
남성	.3	11.4	58.3	30.0	100.0	(2,691)	7.94*
여성	.6	10.6	56.3	32.5	100.0	(2,867)	
지역							
동부	.4	10.6	57.2	31.8	100.0	(4,643)	6.12
읍면부	.7	12.7	57.8	28.9	100.0	(9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	11.6	57.5	30.5	100.0	(1,203)	42.70***
150~399만원	.5	11.0	59.7	28.9	100.0	(2,930)	
400만원 이상	.1	6.9	55.1	37.8	100.0	(1,123)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매체 접촉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어느 정도 봤냐는 질문에 ‘한두번’이나 ‘서너번’ 보았다는 응답이 각각 30.4%, 31.2%로 30%를 약간 상회했고 ‘다섯번 이상’이라는 응답도 2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본적 없다’는 응답은 11%로, 90% 정도의 사람들이 한두번 이상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V뉴스나 신문 기사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인구 집단별로는 연령대가 어린 경우, 남성인 경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저출산·고령화 관련 TV 뉴스나 신문 기사에 대한 접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V뉴스/신문기사 접촉정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본적없음	한두번 보았음	서너번 보았음	다섯번 이상 보았음	계	(명)	χ^2
전체	11.0	30.4	31.2	27.3	100.0	(6,189)	
연령							
25~39세	8.8	30.7	32.5	28.0	100.0	(2,190)	
40~44세	6.5	28.4	35.1	29.9	100.0	(812)	
45~54세	9.4	28.0	31.4	31.1	100.0	(1,388)	169.42***
55~64세	13.1	30.2	31.6	25.1	100.0	(857)	
65세 이상	20.6	35.1	24.4	19.9	100.0	(942)	
성							
남성	10.5	28.0	31.4	30.1	100.0	(3,048)	
여성	11.5	32.8	31.1	24.6	100.0	(3,141)	29.81***
지역							
동부	9.8	29.3	32.1	28.7	100.0	(5,159)	
읍면부	17.2	35.8	26.7	20.3	100.0	(1,029)	84.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7.1	36.5	26.6	19.9	100.0	(1,358)	
150~399만원	10.2	31.0	32.2	26.6	100.0	(3,269)	169.98***
400만원 이상	6.6	23.9	34.5	35.0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본적 없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한두번 보았다’는 응답은 31.7%, ‘서너번 보았다’는 응답은 18.2%, ‘다섯번 이상 보았다’는 응답은 12.4%로 빈도가 점점 낮아져,

한두 번 이상 본 경우가 62.3%로 TV 뉴스나 신문기사보다 접촉 정도가 낮았다. 즉,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광고나 홍보물 보다는 TV뉴스나 신문기사로 더 많이 접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 남성인 경우, 동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나 홍보물에 접촉한 빈도가 높아, TV뉴스나 신문기사에 대한 접촉 응답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4-7〉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홍보물 접촉정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본적없음	한두번 보았음	서너번 보았음	다섯번 이상 보았음	계	(명)	χ^2
전체	37.7	31.7	18.2	12.4	100.0	(6,189)	
연령							
25~39세	32.8	35.2	19.8	12.2	100.0	(2,190)	159.19***
40~44세	32.1	33.5	20.7	13.7	100.0	(811)	
45~54세	36.5	30.3	17.8	15.4	100.0	(1,388)	
55~64세	40.1	29.6	19.3	11.0	100.0	(857)	
65세 이상	53.7	26.0	11.8	8.6	100.0	(943)	
성							
남성	36.0	31.6	19.3	13.1	100.0	(3,048)	11.42**
여성	39.4	31.9	17.0	11.7	100.0	(3,140)	
지역							
동부	35.5	32.4	18.6	13.4	100.0	(5,159)	73.67***
읍면부	48.6	28.2	15.9	7.3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0.3	28.6	13.4	7.8	100.0	(1,359)	165.13***
150~399만원	35.8	32.8	19.1	12.2	100.0	(3,270)	
400만원 이상	27.9	33.9	21.9	16.4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나 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종류에 대해서는 TV광고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많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광고나 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의 91.9%가 TV광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던 것은 인터넷 사이트(24.6%), 홍보 팜플렛이나 홍보 책자(20.9%)였다.

연령대별로는 젊은층은 ‘인터넷 사이트’나 ‘지하철·버스 광고’에 대한 비율이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비해 높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TV 광고’에 대한 비율이 월등

히 높고 다른 종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자인 경우 ‘지하철·버스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응답 비율이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하철·버스 광고’, ‘홍보 팜플렛·홍보책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본 경험이 있었다.

〈표 4-8〉 지난 6개월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본 광고/홍보물 종류¹⁾

(단위: %, 명)

구분	TV광고	라디오광고	지하철· 버스광고	홍보팜플렛 ·홍보책자	인터넷 사이트	전광판· 옥외광고	(계)
전체	91.9	17.5	15.1	20.9	24.6	6.9	(3,855)
연령							
25~39세	88.1	18.8	19.8	20.0	40.8	6.3	(1,472)
40~44세	92.4	19.7	14.3	24.3	28.0	6.2	(551)
45~54세	93.2	17.5	13.4	23.3	17.6	8.9	(882)
55~64세	96.2	17.0	13.2	17.9	6.7	7.0	(513)
65세 이상	96.8	10.9	5.6	18.3	1.3	5.6	(437)
성							
남성	90.7	19.5	13.8	20.5	28.0	7.3	(1,950)
여성	93.2	15.5	16.3	21.3	21.2	6.6	(1,905)
지역							
동부	92.2	16.9	16.5	20.9	25.8	7.5	(3,326)
읍면부	91.1	21.3	6.0	21.1	17.5	3.4	(5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94.3	13.7	10.9	15.9	10.6	5.0	(676)
150~399만원	91.6	18.4	14.5	20.0	25.2	6.5	(2,100)
400만원 이상	90.7	18.2	19.8	27.8	34.9	9.9	(866)

주: 1) 중복응답으로, 최대 3가지까지 선택. 비율은 응답 사례를 기준으로 구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결혼관 및 자녀관

가.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8.6%, 93.1%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11.3%, 6.9%)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결혼보다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2008년도 조사에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나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3p% 증가했다.

인구 집단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남성인 경우,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표 4-9〉 인생에서 결혼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음	별로필요 하지않음	어느정도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계	(명)	χ^2
전체	.7	10.6	44.3	44.3	100.0	(6,189)	
연령							
25~39세	.6	14.1	52.9	32.4	100.0	(2,189)	
40~44세	1.8	13.4	49.6	35.1	100.0	(811)	
45~54세	.7	9.2	43.8	46.4	100.0	(1,387)	414.62***
55~64세	.4	6.9	37.0	55.8	100.0	(857)	
65세 이상	.3	5.5	27.6	66.5	100.0	(944)	
성							
남성	.5	6.5	41.8	51.2	100.0	(3,048)	171.79***
여성	1.0	14.6	46.8	37.6	100.0	(3,140)	
지역							
동부	.8	10.9	46.3	42.0	100.0	(5,159)	66.75***
읍면부	.5	9.0	34.7	55.8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7	8.5	36.1	54.7	100.0	(1,359)	
150~399만원	.8	12.0	47.0	40.2	100.0	(3,270)	94.27***
400만원 이상	.5	8.3	48.3	42.9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4-10〉 인생에서 자녀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음	별로필요 하지않음	어느정도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계	(명)	χ^2
전체	.3	6.6	40.5	52.6	100.0	(6,189)	
연령							
25~39세	.3	8.6	47.2	43.9	100.0	(2,189)	
40~44세	.7	9.1	46.3	43.8	100.0	(812)	
45~54세	.2	6.0	41.0	52.8	100.0	(1,388)	266.98***
55~64세	.1	4.6	32.6	62.7	100.0	(856)	
65세 이상	.4	2.5	26.3	70.7	100.0	(943)	
성							
남성	.3	5.9	39.6	54.2	100.0	(3,047)	7.71†
여성	.3	7.2	41.3	51.1	100.0	(3,141)	
지역							
동부	.3	7.2	42.1	50.5	100.0	(5,159)	
읍면부	.5	3.8	32.5	63.2	100.0	(1,031)	62.0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	6.4	33.4	59.8	100.0	(1,358)	
150~399만원	.2	6.6	43.8	49.4	100.0	(3,270)	50.49***
400만원 이상	.4	6.1	42.9	50.6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자녀관

‘자녀가 한 명이건 두 명 이상이건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2.3%로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28.6%)에 비해 많았다.

자녀의 수에 따라 행복감과 보람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많아 자녀수에 따른 행복감과 보람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1〉 자녀 수에 따라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계	(명)	χ^2
전체	13.5	38.8	19.1	25.0	3.6	100.0	(6,189)	
연령								
25~39세	14.6	31.4	21.2	27.6	5.2	100.0	(2,190)	
40~44세	10.6	37.6	17.8	29.0	5.1	100.0	(811)	
45~54세	12.0	41.1	19.7	24.8	2.4	100.0	(1,388)	165.52***
55~64세	13.1	44.8	19.1	21.5	1.5	100.0	(857)	
65세 이상	15.9	48.4	14.5	19.2	2.0	100.0	(944)	
성								
남성	14.6	37.2	18.7	26.0	3.6	100.0	(3,049)	
여성	12.4	40.5	19.5	24.1	3.5	100.0	(3,141)	12.48*
지역								
동부	13.1	38.3	19.7	25.2	3.7	100.0	(5,160)	
읍면부	15.2	41.7	16.3	23.9	2.8	100.0	(1,030)	13.1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3.4	42.5	18.2	23.0	3.0	100.0	(1,359)	
150~399만원	11.8	38.0	20.2	26.2	3.7	100.0	(3,270)	37.14***
400만원 이상	17.5	36.8	17.6	24.7	3.4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보다 한명만 잘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8%로 ‘그렇다’는 응답 26.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앞선 문항인 ‘자녀가 1명이건 두 명 이상이건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문항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집단별 결과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녀를 여러 명 갖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9.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4.2%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4-12〉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보다 1명만 잘 키우는 것이 더 낫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계	(명)	χ^2
전체	17.5	40.3	16.1	19.3	6.7	100.0	(6,189)	
연령								
25~39세	13.8	33.9	18.3	24.3	9.6	100.0	(2,190)	285.93***
40~44세	14.4	38.3	15.8	23.0	8.5	100.0	(812)	
45~54세	16.4	44.4	15.9	17.8	5.5	100.0	(1,387)	
55~64세	20.4	46.1	16.1	14.0	3.4	100.0	(857)	
65세 이상	27.8	45.5	11.9	11.5	3.4	100.0	(943)	
성								
남성	17.7	41.0	16.4	18.2	6.6	100.0	(3,048)	5.10
여성	17.4	39.6	15.8	20.4	6.9	100.0	(3,142)	
지역								
동부	16.2	39.7	17.0	19.8	7.3	100.0	(5,159)	63.61***
읍면부	24.0	43.2	11.7	17.0	4.1	100.0	(1,0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3.0	42.4	13.8	16.0	4.9	100.0	(1,360)	83.57***
150~399만원	14.1	40.4	17.0	21.3	7.2	100.0	(3,270)	
400만원 이상	19.8	37.4	17.5	18.3	7.0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4-13〉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녀를 여러 명 갖는 것이 더 좋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계	(명)	χ^2
전체	6.6	17.6	16.2	41.0	18.6	100.0	(6,189)	
연령								
25~39세	10.4	22.2	20.0	34.3	13.1	100.0	(2,189)	397.28***
40~44세	7.8	20.5	18.9	37.2	15.7	100.0	(811)	
45~54세	4.5	17.3	14.0	45.5	18.7	100.0	(1,387)	
55~64세	3.1	12.7	14.6	48.0	21.6	100.0	(858)	
65세 이상	3.2	8.9	10.1	46.8	31.0	100.0	(944)	
성								
남성	6.2	16.3	16.0	42.3	19.2	100.0	(3,047)	10.72*
여성	7.0	18.8	16.5	39.8	18.0	100.0	(3,142)	
지역								
동부	7.0	17.9	17.4	40.7	17.0	100.0	(5,159)	80.13***
읍면부	4.8	15.9	10.3	42.3	26.0	100.0	(1,031)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2	14.3	12.7	42.3	25.5	100.0	(1,359)	81.00***
150~399만원	6.9	19.2	16.9	41.1	15.9	100.0	(3,270)	
400만원 이상	7.1	16.8	18.1	39.4	18.6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즉,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읍면부 지역 거주자이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소자녀관 보다는 다자녀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에서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혼이거나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 집단별 자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연령이 많은 경우(25~39세 1.48명, 40~44세 1.87명, 45~54세 1.96명, 55~64세 2.32명, 65세 이상 3.41명, $F=501.81$, $p<.001$),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동부 1.98명, 읍면부 2.81명, $F=364.68$, $p<.001$),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78명, 150~399만원 1.92명, 400만원 이상 1.89명, $F=251.23$, $p<.001$) 자녀수가 가장 많아, 다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수가 실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후에 대한 준비

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및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걱정

노후 준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다’는 응답이 90.6%로 거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64세인 경우, 동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관심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이미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39세인 경우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연령대로, 아직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아직 노후 준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 3가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9.3%, 79.3%가 각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꼽아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고, 그 다음은 마땅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40.3%로 많았다.

〈표 4-14〉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관심없다	별로 관심없다	어느정도 관심있다	상당히 관심있다	계	(명)	χ^2
전체	.9	8.5	51.0	39.6	100.0	(6,189)	
연령							
25~39세	1.4	11.7	55.6	31.3	100.0	(2,189)	
40~44세	.1	4.2	57.6	38.1	100.0	(811)	
45~54세	.2	4.7	48.1	47.0	100.0	(1,387)	234.71***
55~64세	.1	6.1	45.7	48.1	100.0	(857)	
65세 이상	2.1	12.3	44.1	41.6	100.0	(943)	
성							
남성	1.0	9.6	51.0	38.5	100.0	(3,047)	
여성	.8	7.4	51.1	40.7	100.0	(3,141)	11.24*
지역							
동부	.8	7.5	51.4	40.3	100.0	(5,160)	
읍면부	1.3	13.3	49.2	36.2	100.0	(1,030)	40.2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4	13.6	49.6	35.4	100.0	(1,360)	
150~399만원	.8	7.8	53.2	38.2	100.0	(3,269)	114.53***
400만원 이상	.5	3.8	48.1	47.6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집단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나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건강에 대한 염려와 ‘가사일 등 매일의 일상 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기 벅찬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이나 동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마땅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사회관계가 없어져 만나고 교류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집에서 배우자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같은 여가나 사회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즉,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거나 읍면부 거주자이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생활비나 건강, 가사일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연령대가 어리거나 남성이거나 동부 거주자이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교류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배우자나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나 돈 때문에 원하는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등 여가나 사회, 가족 관계와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표 4-15〉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¹⁾

(단위: %, 명)

구분	생활비 부족	아프거나 건강 잃는 것	소일거리 찾지 못하는 것	집안에서 하루종일 지내야 하는 것	교류할 사람이 없어서 지내는 것	배우자/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돈이 없어 원하는 여가활동 못하는 것	일상생활 혼자 힘으로 하기 벅찬 것	(계)
전체	79.3	89.3	40.3	13.2	10.8	9.7	29.3	12.1	(6,189)
연령									
25~39세	76.9	83.7	45.2	12.1	15.4	10.9	34.0	9.5	(2,190)
40~44세	79.7	90.0	40.8	11.2	10.4	12.7	32.8	10.6	(812)
45~54세	81.4	90.4	42.3	12.6	10.3	9.8	26.7	10.6	(1,387)
55~64세	81.6	93.6	35.8	15.5	7.1	8.4	25.2	14.3	(857)
65세 이상	79.0	96.1	29.8	16.4	4.8	5.5	22.9	19.8	(943)
성									
남성	78.7	86.4	44.3	14.0	13.7	11.1	29.4	7.1	(3,048)
여성	79.8	92.0	36.4	12.5	8.0	8.3	29.2	17.0	(3,141)
지역									
동부	78.6	88.2	41.0	13.5	11.8	9.9	30.4	11.3	(5,159)
읍면부	82.8	94.6	36.8	11.9	5.9	8.9	24.0	16.1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5.6	93.0	35.5	13.6	6.2	6.2	23.6	16.4	(1,359)
150~399만원	80.2	88.6	42.2	13.2	11.4	10.0	30.8	10.3	(3,270)
400만원 이상	71.1	86.7	43.0	12.2	15.4	13.9	32.5	11.2	(1,200)

주: 1) 중복응답으로, 최대 3가지까지 선택. 비율은 응답 사례를 기준으로 구함.

2)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노후의 경제적 준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으나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노후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17.8%였으며,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⁶⁾에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61.8%,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난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집단별로는 연령이 25~39세와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6) 2007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서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준비 정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5~39세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포함되어 아직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인 경우는 이미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세대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이들 세대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기 보다는 자녀를 통해 노후 부양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의 집단별 차이는 앞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나,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 실제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으나 부족할 것 같음	최소한의 생활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음	충분히 준비해 생활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음	계	(명)	χ^2
전체	34.0	45.7	17.8	2.5	100.0	(6,189)	
연령							
25~39세	36.9	46.0	16.1	.9	100.0	(2,190)	
40~44세	27.6	51.0	20.3	1.0	100.0	(811)	
45~54세	26.5	51.9	18.2	3.4	100.0	(1,387)	215.05***
55~64세	31.2	44.3	18.6	6.0	100.0	(857)	
65세 이상	46.0	32.8	18.1	3.1	100.0	(943)	
성							
남성	32.9	46.8	17.8	2.6	100.0	(3,047)	
여성	35.0	44.7	17.9	2.4	100.0	(3,141)	3.60
지역							
동부	33.4	46.4	18.0	2.2	100.0	(5,160)	
읍면부	36.8	42.3	16.7	4.2	100.0	(1,030)	20.7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3.5	34.0	11.0	1.5	100.0	(1,360)	
150~399만원	31.8	49.0	17.3	2.0	100.0	(3,270)	461.40***
400만원 이상	16.0	52.2	27.1	4.8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결과를 보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이 21.1%, 개인연금이 16.1%, 부동산이 12.6%, 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이 9.4%,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6.3%, 기타(2.8%)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주로 직접 일을 한다는 응답이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200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주된 준비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역시 본 조사와 비슷했는데, 국민연금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6.9%), 사적 연금(18.2%), 기타 공적 연금(7.2%), 부동산 운용(6.4%), 퇴직금(3.2%), 주식, 채권 등(0.8%), 기타(0.1%) 순이었다.

이러한 노후의 중요 소득원에 대해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직연금이나 직역연금, 개인연금, 예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 자녀로부터 노후에 부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연금, 여성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자는 퇴직연금이나 직역연금, 개인연금, 읍면부 거주자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기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동부 거주자는 직장 생활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직역연금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읍면부 거주자(특히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퇴직의 개념이 없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기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퇴직연금이나 직역연금, 개인연금, 부동산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예금이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기타 응답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각종 연

7) 2008년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62.0%, 여성이 38.0%임.

금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충분한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가 없이 돈이 생길 때 저금해 두는 예금이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노후 소득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17〉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민 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 연금	예금/저축/ 펀드/주식	부동산	자녀의 경제적 지원	기타	계	(명)	χ^2
전체	31.8	9.4	16.1	21.1	12.6	6.3	2.8	100.0	(6,189)	
연령										
25~39세	29.5	11.7	23.1	23.0	11.2	.8	.6	100.0	(2,191)	
40~44세	34.7	9.4	21.3	22.4	10.6	.5	1.1	100.0	(812)	
45~54세	38.4	8.9	14.6	21.1	12.5	1.8	2.6	100.0	(1,387)	1424.86***
55~64세	35.3	8.3	9.4	19.2	14.6	8.9	4.3	100.0	(858)	
65세 이상	21.9	5.7	2.6	16.9	15.9	28.6	8.3	100.0	(944)	
성										
남성	35.1	9.8	14.7	21.9	12.2	3.8	2.4	100.0	(3,047)	95.49***
여성	28.6	9.0	17.2	20.2	12.9	8.8	3.3	100.0	(3,141)	
지역										
동부	31.4	10.3	17.0	21.4	12.5	5.3	2.1	100.0	(5,159)	162.83***
읍면부	34.2	5.1	10.5	19.1	13.0	11.8	6.3	100.0	(1,0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8.7	3.5	8.1	23.2	10.9	17.4	8.2	100.0	(1,359)	
150~399만원	33.7	10.6	19.3	21.2	10.9	3.1	1.2	100.0	(3,270)	766.33***
400만원 이상	31.5	13.4	17.7	18.3	16.9	1.0	1.2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순위로 응답한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은 예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이 30.5%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개인연금, 부동산 순이었다. 2순위 응답에서도 연령이 많거나 읍면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응답 비율이 높았다.

3순위로 응답한 노후 중요한 소득원은 예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이 2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23.9%), 개인연금(17.9%), 국민연금(16.6%) 순이었다.

〈표 4-18〉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2순위)

(단위: %, 명)

구분	국민 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 연금	예금/사채/ 펀드/주식	부동산	자녀의 경제적 지원	기타	계	(명)	χ^2
전체	12.6	8.1	26.3	30.5	14.4	6.4	1.7	100.0	(5,475)	
연령										
25~39세	10.4	12.0	31.7	29.7	13.8	2.1	.3	100.0	(2,084)	
40~44세	13.2	7.8	26.9	33.3	14.4	3.7	.8	100.0	(759)	
45~54세	13.0	6.6	30.7	31.0	13.9	3.2	1.6	100.0	(1,243)	800.93** *
55~64세	15.9	3.7	17.5	33.2	17.2	10.2	2.2	100.0	(725)	
65세 이상	14.3	3.6	10.2	26.4	14.3	24.6	6.6	100.0	(666)	
성										
남성	11.0	9.0	27.2	30.6	14.8	5.5	1.8	100.0	(2,731)	
여성	14.1	7.1	25.4	30.4	14.1	7.3	1.5	100.0	(2,743)	26.53***
지역										
동부	12.3	8.2	27.4	30.9	14.7	5.6	1.0	100.0	(4,624)	147.81** *
읍면부	13.9	7.4	20.4	28.4	13.2	10.9	5.8	100.0	(851)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3.2	4.6	17.5	30.4	11.8	17.3	5.1	100.0	(993)	
150~399만원	12.8	8.8	28.2	30.7	14.3	4.0	1.1	100.0	(3,021)	400.14** *
400만원 이상	11.4	8.9	28.0	31.1	17.6	2.6	.3	100.0	(1,166)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4-19〉 향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 (3순위)

(단위: %, 명)

구분	국민 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 연금	예금/사채/ 펀드/주식	부동산	자녀의 경제적 지원	기타	계	(명)	χ^2
전체	16.6	5.7	17.9	24.9	23.9	9.2	1.8	100.0	(4,267)	
연령										
25~39세	16.3	8.2	19.7	26.7	23.3	4.9	.8	100.0	(1,796)	
40~44세	17.0	4.8	20.8	25.7	26.1	5.2	.5	100.0	(631)	
45~54세	18.6	5.6	15.5	24.6	25.7	8.1	1.8	100.0	(940)	349.69** *
55~64세	17.8	1.2	16.0	21.4	20.2	19.6	3.8	100.0	(500)	
65세 이상	11.5	1.5	13.8	20.3	23.3	24.1	5.5	100.0	(399)	
성										
남성	17.2	5.6	18.5	24.9	25.0	7.2	1.6	100.0	(2,157)	
여성	16.0	5.8	17.4	24.8	22.8	11.1	2.0	100.0	(2,108)	22.63***
지역										
동부	17.3	6.0	18.2	24.5	24.1	9.0	.9	100.0	(3,691)	128.08** *
읍면부	12.1	3.5	16.6	26.9	23.1	10.6	7.3	100.0	(577)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5.5	2.4	18.8	20.7	18.8	17.5	6.3	100.0	(633)	
150~399만원	16.6	6.3	17.7	26.2	24.3	7.6	1.3	100.0	(2,432)	175.42** *
400만원 이상	17.3	5.8	18.2	25.1	26.4	6.6	.5	100.0	(993)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새로마지 플랜의 효과성 및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7.2%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32.8%)에 비해 많이 나타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과성에 대해 2/3 정도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4-2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과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 없을 것이다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어느정도 효과 있을 것이다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다	계	(명)	X ²
전체	2.8	30.0	62.6	4.6	100.0	(6,189)	
연령							
25~39세	4.7	37.2	55.2	3.0	100.0	(2,190)	
40~44세	4.3	32.9	59.4	3.4	100.0	(812)	
45~54세	1.3	25.7	67.2	5.8	100.0	(1,387)	213.42***
55~64세	1.5	22.1	71.2	5.3	100.0	(857)	
65세 이상	.6	24.4	68.2	6.8	100.0	(944)	
성							
남성	3.7	31.7	60.4	4.3	100.0	(3,048)	27.22***
여성	2.0	28.4	64.8	4.8	100.0	(3,141)	
지역							
동부	2.8	30.0	62.7	4.5	100.0	(5,160)	.29
읍면부	3.0	29.9	62.3	4.8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7	28.2	63.9	6.3	100.0	(1,359)	
150~399만원	3.0	30.9	62.7	3.4	100.0	(3,270)	33.45***
400만원 이상	3.9	29.6	61.5	5.0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구 집단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인 경우,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정책 수혜자인 경우가 많아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출산의 직접적인 주체이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대부분 자녀 양육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낮은 연령대인 경우 실제 출산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정부 정책 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출산이라는 개인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고 생각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1%로 ‘조성되어 있다’는 응답 27.9%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4-21〉 직장여성의 자녀출산·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조성되어 있지않음	별로 조성되어 있지않음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음	상당히 조성되어 있음	계	(명)	χ^2
전체	12.5	59.6	26.3	1.6	100.0	(6,189)	
연령							
25~39세	17.9	60.1	20.8	1.2	100.0	(2,189)	
40~44세	14.5	64.7	19.9	.9	100.0	(811)	
45~54세	9.4	60.5	28.2	1.9	100.0	(1,387)	207.40***
55~64세	7.0	57.8	33.1	2.1	100.0	(857)	
65세 이상	7.6	54.5	35.7	2.1	100.0	(944)	
성							
남성	11.0	59.9	27.1	2.0	100.0	(3,048)	19.38***
여성	13.9	59.4	25.6	1.1	100.0	(3,142)	
지역							
동부	13.2	60.7	24.6	1.5	100.0	(5,159)	
읍면부	8.9	54.1	34.9	2.0	100.0	(1,029)	54.8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7.4	57.5	33.5	1.7	100.0	(1,359)	
150~399만원	14.1	60.1	24.3	1.5	100.0	(3,270)	73.77***
400만원 이상	13.3	61.6	23.5	1.7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연령대가 젊은층인 경우, 여성인 경우, 동부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여성의 자녀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실제 일·가족 양립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대가 젊은 경우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

문에, 여성인 경우 대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부 거주자인 경우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3세대 가족이 많고, 농사일 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직장 생활보다는 쉽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우선 순위 분석 결과

1. 저출산 분야

가. 전체 집단 분석

저출산 분야 중영역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분야 사업은 다른 두 중영역 보다 높은 가중치를 보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은 비슷한 가중치를 보여 국민들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2〉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위 (.327)	신혼부부출발지원	3위 (.214)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1위 (.33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위 (.251)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위 (.203)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위 (.346)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위 (.488)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1위 (.512)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3위 (.327)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위 (.495)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위 (.505)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다른 소영역 정책에 비해 뚜렷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다른 사업에 비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동 분야의 소영역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간의 중요도 크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선 순위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과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서는 소영역간의 뚜렷한 우선순위가 발견되지 않아 두 소영역 사업에 국민들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연령별 분석

연령별 분석 결과는 전체 집단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여 전체 집단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5~39세 연령대에서는 세가지 중영역 사업에 모두 비슷한 중요도를 보여 저출산 분야 중 영역 사업을 고르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저출산 영역의 세가지 중영역에 대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보이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그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전체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위 (0.335)	3위 (0.317)	2위 (0.329)	2위 (0.332)	신혼부부출발지원	3위 (0.212)	3위 (0.215)	3위 (0.212)	3위 (0.216)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1위 (0.332)	1위 (0.339)	1위 (0.326)	1위 (0.326)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위 (0.252)	2위 (0.247)	2위 (0.256)	2위 (0.251)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위 (0.204)	4위 (0.198)	4위 (0.206)	4위 (0.208)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위 (0.335)	1위 (0.358)	1위 (0.346)	1위 (0.342)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위 (0.508)	2위 (0.472)	2위 (0.483)	2위 (0.486)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2위 (0.492)	1위 (0.528)	1위 (0.517)	1위 (0.514)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위 (0.329)	2위 (0.326)	3위 (0.324)	3위 (0.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위 (0.498)	2위 (0.496)	2위 (0.490)	2위 (0.48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위 (0.502)	1위 (0.504)	1위 (0.510)	1위 (0.51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두 소영역간 중요도 크기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전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25~3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등이 대부분 25~39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성별 분석

성별 분석 결과 역시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전체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단, 미세한 차이로서 성별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결

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분야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이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조성에 대한 욕구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 4-24〉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위 (0.327)	3위 (0.327)	신혼부부출발지원	3위 (0.222)	3위 (0.205)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1위 (0.330)	1위 (0.335)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위 (0.245)	2위 (0.256)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위 (0.202)	4위 (0.203)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위 (0.347)	1위 (0.345)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위 (0.484)	2위 (0.491)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1위 (0.516)	1위 (0.509)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3위 (0.326)	2위 (0.328)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위 (0.490)	2위 (0.49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위 (0.510)	1위 (0.501)

라. 지역별 분석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표 4-25〉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3위 (0.325)	2위 (0.336)	신혼부부출발지원	3위 (0.215)	3위 (0.209)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1위 (0.332)	1위 (0.336)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위 (0.251)	2위 (0.248)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위 (0.202)	4위 (0.206)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위 (0.347)	1위 (0.342)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위 (0.488)	2위 (0.488)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1위 (0.512)	1위 (0.512)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2위 (0.328)	3위 (0.322)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위 (0.497)	2위 (0.484)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위 (0.503)	1위 (0.516)

마. 소득 수준별 분석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역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해당되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의 상대적인 중요도 크기는 저소득층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은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에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중요도의 상대적인 크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표 4-26〉 저출산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3위 (0.328)	2위 (0.329)	3위 (0.323)	신혼부부출발지원	3위 (0.211)	3위 (0.215)	3위 (0.21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1위 (0.335)	1위 (0.334)	1위 (0.33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위 (0.248)	2위 (0.251)	2위 (0.25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위 (0.205)	4위 (0.200)	4위 (0.205)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위 (0.343)	1위 (0.345)	1위 (0.350)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위 (0.486)	2위 (0.484)	2위 (0.494)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1위 (0.514)	1위 (0.516)	1위 (0.506)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2위 (0.329)	3위 (0.325)	2위 (0.327)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위 (0.491)	2위 (0.498)	2위 (0.49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위 (0.509)	1위 (0.502)	1위 (0.509)

2. 고령화 분야

가. 전체 집단 분석

전체 조사 대상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된 네 개의 중영역중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 다음이 ‘건강하고 보호 받는 노후생활 보장’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순서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노후에 경험하는 빈곤, 질병, 무위와 고독 중 빈곤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저출산 분야의 경우 중영역 사업의 중요도 크기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고령화 분야의 경우 중영역 사업의 중요도 크기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욕구 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공고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1차 안전망을 이루는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도입되어 약 2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실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2009) 회원국 중 한국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경제활동시기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노년기의 소득이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될 경제적 위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⁸⁾. 또한 건강해야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보호 받는 노후생활 보장’ 에도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은 생존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위의 욕구충족과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구축’ 분야에서는 ‘공적연금내실화’를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적 연금을 가입하여 준비하는 것에 비하여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 연금을 통해 보장 받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분야에서는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을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보다는 사후적 서비스로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요양 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 받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는 ‘고령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을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 주거환경보다 교통환경의 범위가 넓고, 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의 편리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노후생활에 있어 일이 자아실현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불충분한 소득을 보완해주는 소득창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노후 생활 설계 마련이 고령자 사회 참여 보다 약간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노년기 이전이므로 본인이 노년

8)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빈곤의 개념에 기초할 때 한국 노인의 45%가 빈곤 상태로 OECD 평균 13.3%에 비하여 약 32% 높은 수준임 (정경희, 2009a)

기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노후생활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4-27〉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위 (.298)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위 (.54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위 (.457)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위 (.272)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위 (.480)
			고령사회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위 (.52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위 (.200)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위 (.485)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위 (.515)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위 (.230)	노인 일자리 창출	1위 (.385)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3위 (.306)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위 (.309)

나. 연령별 분석

네 개의 중영역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 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한편 65세 미만 연령 집단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활동적인 노인사회 참여 여건 조성’ ‘안전한 노후 생활 환경 조성’ 순서로 우선 순위 부여하고 있다.

〈표 4-28〉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위 (0.303)	1위 (0.297)	1위 (0.293)	2위 (0.293)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위 (0.517)	1위 (0.549)	1위 (0.556)	1위 (0.574)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위 (0.483)	2위 (0.451)	2위 (0.444)	2위 (0.42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위 (0.259)	2위 (0.270)	2위 (0.281)	1위 (0.297)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위 (0.489)	2위 (0.479)	2위 (0.464)	2위 (0.475)
						고령사회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위 (0.511)	1위 (0.521)	1위 (0.536)	1위 (0.525)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위 (0.200)	4위 (0.197)	4위 (0.201)	3위 (0.205)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위 (0.481)	2위 (0.478)	2위 (0.499)	2위 (0.498)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위 (0.519)	1위 (0.522)	1위 (0.501)	1위 (0.502)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위 (0.238)	3위 (0.236)	3위 (0.225)	4위 (0.204)	노인 일자리 창출	1위 (0.373)	1위 (0.389)	1위 (0.395)	1위 (0.392)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3위 (0.312)	3위 (0.304)	3위 (0.298)	2위 (0.304)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위 (0.315)	2위 (0.307)	2위 (0.307)	3위 (0.303)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비노인층에게 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는 청장년기부터의 준비를 통하여 노년기 소득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인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영역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인층에게는 건강과 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즉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초점이 두어져 있으며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같은 상위의 욕구충족과 연관된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 노인층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노화과정에서 건강이 가장 즉각적으로 개입과 대처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소득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현노인세대에 비하여 미래노인세대에게서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65세 미만 연령층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비하여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연령층은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과 대별된다. 이는 생활 안전이 노인의 기본적인 실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젊은층일수록 노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 영위 등과 같은 활기찬 노후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소영역에 대한 중요도 판단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를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에 비하여 ‘공적연금제도내실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이는 모든 연령층이 노후소득확보에 있어 공적인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경험률이 높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두 번째 중영역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의 경우도 모든 연령대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을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노년기에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기능저하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가족의 기능변화 등으로 가족수발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비노인층의 경우도 수발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또한 본인이 노년기에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을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나, 25~39, 40~54세군에서는 55세 이상보다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큰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안전한 주거공간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가중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자 이상에서는 좀 더 젊은 연령층에 비해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보다 본인의 주거공간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본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측면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1순위로 지적되고 있어 경제적 보상이 없는 사회 참여 보다는 경제적 보상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노년기에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원으로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노인층은 비노인층과는 달리 ‘고령자 사회참여여건조성’을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에 비하여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생활설계는 노인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 성별 분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로 남녀 모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 받는 노후생활 보장’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순서로 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각 중영역에서의

〈표 4-29〉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위 (0.298)	1위 (0.299)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위 (0.535)	1위 (0.550)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위 (0.465)	2위 (0.450)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위 (0.270)	2위 (0.273)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위 (0.483)	2위 (0.477)
				고령사회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위 (0.517)	1위 (0.52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위 (0.200)	4위 (0.200)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위 (0.483)	2위 (0.488)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위 (0.517)	1위 (0.512)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위 (0.233)	3위 (0.227)	노인 일자리 창출	1위 (0.384)	1위 (0.386)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2위 (0.308)	3위 (0.304)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3위 (0.308)	2위 (0.311)

소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단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 남녀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남자는 ‘고령자 사회참여여건조성’을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여자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을 ‘고령자 사회참여여건조성’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 지역별 분석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보호 받는 노후생활 보장’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조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순서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의 중요도의 차이를 크지 않게 보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이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 중영역 내의 소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구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촌거주자가 공적 연금 내실화에 좀 더 정책적 중요성을 높게 두고 있는데, 이는 농촌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중요도가 도시 거주자보다 크며, 도시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인 연금 등을 가입할 여력이 있어 사적 소득 보장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중영역에서는 농촌거주자가 주거환경 확보를 교통환경조성에 비하여 중요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농촌의 경우 도시 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의 경우 빈번한 교통 수단 이용과 복잡한 교통 환경으로 인하여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 농촌의 경우 도시 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표 4-30〉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고령사 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위 (0.300)	1위 (0.290)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위 (0.537)	1위 (0.574)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위 (0.463)	2위 (0.42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위 (0.268)	2위 (0.289)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위 (0.480)	2위 (0.478)
				고령사회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위 (0.520)	1위 (0.52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위 (0.199)	4위 (0.205)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위 (0.482)	1위 (0.505)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위 (0.518)	2위 (0.495)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위 (0.233)	3위 (0.217)	노인 일자리 창출	1위 (0.382)	1위 (0.397)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3위 (0.307)	3위 (0.299)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위 (0.310)	2위 (0.304)

마. 소득 수준별 분석

모든 소득 계층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요도의 크기도 소득 수준별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같은 수준으로 중요시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 문제는 전 소득 계층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은 활동적인 사회 참여에 대하여 건강보호에 못지 않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 계층에서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가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중요도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연금을 가입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에 대한 중요도가 저소득층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요양보호기반 확충’을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한편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를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보다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을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보다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을 다른 소영역에 비하여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원으로서의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31〉 고령화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고령사 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위 (0.300)	1위 (0.299)	1위 (0.300)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위 (0.565)	1위 (0.536)	1위 (0.534)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위 (0.435)	2위 (0.464)	2위 (0.466)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위 (0.280)	2위 (0.270)	2위 (0.26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위 (0.473)	2위 (0.481)	2위 (0.480)
					고령사회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위 (0.527)	1위 (0.519)	1위 (0.520)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위 (0.204)	4위 (0.198)	4위 (0.198)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위 (0.506)	2위 (0.480)	2위 (0.475)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위 (0.494)	1위 (0.520)	1위 (0.525)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위 (0.216)	3위 (0.233)	3위 (0.241)	노인 일자리 창출	1위 (0.404)	1위 (0.384)	1위 (0.370)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3위 (0.294)	3위 (0.303)	2위 (0.325)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위 (0.302)	2위 (0.314)	3위 (0.306)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우리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미래노인세대들은 소득보장체계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반마련에 관심이 있다는 차이가 있어 정책마련에 있어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성장 동력 분야

가. 전체 집단 분석

전체 조사 대상자들은 성장동력 확보로 설정된 세 개의 중영역 중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을 보고 있다. 이는 인적투자나 소비보다는 직접적인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영역 사업의 중요도 크기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는 ‘고령친화산업육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내 소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보다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크게 부여했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정년 이후의 경제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부여는 경기침체로 인한 응답자들의 고용불확실성과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32〉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위 (.38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위 (.377)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위 (.384)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위 (.23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위 (.318)		
	고령친화산업육성	3위 (.294)		

나. 연령별 분석

세 개의 중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결과, 25~64세 연령층에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반면, 65세 이상 집단은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육성’,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해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활용기반 구축’의 소영역 평가의 경우, 25~3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4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는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향후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중요한 인력 활용 방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응답하였다고 보다 본인의 이해관계, 즉 본인의 욕구에 보다 부합하고 필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잠재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세대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4-33〉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연령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25~39 세	40~54 세	55~64 세	65세 이상
저출산 ·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위 (0.383)	1위 (0.400)	1위 (0.387)	1위 (0.37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위 (0.380)	2위 (0.378)	2위 (0.373)	2위 (0.369)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2위 (0.371)	1위 (0.388)	1위 (0.395)	1위 (0.394)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위 (0.249)	3위 (0.234)	3위 (0.233)	3위 (0.237)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위 (0.323)	2위 (0.318)	2위 (0.318)	3위 (0.308)					
	고령친화 산업육성	3위 (0.294)	3위 (0.283)	3위 (0.294)	2위 (0.321)					

다. 성별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목표로 남녀 모두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중영역에서의 소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4-34>에서처럼 여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남성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은 남녀 모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정책의 중요도의 크기는 중영역 사업 및 소영역 사업 모두 사업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나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앞서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잠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응답하였다고 보다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잠재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세대간의 통합과 아울러 성별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표 4-34〉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성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저출산 ·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위 (0.374)	1위 (0.40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위 (0.368)	1위 (0.385)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위 (0.390)	2위 (0.378)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위 (0.242)	3위 (0.237)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위 (0.328)	2위 (0.308)			
	고령친화산업 육성	3위 (0.297)	3위 (0.291)			

라. 지역별 분석

중영역내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지역별 분석 또한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활용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 거주자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에 좀더 높은 중요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도시 거주자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에 좀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의 소영역에서는 도시 거주자의 경우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에, 농촌 거주자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농촌간의 노동시장 규모와 노동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보인다. 즉, 노동의 규모 및 노동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된 도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농업이라는 경제활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응답자의 욕구 및 필요도에 더 부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는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 4-35〉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지역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영역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저출산 ·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위 (0.390)	1위 (0.37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위 (0.376)	1위 (0.383)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위 (0.385)	2위 (0.379)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위 (0.240)	3위 (0.23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위 (0.317)	2위 (0.324)			
	고령친화산업 육성	3위 (0.294)	3위 (0.297)			

마. 소득 수준별 분석

모든 소득 계층에서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중요도의 크기는 소득 수준별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영역내 소영역 사업의 경우 연령, 성별, 지역과는 달리 소득수준별 우선순위 차이는 없었으며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중요도의 크기 또한 소득수준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4-36〉 성장동력 분야 AHP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영역	순위 (가중치)			소영역	순위 (가중치)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149만원 이하	150~399 만원	400만원 이상
저출산 ·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위 (0.387)	1위 (0.387)	1위 (0.39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위 (0.376)	2위 (0.379)	2위 (0.370)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위 (0.388)	1위 (0.380)	1위 (0.394)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위 (0.236)	3위 (0.241)	3위 (0.237)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위 (0.310)	2위 (0.322)	2위 (0.318)				
	고령친화산업 육성	3위 (0.303)	3위 (0.292)	3위 (0.290)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특성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우리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잠재인력으로써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⁹⁾

1. 저출산 분야

가. 전체 분석 결과

저출산 정책의 경우 중요도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하여 40% 이상으로 응답한 고령화 및 성장 동력 정책보다 국민들이 부여하는 중요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상당히 이루어짐’ 혹은 ‘어느 정도 이루어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령화 정책의 10~20%와 비교하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행도 체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분야 27개 세부 영역 사업의 중요도와 실행도 평균 점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나타난다. 저출산 분야 세부 영역 사업에 대한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4.45점으로서 고령화 분야 사업의 4.40점과 성장 동력 분야 사업의 4.18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행도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저출산 분야 사업은 2.32점으로 고령화 분야 2.62점과 성장 동력 분야 2.42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정부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정책 실행도 체감도가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보편적인 형태에 가까운 지원일수록 체감도가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47,618.9억원 중 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21,269.7 억원으로 67.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분야 사업들도 상대적으로 체감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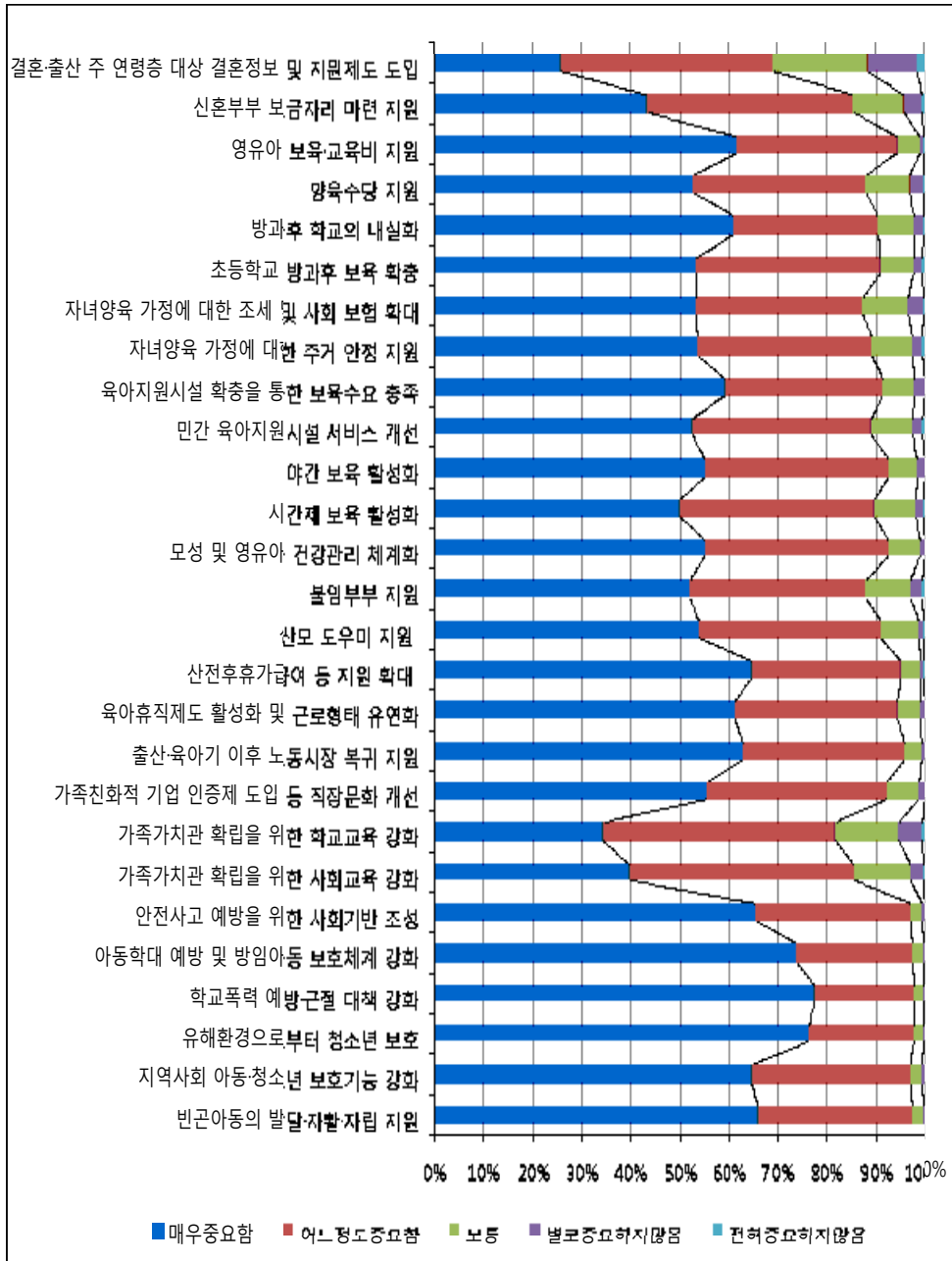
9)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별 전체 조사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빈도분포 그래프, 정책별 전체 조사 대상자 및 집단별 조사 대상자의 중요도·실행도 평균 점수와 mapping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중요도·실행도 빈도분포표와 집단별 빈도분포 그래프는 본 보고서에 실지 않았으며 연구 책임자에게 의뢰시 받아볼 수 있다.

타난 바, 이는 동 사업들이 아동·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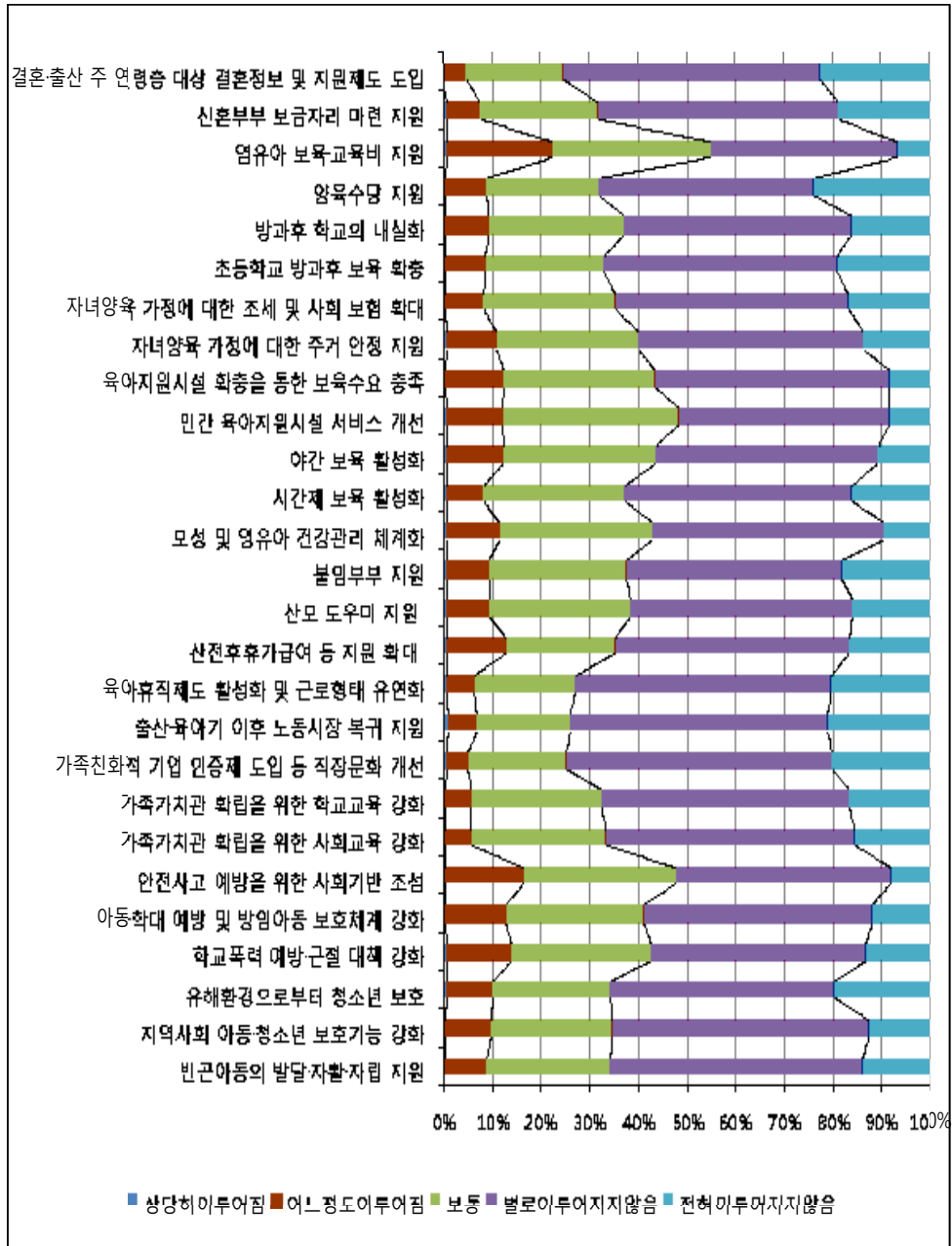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사업의 경우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영역에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전한 발달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당위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저출산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그림 4-2] 저출산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실행도



저출산 정책 세부영역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응답 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실행 점수가 다른 정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지원하고 차등 지원은 70%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보편성으로 인해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의 중요도 점수 역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행도 점수 역시 평균을 넘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 등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꾸준히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사업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은 모두 평균 수준의 중요도 점수를 보이나, 실행도 점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사업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육아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경제적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학교 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의 경우 중요도 점수와 실행도 점수가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AHP 분석 결과에서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강화 (소영역 사업 ‘학교·사회 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하기(세부영역사업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혹은 ‘지역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세부영역사업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가족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제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방향성에서 국민들이 보다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7〉 저출산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단위 : 명, 점)

번호 ¹⁾	세부 영역	N	중요도		실행도		차이	차이검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3,001	3.81	27	2.06	27	1.75	t=76.13***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3,001	4.23	24	2.21	22	2.02	t=88.02***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3,001	4.55	9	2.71	1	1.83	t=88.02***
4	양육수당 지원	3,001	4.37	20	2.17	23	2.20	t=96.62***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3,001	4.48	11	2.30	13	2.18	t=97.25***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3,001	4.41	17	2.23	20	2.19	t=100.10***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3,001	4.37	20	2.27	17	2.10	t=92.91***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3,001	4.40	18	2.38	9	2.02	t=88.85***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3,001	4.48	11	2.47	4	2.01	t=94.10***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3,001	4.39	19	2.52	3	1.86	t=84.40***
11	야간 보육 활성화	3,001	4.46	14	2.46	5	1.99	t=96.48***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3,001	4.37	20	2.29	14	2.07	t=95.03***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3,001	4.47	13	2.46	5	2.02	t=102.26***
14	불임부부 지원	3,001	4.36	23	2.29	14	2.07	t=94.94***
15	산모 도우미 지원	3,001	4.44	16	2.32	10	2.11	t=99.29***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4,389	4.58	7	2.32	10	2.26	t=126.06***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4,389	4.54	10	2.13	24	2.41	t=140.14***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4,389	4.58	7	2.12	25	2.46	t=143.81***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4,389	4.46	14	2.10	26	2.36	t=138.02***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4,389	4.10	26	2.22	21	1.88	t=108.11***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4,389	4.22	25	2.24	19	1.98	t=112.97***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4,389	4.62	5	2.56	2	2.06	t=125.43***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4,389	4.71	3	2.42	8	2.29	t=142.67***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4,389	4.75	1	2.44	7	2.31	t=138.61***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4,389	4.74	2	2.25	18	2.49	t=149.15***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4,389	4.61	6	2.32	10	2.29	t=142.24***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4,389	4.63	4	2.29	14	2.34	t=147.67***
27개 문항 전체			4.45		2.32			

*** p<.001

주 1) : 각 번호의 세부 영역 사업에 해당하는 소영역은 아래와 같음.

- | | |
|------------------------------|--|
| 1~2 : 신혼부부 출발지원 | 16~19 :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 3~8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20~21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 9~12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22~25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13~15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26~27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저출산 정책의 중요도·실행도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가정 양립 분야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요도 점수는 높으나 실행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에서 이러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일 가정 양립 분야 정책 중 ‘산전후 휴가 급여’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실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전후 휴가 정책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혼부부 출발 지원 사업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으로 특히 ‘결혼 정보 및 지원 제도 도입’은 중요도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이러한 매칭 서비스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111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나. 집단별 분석 결과¹⁰⁾

성별 분석 결과 전반적인 유형은 전체 분석 결과와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출산 정책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육아지원시설 확충,’ ‘방과후 학교,’ ‘야간보육’ 등 자녀 보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실행도 체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보육과 관련한 저출산 정책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대상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도시 농촌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도를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확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정책과 더불어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도시보다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

실행도는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해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수당을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도 농촌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는 소득 계층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요도 점수는 중산층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실행도는 저소득층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계층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저출산 정책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10)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평균점수표와 mapping 분석 그래프는 각각 <부록 3>과 <부록 4>에 수록되어 있음.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겠다.

1) 성별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야간 보육 서비스,’ ‘산모 도우미 지원’ 등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도 점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도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직장내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행도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정책에 대한 체감도에서 성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정책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별 분석 결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농촌의 경우 도시 보다 높다는 사실을 볼 때 동 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행도에 있어서는 농촌의 경우 대개 원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도시는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도시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같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양육수당 지원과 같이 농촌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은 정책도 있어 정책간의 실행도 체감률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사업에 대해 농촌은 실행도가 평균 점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도시 지역의 경우 평균점 이하로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실행도 체감이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보다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산모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실행도가 농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정책 역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실행도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저출산 정책에서의 주거 지원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우선 순위 부여 등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 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 보다 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의 경우 무급 가족 봉사자로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면, 도시에서는 대부분 기업체 등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겠다.

3)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에서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상류층에 비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았으며 정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류층의 실행도 체감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지원 인프라’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의 실행도 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중산층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아 국공립 보육시설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와 ‘산모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에게서 실행도 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경우 중산층 이상이 저소득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중요성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가족친화적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닐 것으로 추측되는 상류층이 중산층에 비해 실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 ‘아동 학대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 중산층 계층이 상위 소득 계층 혹은 저소득 계층 보다 낮은 실행도 점수를 보여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 고령화 분야

가.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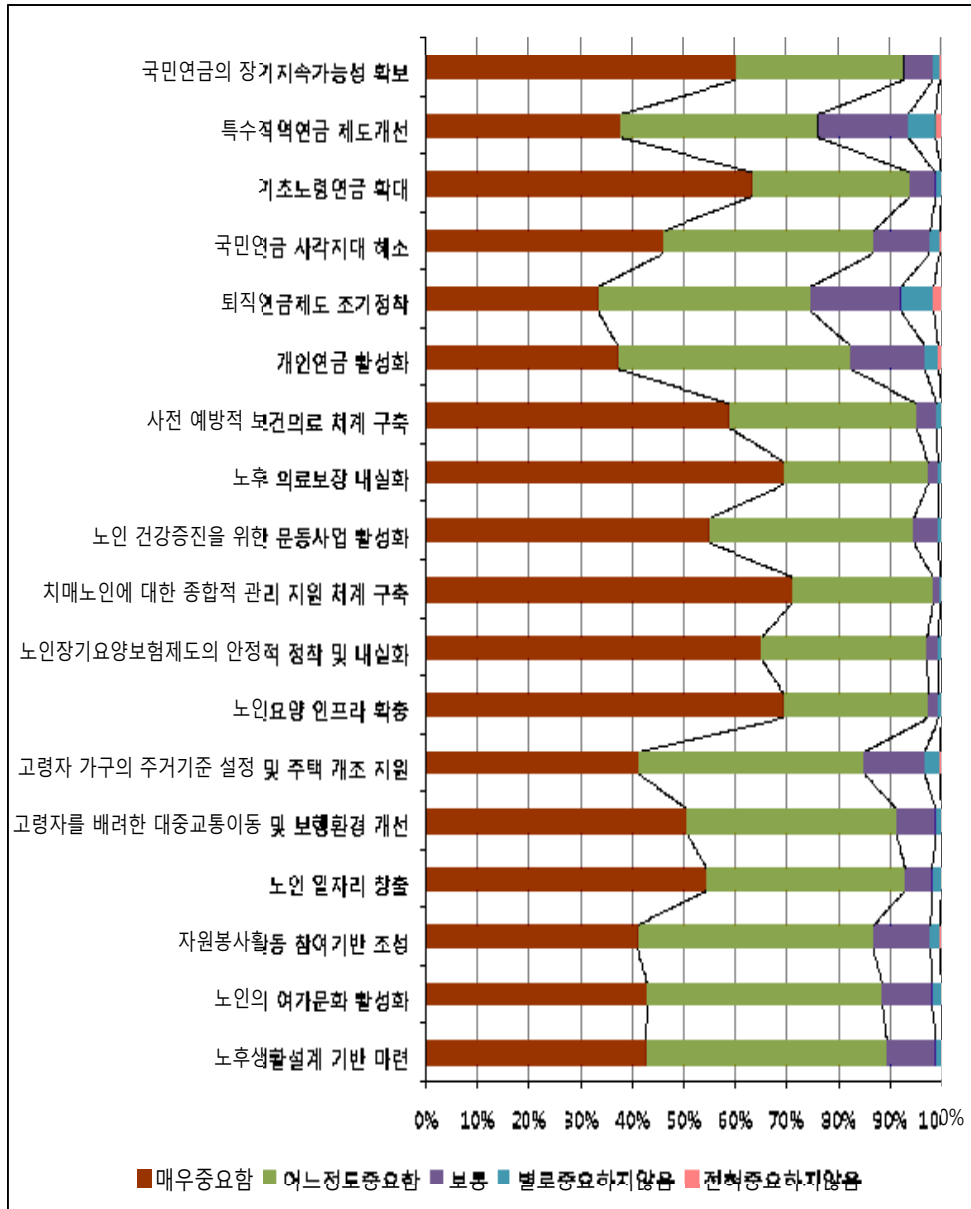
고령화 분야의 각 18개 세부영역의 중요도 평균은 4.40점으로 저출산 영역의 4.45점보다 약간 낮지만 성장동력의 4.18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행도의 경우 저출산 영역의 2.32점이나 성장동력 영역의 2.42점보다 높은 2.62점으로 나타났다. 즉 중요도는 저출산 영역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실행도는 다른 두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제도들이(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령화 분야의 18개 세부영역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기초노령연금확대’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 요양인프라 확충’으로 18개중 6개 항목에 대하여 60%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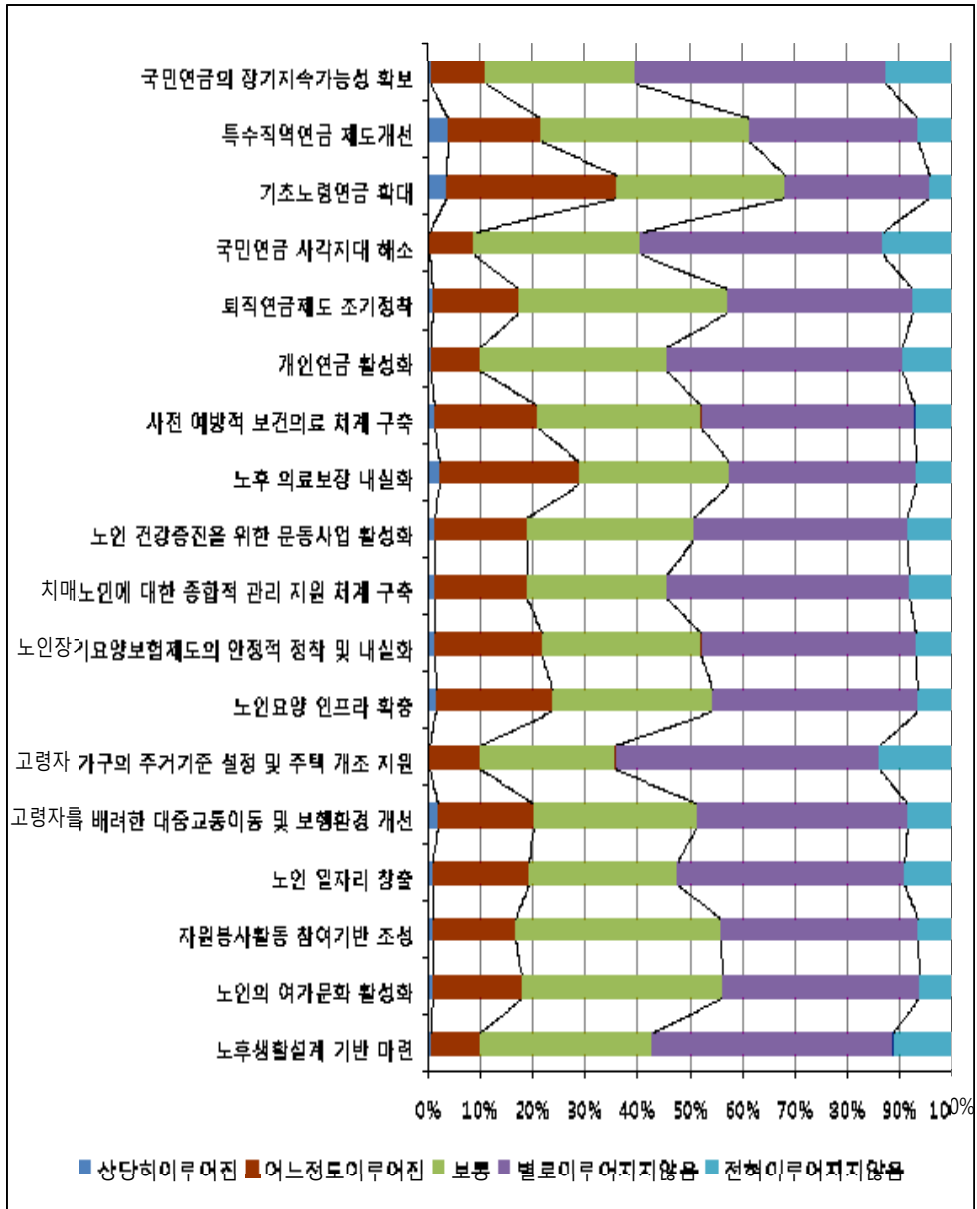
평가한 비율이 33.4%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활성화의 경우도 동 비율이 37.2%로 중요성이 낮은 정책과제도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범위가 넓거나(예: 노인의 70%를 대상으로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공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중요도가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로 각 세부영역을 비교해보면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5개 항목이다.

실행도의 경우는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평가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부영역을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의 경우가 가장 높아 35.9%이다. 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동 비율이 8.8%로 가장 낮고 다음이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으로 9.9%이다. 실행도에 대한 평균점수로 각 세부영역을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실행도가 가장 높아 유일하게 평균점수가 3점을 넘은 항목이며,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특수직연연금 제도개선,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도 그 다음으로 실행도가 높은 항목이다. 반면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행도가 가장 낮은 항목들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실행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실행도 평가에 있어 정책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4-4] 고령화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그림 4-5] 고령화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도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분야의 노인 보건 사업이 중요성과 실행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이 가장 중요성 높은 사업으로 실행도 점수 역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정책체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사업 역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사업은 사업 대상에 따라 중요도와 실행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민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노인의 70%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적용범위가 넓은 정책의 경우 정책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제도 설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특수지역연금제도개선’사업은 정책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제도의 적용범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즉 적용범위가 넓은 제도일수록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특수지역연금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실행도 점수가 높으나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실행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퇴직 연금제도와 개인연금 제도와 같은 사적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최근 이루어졌고 실제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사업에서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사업은 평균 수준의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를 보이는 반면,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보다는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이 공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며,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의 경우 도로 정비 및 횡단보도 정비,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설치 등 가시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체감되고 있는 반면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는 관련된 국민에게만 체감되어 정책의 실행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동 영역에 해당되는 다른 항목들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활동’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는 평균 정도의 실행도를 보이나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은 평균 이하의 실행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충분한 노후소득을 갖고 있지 못한 노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은 필요한 정책으로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며¹¹⁾, 실제로 노후생활설계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전화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프로그램인지율은 27.5%에 불과하며 노후준비프로그램을 경험한 비율은 약 5%에 불과함(이소정 외, 2008).

〈표 4-38〉 고령화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단위 : 명, 점)

번호 ¹⁾	세부 영역	N	중요도		실행도		차이	차이검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5,246	4.51	7	2.39	16	2.12	t=133.66***
2	특수지역연금 제도개선	5,246	4.06	17	2.81	3	1.25	t=63.53***
3	기초노령연금 확대	3,999	4.56	5	3.03	1	1.52	t=84.05***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246	4.30	12	2.37	17	1.94	t=117.74***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5,246	3.98	18	2.68	7	1.30	t=74.36***
6	개인연금 활성화	5,246	4.16	16	2.47	14	1.69	t=102.82***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3,999	4.53	6	2.67	8	1.86	t=105.54***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1,800	4.67	2	2.82	2	1.84	t=68.12***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800	4.49	8	2.63	11	1.86	t=70.37***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800	4.69	1	2.58	13	2.12	t=82.62***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3,999	4.61	4	2.69	5	1.92	t=112.95***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3,999	4.66	3	2.73	4	1.93	t=111.98***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1,800	4.23	15	2.32	18	1.91	t=67.56***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1,800	4.41	10	2.65	10	1.76	t=63.02***
15	노인 일자리 창출	1,800	4.45	9	2.59	12	1.86	t=66.24***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800	4.25	14	2.67	8	1.58	t=59.31***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800	4.30	12	2.69	5	1.60	t=60.02***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00	4.31	11	2.42	15	1.89	t=70.66***
18개 항목 전체 (평균)			4.40		2.62			

*** p<.001

주 1) : 각 번호의 세부 영역 사업에 해당하는 소영역은 아래와 같음.

- | | |
|-----------------------------|-----------------------|
| 1~ 4 :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 14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
| 5~ 6 :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 15 : 노인 일자리 창출 |
| 7~ 9 :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 16~17 :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
| 10~12 :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 18 :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 13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이러한 18개 항목의 중요도 및 실행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구축’의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기초노령연금 확대’부터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가 낮은 ‘국민연금의 장기조속가능성 확보’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까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등 4개의 중위영역중 그 변이의 폭이 가장 크다.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과 관련한 3개의 세부항목은 모두 중요도가 높지만 실행도는 중간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집단별 분석 결과¹²⁾

1) 성별 분석 결과

성별로 고령화 영역의 18개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평균 4.41로 남성의 4.38보다 조금 높다. 개별 항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어 치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남녀 모두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와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과 같이 공적 연금의 안정적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적 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적소득보장체도의 확충’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중요도 점수 부여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전하며 사적소득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2)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평균점수표와 mapping 분석 그래프는 각각 <부록 3>과 <부록 4>에 수록되어 있음.

의 안정적 정착'과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과 같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분담 하에서 부양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수발자의 대부분이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구축'에 대해서도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이 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이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에,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중요성 점수를 주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성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18개 세부정책항목의 실행도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요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행도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각각 2.59점과 2.65점이다. 개별항목별로는 남녀 모두 실행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꼽고 있다. 남성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정책의 평균 실행도 점수가 2.95점인데 비하여 여성은 3.11점으로 여성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이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 내실화에 비하여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이는 사적소득보장제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들에게 더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도 체감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의 경우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이 모두 남녀 모두 20% 이상이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노후의료보장 내실화'와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높은 실행도 점수를 주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2개 항목의 실행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교

적 낮은 실행도를 보이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지원’의 경우 남녀 모두 가장 실행도가 낮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후에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업의 실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8개 항목의 중요도 및 실행도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응답유형을 보이지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 평가에 있어 항목별 변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분석 결과

18개 정책에 대해 중요도 평가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촌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약간 높게 이루어진 반면, 실행도 점수의 경우 농촌 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중심으로 수행되어온 것과 관련되며,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보다 약간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와 ‘특수지역연금 제도 개선’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차이이다.

한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관련 사업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지역별 응답유형이 상이하다.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구축’의 경우는 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농촌거주자가 좀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노후 의료 보장 내실화’ ‘치매 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노인요양인프라 확충’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거주자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도시 거주자가 농촌거주자에 비하여 중요성 점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18개 세부정책항목의 실행도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요도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거주자에 비하여 농촌거주자의 실행도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각각 2.61점과 2.72점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하여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가 모두 제일 높은 실행도 점수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과 도시 지역 각각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는 응답률이 51.6%대 32.1%로 지역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 규모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많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과 '노후생활설계 기반마련'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는 이들 사업의 실제 실행이 미미하여 지역간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환경 조성'과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욕구인 사회참여와 관련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18개 항목의 중요도 및 실행도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비슷한 응답 유형을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세부 영역 사업을 볼 때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의 경우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에 비하여 중요도는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좀 더 높은 실행도를 부여하고 있고,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비슷한 중요도와 좀더 낮은 실행도를 부여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이라는 소영역의 경우는 관련 3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거주자가 3개 항목의 중요성을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활동적인 노인사회 참여여건조상'과 관련해서는 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농촌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실행도를 보이고 있다.

3)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18개 정책에 대하여 중산층의 경우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조금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세부정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를 중요시하고 있어 중요도 점수가 4.64점이며 중산층 이상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어 평균점수가 각각 4.76점, 4.74점이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건강 및 영양 보호 정책에서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에 비해 실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영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은 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정기지속가능성 확보’와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층일수록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대상자와 기여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세부 정책별 차이는 있어,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약간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치매나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이상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중요성 점수를 높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류층 보다 중산층이 오히려 사회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층은 아직 사회참여라고 하는 상위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적고, 상류층의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18개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계를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고소득

층에서 특수직역연금의 중요성과 실행도를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층이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실제로 이 계층이 이 정책의 구현에 따른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또한 고소득층은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과 관련된 3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은 실행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모든 소득계층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치매노인대책의 실행도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의 차이가 발견된다.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개별사업의 중요도는 중산층에서 더 높지만 실행도 평가는 고소득층에서 더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3. 성장 동력 분야

가.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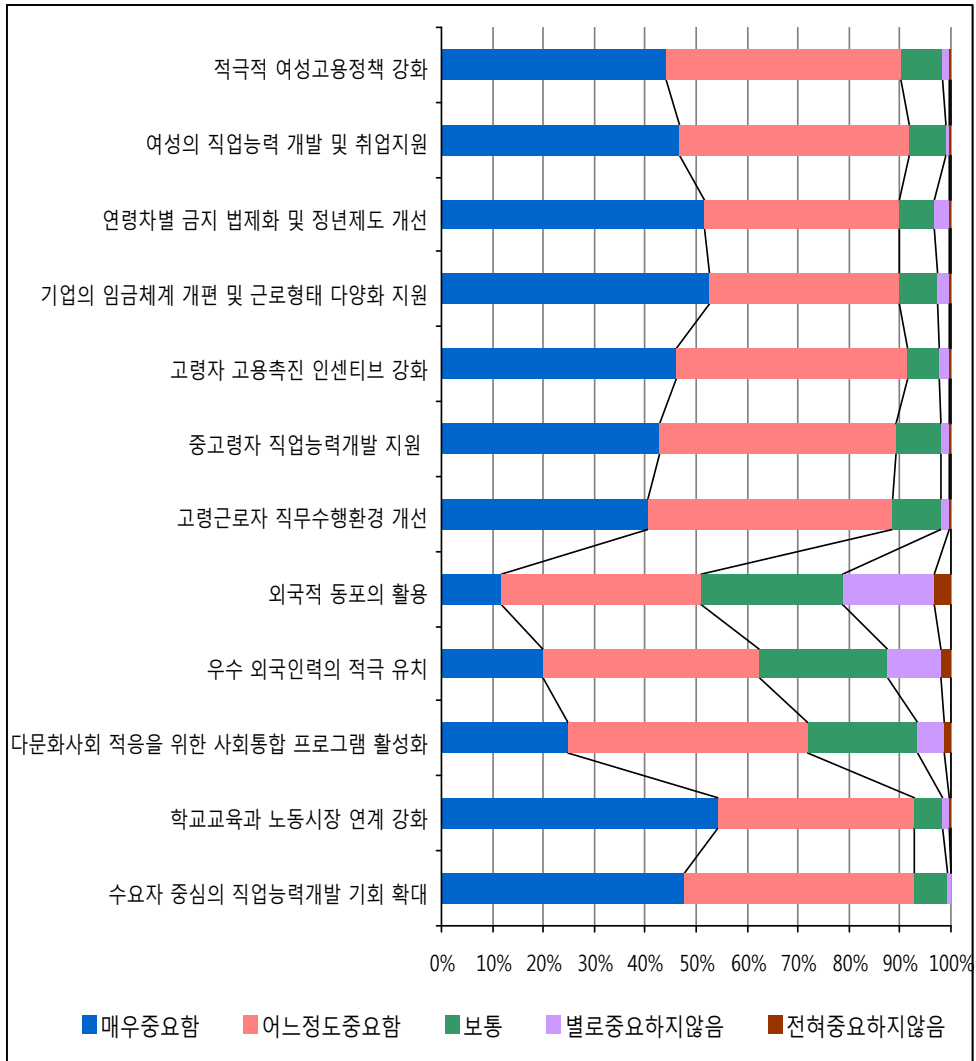
성장 동력 분야의 각 12개 세부영역의 중요도 평균은 4.18점으로, 저출산 영역의 4.45점과 고령화 영역의 4.40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행도는 2.42점으로 저출산 영역의 2.32점보다 높았으며 고령화 영역인 2.62점 보다는 낮았다.

성장동력 분야의 12개 세부영역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실행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을 제외하면 모든 정책이 평균 이상의 중요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 동력 확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분야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지원’로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적 동포의 활용’,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지원’,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로 외국인 고용관련부문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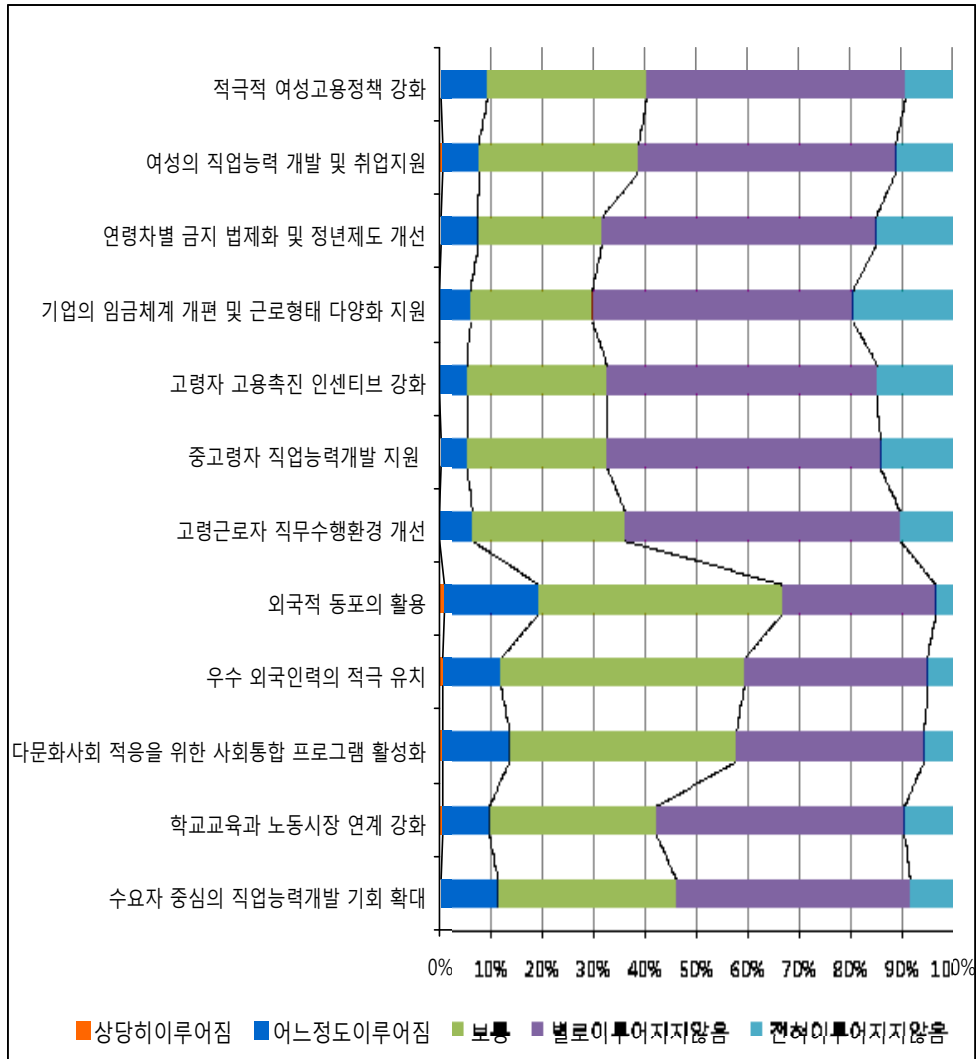
그러나 실행도 측면에서는 중요도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외국인 고용 및 다문화 사회적응 등 외국인 프로그램 3개부문이 실행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았던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업과 같은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는 중요도가 높고, 실행도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적 동포의 활용’,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같은 ‘외국적 동포·외국 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본 조성’은 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나 사업이 과잉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 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등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은 중요도는 높은 사업이나 실행이 잘 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실행도가 낮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도 중요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으나, 실행도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들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7] 성장동력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



[그림 4-8] 성장 동력 분야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실행도



〈표 4-39〉 성장동력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전체)

(단위 : 명, 점)

번호 ¹⁾	세부 영역	N	중요도		실행도		차이	차이검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4,389	4.32	7	2.41	6	1.92	t=110.80***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4,389	4.37	5	2.36	7	2.01	t=119.16***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3,999	4.38	4	2.24	9	2.14	t=110.29***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3,999	4.40	2	2.16	12	2.24	t=116.73***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1,800	4.35	6	2.23	11	2.11	t=78.50***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3,999	4.30	8	2.24	9	2.06	t=114.24***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800	4.27	9	2.33	8	1.95	t=75.30***
8	외국적 동포의 활용	4,389	3.38	12	2.83	1	.55	t=26.15***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4,389	3.68	11	2.67	2	1.01	t=51.00***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4,389	3.89	10	2.66	3	1.23	t=65.67***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4,389	4.45	1	2.43	5	2.02	t=118.26***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4,389	4.40	2	2.49	4	1.90	t=115.32***
12개 항목 전체 (평균)			4.18		2.42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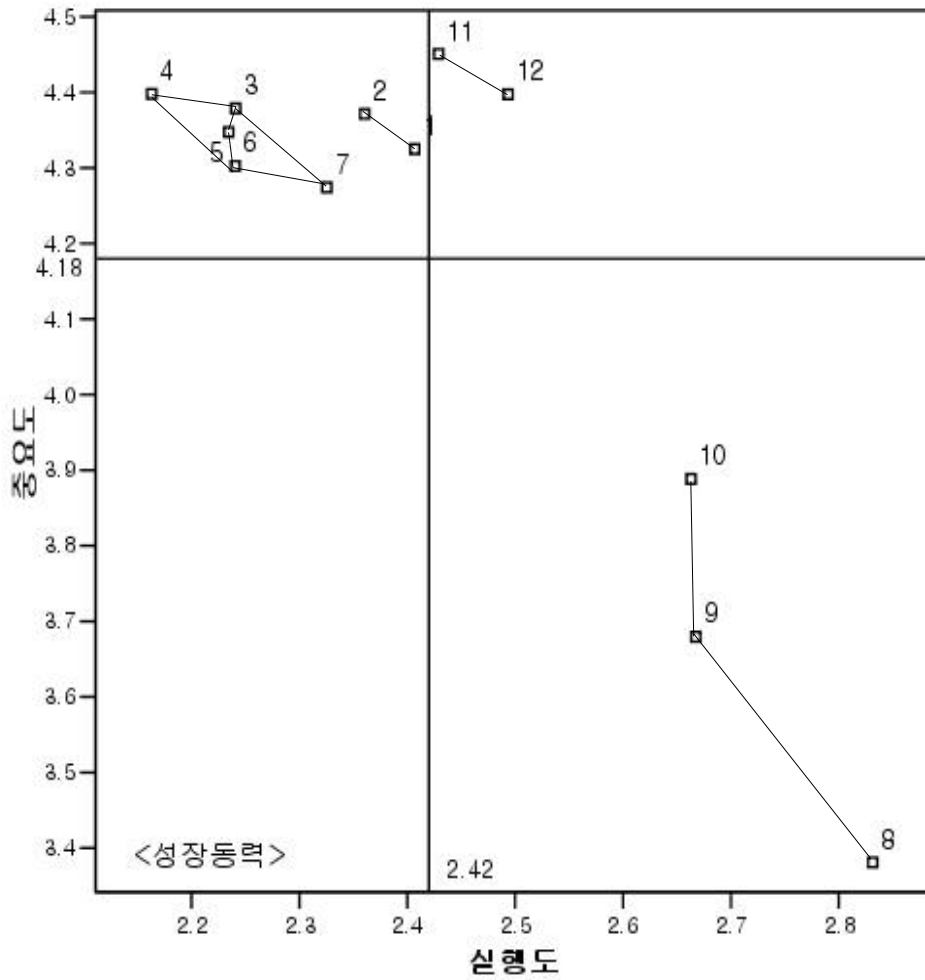
주 1) : 각 번호의 세부 영역 사업에 해당하는 소영역은 아래와 같음.

1~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8~10 :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7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1~12 :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그림 4-9] 성장동력 IPA 그래프 (전체)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직 고령자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청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적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지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나. 집단별 분석 결과¹³⁾

1) 성별 분석 결과

성별로 성장동력 영역의 12개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평균 4.20점으로 남성의 4.17점보다 조금 높았다.

성별 중요도의 차이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도에 대한 평가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요도 크기를 보면 남자의 경우, ‘학교교육의 노동시장연계 강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순서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의 노동시장연계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의 순서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관련 고용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남녀 모두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실행도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실행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상대적인 평가(=실행도/중요도)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모두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을 50%미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49.0%)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51.7%)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평균점수표와 mapping 분석 그래프는 각각 <부록 3>과 <부록 4>에 수록되어 있음.

2)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보면 도시의 경우 중요도는 높게, 실행도는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실행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중요도에 있어서 도시, 농촌 모두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는 ‘기업의 임금체계 및 근로형태’,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개선’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적극적 여성 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행도에서는 남녀의 우선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국인 고용분야의 실행도가 높고 고령자, 중고령자 고용지원 및 임금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인 평가를 보면 도시의 경우,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과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의 실행도가 5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경우에는 기업의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노동시장연계 강화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보다는 농촌의 상대적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소득계층별 특징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도는 높게 생각하는 반면 실행도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소득계층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전 소득 계층에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행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고용과 관련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중 가장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그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는 소득계층별로 우선순위의 큰 변화는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동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실행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대안 평가

1. 출산 및 양육 지원

우리나라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24.2%)’, ‘지원액수가 적은 것(18.6%)’, ‘저소득층에만 거의 지원이 되는 것(1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지원 액수가 적다는 것은 남성이, 저소득층에만 지원된다는 것은 여성이 많이 꼽았고, 연령별로는 40~44세 집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꼽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50만원 미만 집단은 홍보 부족을, 400만원 이상 집단은 저소득층에만 지원된다는 것과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많이 꼽았다.

〈표 4-40〉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단위: %, 명)

	지원액수가 적은 것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	지원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기타	계	(명)	χ^2
전체	18.6	17.0	39.6	24.2	.7	100.0	(3,001)	
연령								
25~39세	19.2	18.0	37.4	24.6	.8	100.0	(2,190)	17.30**
40~44세	17.0	14.3	45.3	22.9	.5	100.0	(812)	
성								
남성	21.4	12.5	39.9	25.4	.8	100.0	(1,540)	52.40***
여성	15.6	21.6	39.2	22.9	.7	100.0	(1,461)	
지역								
동부	18.6	17.4	39.4	23.8	.8	100.0	(2,654)	7.09
읍면부	18.7	13.5	40.6	27.1	-	100.0	(347)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1.8	10.7	31.7	35.3	.4	100.0	(252)	63.52***
150~399만원	20.4	16.4	38.6	24.0	.6	100.0	(1,932)	
400만원 이상	12.7	21.7	45.4	19.2	.9	100.0	(676)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시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안이 4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안(35%)이며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21.7%). 집단별로는 40~44세, 남성, 농촌 거주자,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안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 도시 거주자, 가구소득 150만원 이상 집단은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안을 다른 집단보다 많이 선택했다. 한편,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25~39세, 여성인 경우 선택 비율이 높았다.

〈표 4-41〉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시 방향

(단위: %, 명)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모든 가정에 지원	계	(명)	χ^2
전체	35.0	43.3	21.7	100.0	(3,001)	
연령						
25~39세	33.2	43.4	23.4	100.0	(2,190)	19.76***
40~44세	40.0	43.1	16.9	100.0	(812)	
성						
남성	40.9	40.2	18.8	100.0	(1,541)	51.05***
여성	28.7	46.6	24.7	100.0	(1,460)	
지역						
동부	33.4	45.0	21.6	100.0	(2,653)	30.33***
읍면부	46.8	30.7	22.4	100.0	(34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0.6	29.2	20.2	100.0	(253)	35.36***
150~399만원	34.7	44.3	21.0	100.0	(1,931)	
400만원 이상	30.8	47.1	22.1	100.0	(675)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육비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맞벌이 가정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78.0%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9.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집단별로는 25~39세, 55~64세 집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2〉 맞벌이 가정 보육비 지원

(단위: %,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계	(명)	χ^2
전체	1.9	8.0	12.0	55.4	22.6	100.0	(6,189)	
연령								
25~39세	1.4	6.3	11.6	53.5	27.2	100.0	(2,190)	
40~44세	2.3	8.9	12.6	53.2	23.0	100.0	(812)	
45~54세	3.0	10.9	12.1	56.2	17.8	100.0	(1,386)	85.52***
55~64세	1.6	6.7	11.1	60.9	19.7	100.0	(857)	
65세 이상	1.5	8.0	13.4	55.7	21.5	100.0	(943)	
성								
남성	2.1	7.4	11.6	55.0	23.9	100.0	(3,048)	8.16†
여성	1.8	8.5	12.4	55.8	21.5	100.0	(3,142)	
지역								
동부	2.0	8.0	11.9	55.9	22.2	100.0	(5,159)	5.17
읍면부	1.7	7.8	12.5	53.0	25.0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5	8.8	12.6	56.9	20.2	100.0	(1,360)	
150~399만원	1.9	8.1	12.0	55.5	22.6	100.0	(3,270)	14.85†
400만원 이상	2.5	6.9	10.9	54.8	24.9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한다면 어떤 점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에서는 ‘소득기준 완화(38.7%)’와 ‘지원연령 확대(37.6%)’가 거의 비슷하게 높았고 ‘지원금액 확대’가 23.7%로 가장 낮았다. 집단별로는 남성과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은 지원금액 확대를, 여성과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소득기준 완화를 많이 꼽았다.

〈표 4-43〉 양육수당 확대 방안 (1순위)

(단위: %, 명)

	소득기준 완화	지원아동 연령 확대	지원금액 확대	계	(명)	χ^2
전체	38.7	37.6	23.7	100.0	(3,001)	
연령						
25~39세	39.2	37.0	23.8	100.0	(2,190)	1.19
40~44세	37.5	39.1	23.4	100.0	(811)	
성						
남성	36.3	37.3	26.3	100.0	(1,541)	14.25***
여성	41.3	37.9	20.9	100.0	(1,461)	
지역						
동부	38.7	37.8	23.5	100.0	(2,653)	.82
읍면부	39.1	35.6	25.3	100.0	(34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0.4	35.2	34.4	100.0	(253)	22.32***
150~399만원	39.3	37.4	23.3	100.0	(1,930)	
400만원 이상	40.1	39.8	20.1	100.0	(676)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순위 응답에서는 ‘지원금액 확대(40.2%)’가 가장 높았고, ‘지원연령 확대(38.5%)’, ‘소득기준 완화(21.3%)’ 순이었다. 집단별로는 읍면부 거주자가 지원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많이 꼽았고 동부 거주자는 소득기준 완화를 많이 꼽았다.

〈표 4-44〉 양육수당 확대 방안 (2순위)

(단위: %, 명)

	소득기준 완화	지원아동 연령 확대	지원금액 확대	계	(명)	χ^2
전체	21.3	38.5	40.2	100.0	(3,001)	
연령						
25~39세	21.6	38.7	39.7	100.0	(2,190)	.81
40~44세	20.4	38.2	41.4	100.0	(812)	
성						
남성	19.9	39.4	40.6	100.0	(1,540)	3.59
여성	22.7	37.6	39.7	100.0	(1,460)	
지역						
동부	22.1	38.2	39.8	100.0	(2,654)	8.62*
읍면부	15.2	41.4	43.4	100.0	(34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0.2	41.7	38.1	100.0	(252)	1.58
150~399만원	21.2	38.2	40.5	100.0	(1,930)	
400만원 이상	22.3	38.3	39.3	100.0	(676)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의 저소득층 셋째 아이 중심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모든 가정의 둘째아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동의하는 비율이 82.9%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인 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성, 25~39세, 가구소득 150만원 이상 집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5〉 둘째아 지원

(단위: %,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계	(명)	χ^2
전체	1.1	5.9	10.1	52.9	30.0	100.0	(6,189)	
연령								
25~39세	.9	3.5	9.2	47.7	38.8	100.0	(2,189)	
40~44세	.9	7.0	10.8	53.9	27.3	100.0	(812)	
45~54세	2.2	8.6	9.0	58.6	21.6	100.0	(1,388)	191.43***
55~64세	.4	6.9	10.9	54.0	27.9	100.0	(857)	
65세 이상	.7	5.9	12.3	54.9	26.2	100.0	(944)	
성								
남성	1.2	5.2	11.2	52.4	29.9	100.0	(3,048)	15.27**
여성	.9	6.6	8.9	53.5	30.1	100.0	(3,141)	
지역								
동부	1.0	6.1	10.2	53.3	29.4	100.0	(5,160)	6.96
읍면부	1.3	5.2	9.2	51.2	33.1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7	6.6	10.9	54.1	27.7	100.0	(1,359)	
150~399만원	.8	5.7	9.7	53.4	30.3	100.0	(3,269)	22.56**
400만원 이상	1.9	4.3	10.6	52.9	30.3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회 문화 조성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91%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집단별로는 25~39세, 읍면부 지역 거주자,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46〉 ‘출산과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정도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계	(명)	χ^2
전체	.4	8.7	70.6	20.4	100.0	(6,189)	
연령							
25~39세	.4	8.6	67.0	24.0	100.0	(2,191)	35.60***
40~44세	.2	7.6	73.1	19.1	100.0	(813)	
45~54세	.2	9.5	71.0	19.3	100.0	(1,387)	
55~64세	.2	9.2	72.8	17.7	100.0	(857)	
65세 이상	.6	8.0	73.9	17.5	100.0	(943)	
성							
남성	.6	8.8	70.1	20.6	100.0	(3,049)	9.69*
여성	.1	8.6	71.0	20.3	100.0	(3,141)	
지역							
동부	.4	8.4	71.3	19.9	100.0	(5,159)	9.06*
읍면부	.2	9.8	67.0	23.0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	9.7	70.4	19.4	100.0	(1,360)	45.26***
150~399만원	.3	8.7	72.7	18.4	100.0	(3,269)	
400만원 이상	.2	7.0	66.0	26.9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성, 25~39세,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여성이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많고, 25~39세가 자녀양육이시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⁴⁾.

14) 본 조사 대상에서 맞벌이 비율은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6.3%, 150~399만원 64.3%, 400만원 이상 75.1%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정시퇴근문화 정착의 일가정 양립 도움 정도

(단위: %,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계	(명)	χ^2
전체	.6	6.2	13.7	49.6	29.9	100.0	(6,189)	
연령								
25~39세	.7	5.2	11.4	43.8	39.0	100.0	(2,189)	
40~44세	.9	8.1	11.5	47.3	32.2	100.0	(811)	
45~54세	.9	7.0	13.6	55.0	23.5	100.0	(1,388)	208.60***
55~64세	.5	7.7	14.8	54.0	23.1	100.0	(858)	
65세 이상	.2	4.0	20.3	52.9	22.6	100.0	(944)	
성								
남성	.9	7.3	14.4	49.2	28.1	100.0	(3,049)	25.92***
여성	.4	5.0	13.1	49.9	31.6	100.0	(3,141)	
지역								
동부	.7	6.3	13.5	49.3	30.3	100.0	(5,160)	
읍면부	.5	5.6	15.1	51.0	27.8	100.0	(1,030)	5.1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	6.5	18.8	51.2	23.0	100.0	(1,359)	
150~399만원	.8	5.8	13.0	49.5	30.9	100.0	(3,268)	73.44***
400만원 이상	.4	6.1	10.2	49.1	34.3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72.3%가 동의했으며, 9.7%가 동의하지 않았다. 집단별로는 45~54세,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 40~44세, 농촌 지역 거주자,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8〉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계	(명)	χ^2
전체	1.0	8.7	18.1	57.2	15.1	100.0	(6,189)	
연령								
25~39세	1.8	7.3	20.5	56.7	13.7	100.0	(2,190)	
40~44세	.6	14.2	15.9	56.6	12.7	100.0	(811)	
45~54세	.6	9.0	14.1	60.0	16.3	100.0	(1,387)	94.75***
55~64세	.5	8.2	19.0	55.9	16.5	100.0	(857)	
65세 이상	.3	7.4	19.3	55.9	17.1	100.0	(943)	
성								
남성	1.3	10.1	17.6	54.6	16.4	100.0	(3,049)	34.99***
여성	.6	7.4	18.5	59.7	13.8	100.0	(3,141)	
지역								
동부	.9	8.3	18.2	58.4	14.2	100.0	(5,159)	30.58***
읍면부	1.3	10.7	17.6	51.0	19.4	100.0	(1,0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	10.6	20.1	54.9	13.8	100.0	(1,360)	
150~399만원	1.0	8.4	18.3	58.4	13.9	100.0	(3,269)	33.25***
400만원 이상	1.4	7.3	15.8	57.5	17.9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정책

가. 기초노령연금¹⁵⁾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노인으로 좁히
되 연금액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서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4.8%로 과반수
를 차지했고,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되 금액을 현재 수준이나 현재보다 더 낮
은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에 27.8%가, 대상이나 금액 모두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17.4%가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25~39세와 55~64세,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은 대상 확대 응답

15)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가졌을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별도로 수행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희 외(2009c) 참조

비율이, 45~54세, 농촌지역 거주자는 현행 수준 유지 응답 비율이, 도시 지역 거주자와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은 대상 제한 및 급여액 확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49〉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방향

(단위: %, 명)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금액 상향	모든 노인에게 현재 수준이나 더 낮은 금액	현행 수준 유지	계	(명)	χ^2
전체	54.8	27.8	17.4	100.0	(6,189)	
연령						
25~39세	54.5	30.2	15.3	100.0	(2,190)	
40~44세	55.8	27.0	17.2	100.0	(812)	
45~54세	55.7	24.1	20.2	100.0	(1,388)	25.46**
55~64세	53.2	29.3	17.5	100.0	(857)	
65세 이상	54.8	26.8	18.4	100.0	(944)	
성						
남성	56.0	27.4	16.6	100.0	(3,048)	4.25
여성	53.6	28.1	18.2	100.0	(3,141)	
지역						
동부	56.0	27.8	16.3	100.0	(5,159)	31.12***
읍면부	49.0	27.8	23.2	100.0	(1,03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6.8	24.2	19.1	100.0	(1,358)	
150~399만원	56.0	27.1	16.9	100.0	(3,270)	35.75***
400만원 이상	49.4	34.1	16.5	100.0	(1,199)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등 외국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0.5%로 바람직하다는 응답 27.7%에 비해 높았으며,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31.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다. 집단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농촌 지역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젊은 연령대인 경우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향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 인력 유치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수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0〉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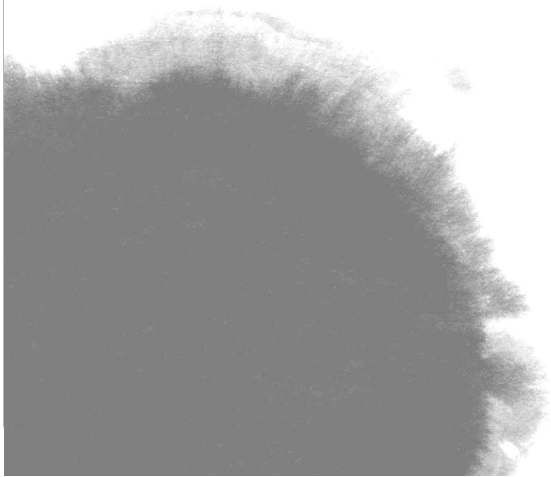
(단위: %, 명)

	전혀 바람직 하지않다	별로 바람직 하지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바람직 하다	상당히 바람직 하다	계	(명)	χ^2
전체	8.7	31.8	31.9	26.2	1.5	100.0	(6,189)	
연령								
25~39세	5.7	24.9	39.1	28.0	2.5	100.0	(2,189)	
40~44세	6.3	30.0	33.3	29.0	1.5	100.0	(811)	
45~54세	9.7	36.1	27.5	25.7	1.0	100.0	(1,387)	220.87***
55~64세	12.0	37.9	25.6	23.7	.8	100.0	(857)	
65세 이상	13.0	37.4	26.1	22.6	.8	100.0	(943)	
성								
남성	9.4	29.5	29.7	29.2	2.2	100.0	(3,049)	59.46***
여성	7.9	34.0	33.9	23.2	.9	100.0	(3,141)	
지역								
동부	7.7	30.7	33.3	26.7	1.5	100.0	(5,160)	64.26***
읍면부	13.3	36.9	24.8	23.4	1.6	100.0	(1,02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2.2	37.4	28.4	21.0	1.0	100.0	(1,360)	
150~399만원	8.0	31.3	33.2	25.9	1.6	100.0	(3,270)	116.58***
400만원 이상	5.3	25.8	33.2	34.0	1.8	100.0	(1,200)	

† p<0.1, *p<0.05, **<0.01, ***<0.001

주: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1 절 제1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평가

1.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행도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낮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제 1차 기본 계획에서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이 기존의 취약 계층 위주의 복지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집단 보다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주로 기존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소득 수준만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 대상을 삼고 있어 이는 정책 체감도를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과 모성 보호 사업을 살펴 보면 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대부분의 경우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부 중 세자녀 이상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¹⁶⁾.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

1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결과에 따르면 30~44세 기혼여성 중 3자녀 이상 비율은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및 두 자녀 가정 등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1〉 저출산 영역 정책별 대상자

정책		대상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출산 이후 청약 가능 - 저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로 기준 완화 - 공급순위는 결혼년차에 따라 결정(1순위: 결혼 3년 이내, 3순위 결혼 5년 이내)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많은 사람이 우선 → 추첨 · 구입/전세 자금 지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 저리의 자금 지원 - 구입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4.5%, 2년 상환(최장 6년), 6천만원 한도
보육·교육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하위 50%이하 전액 지원, 그 외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수당 지원*	·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 지급
	아이돌보미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이용요금의 80%지원, 100%이하: 이용요금의 20%지원
	방과후 학교 이용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호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및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차상위계층 등)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이용 쿠폰 지원(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
모성 보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30% 이하 가구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둘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급여 액수와 미흡한 서비스 지원 수준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육 수당 월 10만원 수준은 자녀 양육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육아 휴직 급여인 월 50만원은 여성의 기회 비용을 보상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보육 시설의 정규 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끝나며 3

시 이후에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특기 적성’ 수업을 신청해야 한다. 특기 적성 수업에 대한 비용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실제로 국민들이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지원 대상을 보편화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할 때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실행도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비·교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지원하고 소득하위 70%까지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어(2009년 7월 이후 기준) 실행도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¹⁷⁾. 그동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 민간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야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과 같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에 힘입어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역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행도 체감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다른 저출산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민간 보육 서비스 질 개선,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 보육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보편화와 급여수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육 시설 확보, 주거 지원, 모성 보호를 위한 보건 의료 시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이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지원에 대한 실행도 체감률이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실로 국공립 보육 시설은 그동안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되었으며, 민간 보육 시설 역시 수익성의 이유로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은 아파트 청약시 우선순위

17)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영유아 기준보육료를 차등지원하며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장애아 영유아로 확대된다.

부여 등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섯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은 기업 문화 조성 등 캠페인 사업에만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 기업이 실제로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흡했다.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은 여성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에 턱 없이 낮은 수준이며 휴직 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했다.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미비하게 이루어져 왔다.

2. 고령화 분야

본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노년기의 삶의 질 확보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개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소득과 건강보장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이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개의 중영역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기초노령연금확대,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정책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렇듯 국민들은 노후의 삶의 질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확보와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수행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도 평가에서는 순위가 낮다고 해서 노인의 삶에 있어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적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할 우선순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노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가 추국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적정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변재관 외, 1998) 노년기의 4대 고통(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노인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정책의 수행과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군별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노인층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노인층은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연령자체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생애주기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비노인층은 지금부터 계속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노인들은 이미 적절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보다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과 관련한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예상되는 건강과 기능상의 악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인의 삶에 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된 각종 연금제도의 개선과 변화에 대하여 노인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사가 높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책입안과 수행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대체적으로 포괄성이 높은 정책(예: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일 수록 정책 실행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약 3조4천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경우 국민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적 관심을 표명한 사업의 경우 국민들도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0년부터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2008년에 치매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표 5-2〉 고령화 영역 정책별 대상자

	정책	대상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노인의 70%에게 월 8만8천원 지급(2009년 기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노인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1-3등급) 및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치매조기검진	60세 이상 전체, 저소득층 우선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60세 이상 전체(안검진), 차상위 이하(개안수술)
	66세 생애 전자기건강진단	66세 건보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인주거복지시설	도시, 65세 이상 수급자(무료), 평균소득이하자(실비)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
	노인복지주택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도시 하위 70%)
활동적인 노인사회 참여여건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여행프로그램	65세 이상
	경로우대제	65세 이상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반면 정책이 발표만 되었을 뿐 적용범위가 적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도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평가도 낮은 편인데,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며, 실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그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3. 성장 동력 분야

성장 동력 분야 역시 국민들이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여성·고령자 등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에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잠재 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잠재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도는 도시와 중산층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실행도는 농촌과 저소득층 이하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제까지의 인력 활용 정책이 고급 인력 양상보다는 소득 보전 측면에서 농촌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취약계층 중심의 인력 활용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행도는 이들 계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제까지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이 여성 고급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 후에도 오랫동안 직장에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 및 고소득층의 경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정책 역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자립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여성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한 반면 남성의 경우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전히 성별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중요성이 아주 낮은 반면, 실행도는 높아 국민들이 외국인 정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제까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정책을 추진하였을 뿐, 내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한계점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적 동포 및 외국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음을 의미하며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2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방향성

1. 저출산 분야

가. 전반적인 추진 방향

2차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 개발과 더불어 기존 정책의 내실화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을 중점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급여 및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족친화 양성 평등 사회 문화 조성’을 보다 강조함과 동시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 문화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은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저출산 정책 방향성이 기존의 양육지원 중심에서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다른 영역 사업도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지향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부부 및 직장 여성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한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정책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은 소득 수준과는 거의 무관하게 전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취약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청되므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과 예산 확보에 대한 전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 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 보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실행도 체감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정책의 지원 대상을 양육 담당자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 바우처 제공, 양육 수당 급여 대상자 등 수혜 대상자를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현금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만으로도 보육 시설의 종일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전액 지원’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육 수당도 현재 10만원에서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 휴직 급여의 수준 역시 여성의 기회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금 및 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의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결혼관, 자녀관 등 가족 가치관 함양을 비롯하여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독려 등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책 추진 방향

위에서 언급한 사업 이외 기타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충이다. 현재 보육 서비스의 가장 심각한 사각 지대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정책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실행도 체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이 영유아 보육 서비스 확충에만 치중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의 부족으로 많은 수의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후에 학원으로 보내어 지고 있다. 민간 사설 학원에서는 간식 및 급식 제공 등 적절한 보육 등이 어렵고 학원과 집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역시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의 발달 과정에 적절한 보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학교 숙제 돌봐주기, 간식 및 급식, 준비물 챙겨주기, 안내장 돌봐 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하여 현금 지원 방식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집세를 내고 있거나 혹은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경우 자녀 수, 소득 수준, 거주지, 집세 및 월간 대출 상환금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을 수리, 개량, 배수 및 단열 공사를 할 때 주거 개선을 위한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주택 공급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난방비, 수도비, 전기세, 하수물 처리비 등 실제 주거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은 현재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에 속하는 농촌 지역 자녀 양육 가정에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 체감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혼부부 출발 지원 사업을 청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이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및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청년들의 결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청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소자화 대책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청년의 취업 지원 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넷째, 농촌 지역의 보육 서비스 및 모성 보건 지원 인프라 확충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국공립 보육 시설 설립 등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보육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농번기 보육 수요 급증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사회 중심의 보육 품앗이 혹은 민간 단체를 활용한 보육 서비스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성 보호 프로그램으로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 보건 인프라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출산 후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여성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정부 지원금 제공 등 실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가사 및 육아 활동 참여, 기업의 경직적인 조직 문화 개선, 가정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여 오고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근절 대책 강화’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고령화 분야

가. 전반적인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고령화 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즉 공적인 안정망 구축이 우선이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을 사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구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본 연구가 실시한 조사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노후생활에 당면하게 될 소득상실과 기능저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작단계라는 점을 고려해보다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적인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관련 비전과 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현재 공적연금소득을 가진 노인은 약 36%에 불과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70%가 수급대상이지만 지급액이 최대 8만8천원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급여수준이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현재 노인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어 향후 급여대상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시설 및 인적 인프라 확보 등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의 개별정책에 있어서도 향후 공적인 책임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민간영역에서 제고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적이 노후소득안정 구축과 더불어 개개인의 노후준비는 공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균형있게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공

공부조, 사적 연금 등을 통한 추가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정경희, 2005). 실제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 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아 국민들이 전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노후준비의 근간을 정부가 마련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정경희 외, 2005).

둘째, 미래노인의 욕구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연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의 노후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 및 다층적인 노후소득 준비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각 연령대별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국민의 정책체감도를 높힐 수 있는 한 방안일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에게는 개인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50대 이후에게는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미래의 노인이 될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영위, 노후생활설계 등에 관심이 높다. 본 조사에서도 연령군이 낮을수록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방법에 관한 전국조사에 의하면(이소정 외, 2008; 정경희 외, 2005) 상대적으로 젊은층 일수록 자원 봉사, 자아 개발,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과 같은 상위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활동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1차 기본계획에 비하여 이러한 미래노인의 변화하는 욕구에 상응하는 제도기반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원봉사 활성화 등과 같은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 및 정책방안의 구체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도에 실시된 1차 기본계획 보완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이라는 중영역하에 속해 있던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이 독립적인 중영역으로 분리되어 제시됨으로써 노인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향후 이루어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생애주기 전반 및 생애주기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재정, 건강,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농촌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행도 평가가 낮은 편이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건강 및 요양 보호 정책에 있어 고소득층(본 연구에서는 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집단)이 저소득층(본 연구에서는 월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정책 실행도 평가가 부정적이다. 이는 도시지역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고소득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기본적인 정책을 내실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지역 특화된 정책, 고소득층의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사회참여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은 노인층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제도 설계자체와 관련되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의 경우 전국민으로부터의 실행도 체감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target group을 대상으로한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모든 정책에 있어 국민의 높은 체감도를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각 정책별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정책개발과 홍보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

무엇보다 먼저 소득 및 건강보장과 같은 기본욕구 충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중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들 영역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행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것이다. 또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기본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

축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이 될 세대들도 노후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며 그러한 개인적인 관심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호주, 아일랜드와 함께 전체소득 대비 소득의 크기가 적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노후소득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OECD, 2009)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1차 안전망인 공적연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여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불안정이 내재해있고, 납부예외자 규모가 20%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정경희, 2009b)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의 역사가 짧고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도입의 역사가 긴 선진국의 경우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연금 수급기간을 조정하고,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간의 균형 달성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각종 직역연금의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의 상호연계와 역할분담의 명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등도 균형 잡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World Bank, 1994). 즉,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적연금내실화를 가장 큰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적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정적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공적연금제도 조차도 아직 국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보다는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둘째,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아직 예방보다는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국민의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요양보호기반 마련과 관련한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매노인보호대책 및 장기요양보호체계구축에 관심이 많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치매노인보호대책 및 장기요양보호체계구축의 경우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즉,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3등급인 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해갈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적용범위의 확대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확대, 인지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매 치료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지원, 치매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등과 같은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라는 큰 틀 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치매등록관리 D/B 구축 및 지원, 치매노인 실종방지 및 찾아주기 사업 강화, 치매환자 부양 부담의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이 구체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 향상 등과 같은 질적인 수준 증대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대 및 기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 제고를 통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 제고 등이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김찬우,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소득창출로서의 측면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의 확대 뿐만 아니라 노인 욕구에 근거한 근로형태 다양화 및 급여 차등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내용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있는 사업중심으로 내실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을 개발, 우수 아이템을 모델화하여 보급하는 것과 같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기반 수익창출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 노동부 및

공공기관 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 사회서비스일자리 연계 추진과 같은 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해온 이슈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떠오르는 이슈들(emerging issues)에 대한 내용이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성, 심리적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상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제특성 변화에 따라 노인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인의 사회적·정치적 발언권 강화와 관련된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3. 성장 동력 분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잠재인력 활용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약 계층 대상의 소득 보전 정책에서 고급 인력 활용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여성 고급 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전문직 고령 은퇴자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여성 고급 인력 활용의 예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겨 왔던 분야에서 탈피하여 정보 및 첨단산업과 같이 미래 사회에서 각광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진출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잠재 인력 활용에 대한 연령별, 성별 인식 차이 극복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적 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제도 확산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정년제도 연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임금 비숙련 직종뿐만 아니라 고임금 전문직 직종에 대한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년제도 연장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등)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기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성장동력사업은 개별영역으로 분리하여 집행, 운영되어 왔으나 사업 운영상 저출산 영역 및 고령화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부분은 저출산 영역과,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부분은 고령화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집행 및 운영상 정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곤 했었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성장 동력 분야 사업의 재구성하여 각 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영역의 통합 및 재구성은 전문가 및 정책 집행자의 의견, 사업성과 평가 및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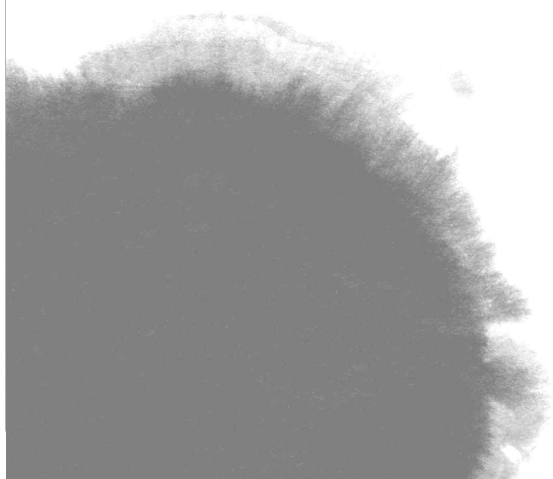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인호(2004),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214-239.
- 고길곤·하혜영(2008),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287-329.
- 국민연금공단(2008),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 김영원의 8인(2005), 『조사방법의 이해』,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2000),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자유아카데미.
- 김종호 외(2003), 『표본조사 입문』, 자유아카데미.
- 김찬우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년: 주요 쟁점별 평가와 대안들’,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9. 6 29.
- 대한민국 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박홍래(1993),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 보건복지가족부(2006),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도자료
 _____(2007),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월드리서치.
 _____(2008),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월드리서치.
 _____(2009),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변재관 외(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홍식(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평가와 전망”, 『젠더리뷰』, 2006 여름호:24~33.
- 이계오·박진우·이기재(2004), 『표본조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삼식(2008),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2008),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 이정실(2006), ‘AHP를 이용한 호텔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우선순위분석’, 『관광연구』, 21(3):81-95.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165-183.
- 정경희(2009a),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Issues & Focus』 제1호(2009-1)
- _____(2009b),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사회포럼』, 2009.
- _____(2009c),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5),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마련』,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운주(2007), ‘AHP를 이용한 의복평가기준의 우선순위 분석’, 『한국의료산업학회지』, 9(1):81-88.
- 최기종·박상현(2001), ‘IPA를 이용한 관광지 평가: 산정호수 사례연구’, 『한국호텔경영학회지』, 10(1):275-289.
- 최진욱·구교준·김태은(2007),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1):73-96.
-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2(2): 97-117.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KOSIS.
- _____(2007), 『사회통계조사』, KOSIS.

- 內閣府(2009), 『平成21年版 少子化社會白書』 .
- 內閣府(2009), 『少子化對策に關する特別世論調査』 .
- Axelrod, R.(1973),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Perception and Cogn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1248-1266.
- Chamber, R. L. & Skinners, C. J.(2002), *Analysis of Survey Data*, John Wiley & Sons.
- Cochran, W. G.(1976), *Sampling Techniques*, 3rd Eds. John Wiley & Sons.
- Hochberg, J.(1956), "Perception: Toward the Recovery of a Definition", *Psychological Review*, 63(6):400-405.
- Kalton, G. Heeringa, S.(2003), 『Leslie Kish selected papers』 , John Wiley & Sons.
- Kish, L.(1995), 『Survey Sampling』 , John Wiley & Sons.
- Lohr, S. L.(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 Duxbury Press.
- Martilla, J. and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13-17.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
- Saaty, T. 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p.14-20.
- _____ (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5:64-69.
- Salancik, G. R. & Pfeffer, J.(1977), "An Examination of Need-Satisfaction Models of Job Attitud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3): 427-256.
- Skinner, C. J.(1989), 『Analysis of Complex Surveys』 , John Wiley & Sons.
- The World Bank(1994), 『The Averting Old-Age Crisis』 , 1994. 2.
- Thompson, S. K.(2002), 『Sampling』 , 2nd Eds, John Wiley & Sons.
- Westat(1994). 『Current Best Methods Manual』 , Westat Inc.

부 록





부록

부록 1 - 표본 할당표

〈부표 1〉 지역, 성, 연령별 표본 할당표

지역	동부/ 읍면부	모집단								표본수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이상		합계	25~39세		40~54세		55~64세		65세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동부	3,420	3,342	2,641	2,793	1,079	1,098	702	983	16,058	286	280	221	234	90	92	59	82	1,345
부산	동부	968	970	963	1,034	412	432	292	440	5,511	81	81	81	87	35	36	24	37	462
	읍면부	22	13	20	16	18	18	18	16	141	2	1	2	1	2	2	2	1	12
대구	동부	625	577	646	726	245	257	164	259	3,499	52	48	54	61	21	22	14	22	293
	읍면부	46	42	36	39	20	26	15	19	243	4	4	3	3	2	2	1	2	20
인천	동부	680	718	705	612	174	184	154	242	3,469	57	60	59	51	15	15	13	20	291
	읍면부	8	13	14	16	16	13	14	28	122	1	1	1	1	1	1	1	2	10
광주	동부	359	386	308	341	138	137	99	168	1,936	30	32	26	29	12	11	8	14	162
대전	동부	419	401	359	355	119	113	73	107	1,926	35	34	30	28	10	9	6	9	161
울산	동부	254	253	241	264	76	62	32	49	1,231	21	21	20	22	6	5	3	4	103
	읍면부	30	56	55	39	15	14	9	19	237	3	5	5	3	1	1	1	2	20
경기	동부	2,767	2,875	2,505	2,342	651	668	520	803	13,131	232	241	210	196	55	56	44	67	1,100
	읍면부	519	497	508	446	168	188	179	252	2,757	43	42	43	37	14	16	15	21	231
강원	동부	186	155	199	228	87	87	63	90	1,095	16	13	17	19	7	7	5	8	92
	읍면부	93	82	157	172	76	79	87	144	890	8	7	13	14	6	7	7	12	75
충북	동부	272	262	247	240	74	70	40	66	1,271	23	22	21	20	6	6	3	6	106
	읍면부	88	67	127	138	88	92	114	173	887	7	6	11	12	7	8	10	14	74
충남	동부	225	227	179	153	30	36	36	44	930	19	19	15	13	3	3	3	4	78
	읍면부	243	208	274	276	166	144	162	249	1,722	20	17	23	23	14	12	14	21	144
전북	동부	267	262	337	333	104	93	70	140	1,606	22	22	28	28	9	8	6	12	135
	읍면부	156	113	118	125	74	104	125	184	999	13	9	10	10	6	9	10	15	84
전남	동부	242	233	243	243	70	71	62	112	1,276	20	20	20	20	6	6	5	9	107
	읍면부	152	140	189	217	140	153	215	371	1,577	13	12	16	18	12	13	18	31	132
경북	동부	404	412	394	373	113	106	68	111	1,981	34	35	33	31	9	9	6	9	166
	읍면부	238	185	296	278	166	218	237	336	1,954	20	15	25	23	14	18	20	28	164
경남	동부	514	566	523	515	145	153	113	168	2,697	43	47	44	43	12	13	9	14	226
	읍면부	333	300	280	241	106	143	152	208	1,763	28	25	23	20	9	12	13	17	148
제주	동부	134	129	78	73	28	33	15	24	514	11	11	7	6	2	3	1	2	43
	읍면부	23	12	23	21	27	27	30	48	211	2	1	2	2	2	2	3	4	18

부록 2 - AHP 분석 대상자 수

〈부표 2〉 AHP 분석 대상자 수

변수	구간	CR<=0.1				CR<=0.2			
		중영역or소영역		중영역&소영역		중영역or소영역		중영역&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전체	전체 (N=6,189)	4,645	4,759	3,936	3,936	5,617	5,677	5,263	5,263
			6,189		3,936		6,189		5,263
			6,189		3,936		6,189		5,263
		4,740	6,189	4,015	4,015	5,703	6,189	5,405	5,405
			6,189		4,015		6,189		5,405
			6,189		4,015		6,189		5,405
			4,745		4,015		5,743		5,405
			4,802		4,157		5,892		5,610
			4,867		4,157		5,892		5,610
			4,867		4,157		5,892		5,610
연령	25~39세 (N=2,326)	1,661	1,724	1,393	1,393	2,084	2,134	1,960	1,960
			2,326		1,393		2,326		1,960
			2,326		1,393		2,326		1,960
		1,758	2,326	1,492	1,492	2,139	2,326	2,025	2,025
			2,326		1,492		2,326		2,025
			2,326		1,492		2,326		2,025
			1,745		1,492		2,153		2,025
			1,798		1,564		2,196		2,117
			1,812		1,564		2,208		2,117
			1,812		1,564		2,208		2,117
	40~54세 (N=2,151)	1,644	1,648	1,379	1,379	1,947	1,961	1,815	1,815
			2,151		1,379		2,151		1,815
			2,151		1,379		2,151		1,815
		1,638	2,151	1,376	1,376	1,965	2,151	1,856	1,856
			2,151		1,376		2,151		1,856
			2,151		1,376		2,151		1,856
			1,645		1,376		1,985		1,856
			1,677		1,444		2,004		1,933
			1,696		1,444		2,043		1,933
			1,696		1,444		2,043		1,933
	55~64세 (N=838)	663	675	573	573	783	768	727	727
			838		573		838		727
			838		573		838		727
		663	838	557	557	773	838	735	735
			838		557		838		735
			838		557		838		735
			647		557		781		735
			648		548		803		759
			655		548		803		759
			655		548		803		759
	65세이상 (N=874)	677	712	591	591	803	814	761	761
			874		591		874		761
			874		591		874		761
		681	874	590	590	826	874	789	789
			874		590		874		789
			874		590		874		789
			708		590		824		789
			689		601		838		801
			704		601		838		801
			704		601		838		801
성별	남자 (N=2,793)	2,119	2,136	1,787	1,787	2,534	2,552	2,373	2,373
			2,158		1,787		2,793		2,373
			2,793		1,787		2,793		2,373
		2,125	2,793	1,794	1,794	2,550	2,793	2,419	2,419
			2,793		1,794		2,793		2,419
			2,793		1,794		2,793		2,419
			2,131		1,794		2,593		2,419
			2,158		1,879		2,667		2,522
			2,221		1,879		2,667		2,522
			2,221		1,879		2,667		2,522

〈부표 2〉 계속

변수	구간	CR<=0.1				CR<=0.2			
		중영역or소영역		중영역&소영역		중영역or소영역		중영역&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중영역	소영역
성별	여자 (N=3,396)	2,526	2,623	2,149	2,149	3,083	3,125	2,890	2,890
			3,396		2,149		3,396		2,890
			3,396		2,149		3,396		2,890
		2,615	3,396	2,221	2,221	3,153	3,396	2,986	2,986
			3,396		2,221		3,396		2,986
			3,396		2,221		3,396		2,986
			2,614		2,221		3,150		2,986
			2,644		2,278		3,195		3,088
			2,646		2,278		3,225		3,088
			2,646		2,278		3,225		3,088
지역	도시 (N=5,015)	3,764	3,829	3,179	3,179	4,557	4,589	4,256	4,256
			3,904		3,179		4,722		4,256
			5,015		3,179		5,015		4,256
		3,856	5,015	3,256	3,256	4,637	5,015	4,400	4,400
			5,015		3,256		5,015		4,400
			5,015		3,256		5,015		4,400
			3,837		3,256		4,666		4,400
			3,904		3,378		4,722		4,560
			3,942		3,378		4,772		4,560
			3,942		3,378		4,772		4,560
	농촌 (N=1,174)	881	930	757	757	1,060	1,088	1,007	1,007
			1,174		757		1,174		1,007
			1,174		757		1,174		1,007
		884	1,174	759	759	1,066	1,174	1,005	1,005
			1,174		759		1,174		1,005
			1,174		759		1,174		1,005
			908		759		1,077		1,005
			898		779		1,081		1,050
			925		779		1,120		1,050
			925		779		1,120		1,050
소득	~199만원 (N=1,992)	1,499	1,532	1,266	1,266	1,793	1,818	1,673	1,673
			1,992		1,266		1,992		1,673
			1,992		1,266		1,992		1,673
		1,496	1,992	1,289	1,289	1,832	1,992	1,736	1,736
			1,992		1,289		1,992		1,736
			1,992		1,289		1,992		1,736
			1,535		1,289		1,847		1,736
			1,552		1,340		1,861		1,804
	200~399만원 (N=2,658)	1,975	2,035	1,676	1,676	2,396	2,434	2,249	2,249
			2,658		1,676		2,658		2,249
			2,658		1,676		2,658		2,249
		2,058	2,658	1,731	1,731	2,445	2,658	2,323	2,323
			2,658		1,731		2,658		2,323
			2,658		1,731		2,658		2,323
			2,038		1,731		2,472		2,323
			2,067		1,784		2,493		2,413
	400만원이상 (N=1,178)	898	902	750	750	1,095	1,093	1,027	1,027
			1,178		750		1,178		1,027
			1,178		750		1,178		1,027
		906	1,178	764	764	1,097	1,178	1,037	1,037
			1,178		764		1,178		1,037
			1,178		764		1,178		1,037
			896		764		1,096		1,037
			908		799		1,113		1,076
			945		799		1,124		1,076

부록 3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평균 점수

〈부표 3-1〉 성별 저출산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남성					여성					남여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1,540	3.78	27	2.03	27	1,461	3.84	27	2.09	24	n.s.	t=-2.01*
2	1,540	4.26	24	2.19	23	1,461	4.20	25	2.23	19	t=2.02*	n.s.
3	1,540	4.48	10	2.67	1	1,461	4.62	9	2.76	1	t=-5.71***	t=-2.91**
4	1,540	4.30	21	2.22	21	1,461	4.45	18	2.11	23	t=-5.11***	t=3.21**
5	1,540	4.41	14	2.27	15	1,461	4.56	11	2.33	11	t=-5.33***	t=-1.99*
6	1,540	4.35	18	2.21	22	1,461	4.48	17	2.24	18	t=-5.11***	n.s.
7	1,540	4.36	17	2.25	18	1,461	4.38	23	2.29	17	n.s.	n.s.
8	1,540	4.37	16	2.36	9	1,461	4.43	22	2.39	9	t=-2.03*	n.s.
9	1,540	4.44	11	2.44	6	1,461	4.53	12	2.51	4	t=-3.16**	t=-2.14*
10	1,540	4.32	20	2.51	3	1,461	4.45	18	2.54	3	t=-4.70***	n.s.
11	1,540	4.42	13	2.41	8	1,461	4.50	16	2.51	4	t=-3.00**	t=-3.15**
12	1,540	4.30	21	2.28	13	1,461	4.44	21	2.31	14	t=-5.38***	n.a.
13	1,540	4.43	12	2.46	4	1,461	4.52	13	2.45	6	t=-3.99***	n.a.
14	1,540	4.28	23	2.27	15	1,461	4.45	18	2.32	13	t=-5.82***	n.a.
15	1,540	4.35	18	2.30	12	1,461	4.52	13	2.35	10	t=-6.78***	t=-1.77†
16	2,242	4.53	7	2.33	10	2,147	4.64	8	2.31	14	t=-5.85***	n.s.
17	2,242	4.49	9	2.17	24	2,147	4.61	10	2.09	24	t=-6.20***	t=2.86**
18	2,242	4.51	8	2.17	24	2,147	4.65	6	2.08	26	t=-7.78***	t=3.50**
19	2,242	4.41	14	2.13	26	2,147	4.52	13	2.08	26	t=-5.17***	t=2.33*
20	2,242	4.10	26	2.24	20	2,147	4.10	26	2.19	22	n.s.	t=2.24*
21	2,242	4.18	25	2.25	18	2,147	4.26	24	2.23	19	t=-3.26**	n.s.
22	2,242	4.58	5	2.55	2	2,147	4.66	4	2.58	2	t=-4.57***	n.s.
23	2,242	4.68	3	2.43	7	2,147	4.74	3	2.42	8	t=-3.55***	n.s.
24	2,242	4.71	1	2.45	5	2,147	4.79	1	2.43	7	t=-5.32***	n.s.
25	2,242	4.71	1	2.26	17	2,147	4.78	2	2.23	19	t=-4.82***	n.s.
26	2,242	4.57	6	2.31	11	2,147	4.65	6	2.33	11	t=-4.69***	n.s.
27	2,242	4.59	4	2.28	13	2,147	4.66	4	2.31	14	t=-4.15***	n.s.
		4.40		2.31			4.50		2.32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돌봄지원

-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 가정의 돌봄·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야간 보육 활성화
-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불임부부 지원
- 산모도우미 지원

인근 가정의 양립 연결 중심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중심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심정인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심정인경 조성 사회정책 지원 시스템 역립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부표 3-2〉 지역별 저출산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동부					읍면부					지역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2,654	3.81	27	2.07	27	348	3.82	27	2.03	27	n.s.	n.s.
2	2,654	4.24	24	2.22	20	348	4.16	25	2.16	23	n.s.	n.s.
3	2,654	4.55	9	2.69	1	348	4.51	10	2.94	1	n.s.	t=-4.85***
4	2,654	4.37	20	2.13	23	348	4.35	23	2.43	8	n.s.	t=-5.61***
5	2,654	4.48	11	2.29	13	348	4.49	11	2.35	13	n.s.	n.s.
6	2,654	4.41	17	2.21	22	348	4.46	14	2.33	16	n.s.	t=-2.43*
7	2,654	4.37	20	2.27	17	348	4.38	21	2.23	20	n.s.	n.s.
8	2,654	4.39	18	2.39	9	348	4.44	17	2.28	19	n.s.	t=2.28*
9	2,654	4.48	11	2.46	4	348	4.48	12	2.58	2	n.s.	t=-2.67**
10	2,654	4.38	19	2.52	3	348	4.39	19	2.57	3	n.s.	n.s.
11	2,654	4.46	15	2.46	4	348	4.45	15	2.45	7	n.s.	n.s.
12	2,654	4.37	20	2.29	13	348	4.37	22	2.31	17	n.s.	n.s.
13	2,654	4.47	14	2.45	6	348	4.53	9	2.51	5	t=-1.79†	n.s.
14	2,654	4.35	23	2.29	13	348	4.43	18	2.35	13	t=-1.70†	n.s.
15	2,654	4.43	16	2.31	11	348	4.45	15	2.43	8	n.s.	t=-2.34*
16	3,838	4.59	7	2.31	11	550	4.57	7	2.40	11	n.s.	t=-2.17*
17	3,838	4.55	9	2.13	23	550	4.48	12	2.15	25	t=2.38*	n.s.
18	3,838	4.58	8	2.11	25	550	4.55	8	2.17	22	n.s.	n.s.
19	3,838	4.48	11	2.10	26	550	4.39	19	2.12	26	t=2.59*	n.s.
20	3,838	4.10	26	2.22	20	550	4.11	26	2.16	23	n.s.	t=1.85†
21	3,838	4.22	25	2.24	18	550	4.21	24	2.20	20	n.s.	n.s.
22	3,838	4.62	5	2.56	2	550	4.61	4	2.57	3	n.s.	n.s.
23	3,838	4.72	3	2.42	8	550	4.68	3	2.43	8	n.s.	n.s.
24	3,838	4.75	1	2.43	7	550	4.72	2	2.49	6	n.s.	n.s.
25	3,838	4.74	2	2.23	19	550	4.73	1	2.38	12	n.s.	t=-3.62***
26	3,838	4.62	5	2.32	10	550	4.58	6	2.29	18	n.s.	n.s.
27	3,838	4.63	4	2.29	13	550	4.61	4	2.35	13	n.s.	n.s.
		4.45		2.31			4.44		2.36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준비지원

-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양육수당 지원
-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신·노년·독아지원 인프라 확충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야간 보육 활성화
- 시간제 보육 활성화

여성·출신에 내린 지원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불임부부 지원
- 산모 도우미 지원

인·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교·사회·가족·지역 내 가족친화 중심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어른·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부표 3-3〉 가구소득별 저출산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	150만원 미만					150만원~399만원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252	3.75	27	2.16	26	1,931	3.83	27	2.07	26	676	3.81	27	2.02	27	n.s.	F=2.86†
2	252	4.32	23	2.19	24	1,931	4.25	24	2.21	21	676	4.18	25	2.24	19	F=2.96†	n.s.
3	252	4.54	7	2.81	1	1,931	4.57	9	2.73	1	676	4.50	11	2.65	1	F=3.28*	F=3.68*
4	252	4.41	11	2.33	16	1,931	4.40	20	2.17	23	676	4.28	23	2.10	26	F=6.80**	F=6.37**
5	252	4.36	17	2.41	11	1,931	4.52	11	2.30	12	676	4.44	15	2.26	17	F=6.60**	F=3.16*
6	252	4.34	20	2.36	13	1,931	4.44	16	2.22	20	676	4.38	18	2.22	20	F=3.41*	F=3.13*
7	252	4.38	14	2.34	15	1,931	4.37	22	2.25	17	676	4.38	18	2.29	13	n.s.	n.s.
8	252	4.37	15	2.37	12	1,931	4.43	18	2.36	9	676	4.35	21	2.43	6	F=3.12*	n.s.
9	252	4.36	17	2.61	2	1,931	4.49	12	2.48	4	676	4.51	10	2.42	8	F=4.27*	F=4.81**
10	252	4.33	22	2.57	5	1,931	4.41	19	2.55	2	676	4.37	20	2.45	5	n.s.	F=4.21*
11	252	4.41	11	2.57	5	1,931	4.47	15	2.45	5	676	4.43	16	2.43	6	n.s.	F=2.82†
12	252	4.28	24	2.43	10	1,931	4.39	21	2.28	15	676	4.34	22	2.27	15	F=3.15*	F=3.86*
13	252	4.50	8	2.59	3	1,931	4.48	13	2.44	6	676	4.46	13	2.42	8	n.s.	F=4.30*
14	252	4.36	17	2.36	13	1,931	4.35	23	2.27	16	676	4.40	17	2.32	12	n.s.	n.s.
15	252	4.37	15	2.52	7	1,931	4.44	16	2.32	10	676	4.45	14	2.26	17	n.s.	F=7.86***
16	467	4.49	9	2.26	20	2,687	4.60	6	2.30	12	1,021	4.58	8	2.41	10	F=6.19**	F=5.97**
17	467	4.39	13	2.18	25	2,687	4.56	10	2.12	24	1,021	4.57	9	2.13	25	F=6.38***	n.s.
18	467	4.48	10	2.24	21	2,687	4.58	8	2.09	25	1,021	4.61	7	2.15	23	F=8.68***	F=7.20**
19	467	4.34	20	2.12	27	2,687	4.48	13	2.07	26	1,021	4.48	12	2.15	23	F=9.76***	F=4.01*
20	467	3.94	26	2.23	22	2,687	4.12	26	2.21	21	1,021	4.14	26	2.22	20	F=11.52***	n.s.
21	467	4.08	25	2.22	23	2,687	4.24	25	2.24	18	1,021	4.26	24	2.22	20	F=10.26***	n.s.
22	467	4.56	6	2.59	3	2,687	4.62	4	2.54	3	1,021	4.64	5	2.62	2	F=2.99†	F=3.56*
23	467	4.66	3	2.45	9	2,687	4.71	3	2.38	8	1,021	4.74	3	2.51	3	F=4.14*	F=8.73***
24	467	4.74	1	2.46	8	2,687	4.74	1	2.41	7	1,021	4.77	1	2.49	4	n.s.	F=3.32*
25	467	4.73	2	2.27	18	2,687	4.74	1	2.23	19	1,021	4.76	2	2.27	15	n.s.	n.s.
26	467	4.59	4	2.27	18	2,687	4.60	6	2.32	10	1,021	4.63	6	2.34	11	n.s.	ns.
27	467	4.58	5	2.31	17	2,687	4.62	4	2.29	14	1,021	4.66	4	2.29	13	F=4.32*	n.s.
		4.39		2.38			4.46		2.31			4.45		2.32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 | | |
|--|--|
| <p>신혼부부 출생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p>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리적 부담 경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p>다양한 신·진·노년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야간 보육 활성화 시간제 보육 활성화 <p>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 | <p>인라 가정의 양립 인경 수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소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p>아능·점수년의 인진인 심정인경 수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p>아능·점수년의 인진인 심정인경 수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

〈부표 3-4〉 성별 고령화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남성					여성					남여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2,664	4.48	8	2.38	15	2,582	4.54	7	2.40	16	t=-2.96**	n.s.
2	2,664	4.02	17	2.79	2	2,582	4.10	17	2.82	3	t=-3.09**	n.s.
3	1,921	4.55	5	2.95	1	2,079	4.57	5	3.11	1	n.s.	t=-5.53***
4	2,664	4.29	13	2.36	17	2,582	4.32	11	2.37	17	n.s.	n.s.
5	2,664	3.93	18	2.66	6	2,582	4.04	18	2.70	8	t=-3.95***	n.s.
6	2,664	4.12	16	2.47	14	2,582	4.20	16	2.47	14	t=-3.91***	n.s.
7	1,921	4.49	6	2.64	7	2,079	4.56	6	2.70	8	t=-3.78***	t=-2.14*
8	806	4.66	2	2.77	3	994	4.67	3	2.87	2	n.s.	t=-2.18*
9	806	4.47	9	2.62	10	994	4.50	8	2.64	11	n.s.	n.s.
10	806	4.68	1	2.58	12	994	4.71	1	2.58	13	n.s.	n.s.
11	1,921	4.59	4	2.67	5	2,079	4.63	4	2.71	7	t=-2.33*	n.s.
12	1,921	4.64	3	2.69	4	2,079	4.68	2	2.77	4	t=-1.91†	t=-2.82**
13	806	4.17	15	2.32	18	994	4.28	13	2.33	18	t=-2.72**	n.s.
14	806	4.39	10	2.64	7	994	4.42	9	2.66	10	n.s.	n.s.
15	806	4.49	6	2.53	13	994	4.42	9	2.64	11	t=1.99*	t=-2.45*
16	806	4.28	14	2.61	11	994	4.23	15	2.72	6	n.s.	t=-2.73**
17	806	4.31	12	2.63	9	994	4.28	13	2.74	5	n.s.	t=-2.82**
18	806	4.33	11	2.38	15	994	4.29	12	2.45	15	n.s.	t=-1.82†
		4.38		2.59			4.41		2.65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능부상제도 복속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응 노인요양보호 기반 복속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인사업 삼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지 사회참여여기 조성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안전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안전기반 마련

〈부표 3-5〉 지역별 고령화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동부					읍면부					지역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4,515	4.52	6	2.36	16	731	4.44	8	2.53	13	t=2.51*	t=-4.87***
2	4,515	4.07	17	2.80	2	731	3.99	18	2.88	5	t=2.02*	t=-2.23*
3	3,223	4.56	5	2.96	1	776	4.54	6	3.33	1	n.s.	t=-9.68***
4	4,515	4.30	13	2.34	17	731	4.34	10	2.52	14	n.s.	t=-5.13***
5	4,515	3.98	18	2.68	8	731	4.01	17	2.72	9	n.s.	n.s.
6	4,515	4.16	16	2.46	14	731	4.12	16	2.52	14	n.s.	t=-1.65†
7	3,223	4.52	6	2.64	9	776	4.56	5	2.81	6	t=-1.78†	t=-4.56***
8	1,321	4.68	2	2.76	3	480	4.62	3	3.00	2	t=2.30*	t=-4.22***
9	1,321	4.49	8	2.58	11	480	4.48	7	2.75	7	n.s.	t=-3.27**
10	1,321	4.71	1	2.53	13	480	4.64	1	2.73	8	t=2.51*	t=-4.00***
11	3,223	4.61	4	2.64	9	776	4.63	2	2.90	4	n.s.	t=-6.88***
12	3,223	4.67	3	2.69	6	776	4.62	3	2.92	3	t=1.95†	t=-6.09***
13	1,321	4.22	15	2.30	18	480	4.27	12	2.39	18	n.s.	t=-1.98*
14	1,321	4.40	10	2.71	5	480	4.44	8	2.49	16	n.s.	t=4.43***
15	1,321	4.49	8	2.54	12	480	4.34	10	2.72	9	t=3.65***	t=-3.58***
16	1,321	4.29	14	2.69	6	480	4.15	15	2.61	11	t=3.63***	t=1.84†
17	1,321	4.33	12	2.73	4	480	4.19	14	2.60	12	t=3.48**	t=2.79**
18	1,321	4.34	11	2.40	15	480	4.21	13	2.46	17	t=3.18**	n.s.
		4.41		2.61			4.37		2.72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능보상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응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 고령지 사회참여여기 조성**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부표 3-6〉 가구소득별 고령화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150만원 미만					150만원~399만원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776	4.41	9	2.60	13	3,039	4.50	9	2.35	15	1,165	4.61	5	2.34	17	F=21.45***	F=30.79***
2	776	4.00	18	2.88	2	3,039	4.04	17	2.77	2	1,165	4.17	17	2.82	4	F=10.26***	F=4.05*
3	1,163	4.58	5	3.23	1	1,839	4.54	5	2.98	1	754	4.56	6	2.89	2	n.s.	F=35.61***
4	776	4.33	11	2.49	16	3,039	4.29	14	2.34	16	1,165	4.33	10	2.34	17	n.s.	F=11.22***
5	776	4.04	17	2.76	5	3,039	3.99	18	2.65	6	1,165	3.98	18	2.67	11	n.s.	F=4.11*
6	776	4.13	16	2.54	15	3,039	4.16	16	2.44	14	1,165	4.20	16	2.48	14	n.s.	F=4.50*
7	1,163	4.54	6	2.72	7	1,839	4.52	6	2.64	9	754	4.50	7	2.67	11	n.s.	F=3.33*
8	892	4.64	1	2.83	3	583	4.70	2	2.76	3	178	4.69	3	2.96	1	n.s.	F=3.06*
9	892	4.48	7	2.66	10	583	4.51	7	2.52	11	178	4.44	8	2.71	10	n.s.	F=5.61**
10	892	4.64	1	2.61	12	583	4.76	1	2.49	12	178	4.74	1	2.75	7	F=9.80***	F=6.04**
11	1,163	4.62	4	2.74	6	1,839	4.60	4	2.65	6	754	4.62	4	2.73	9	n.s.	F=4.07*
12	1,163	4.64	1	2.81	4	1,839	4.65	3	2.69	4	754	4.70	2	2.74	8	F=2.31†	F=5.71**
13	892	4.21	14	2.34	18	583	4.23	15	2.24	18	178	4.23	13	2.47	16	n.s.	F=5.69**
14	892	4.39	10	2.59	14	583	4.43	10	2.63	10	178	4.33	10	2.88	3	n.s.	F=7.25**
15	892	4.42	8	2.66	10	583	4.51	7	2.47	13	178	4.42	9	2.64	13	F=3.05*	F=8.12***
16	892	4.19	15	2.67	9	583	4.33	13	2.65	6	178	4.22	15	2.78	6	F=6.17**	n.s.
17	892	4.24	12	2.68	8	583	4.37	12	2.66	5	178	4.23	13	2.81	5	F=6.57**	n.s.
18	892	4.24	12	2.46	17	583	4.41	11	2.34	16	178	4.32	12	2.48	14	F=10.37***	F=4.02*
		4.37		2.68			4.42		2.57			4.41		2.68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적소득보장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기 조성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년생애주기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부표 3-7〉 성별 성장동력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남성					여성					남여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2,242	4.19	9	2.44	5	2,147	4.47	3	2.37	6	t=-13.36***	t=3.22**
2	2,242	4.26	8	2.40	7	2,147	4.49	1	2.32	8	t=-11.46***	t=3.27**
3	1,921	4.39	3	2.24	9	2,079	4.37	6	2.24	11	n.s.	n.s.
4	1,921	4.40	2	2.14	12	2,079	4.40	5	2.18	12	n.s.	n.s.
5	806	4.39	3	2.15	11	994	4.31	7	2.30	9	t=2.25*	t=-4.04***
6	1,921	4.31	7	2.20	10	2,079	4.29	8	2.27	10	n.s.	t=-2.89**
7	806	4.33	6	2.29	8	994	4.23	9	2.35	7	t=2.76**	t=-1.78†
8	2,242	3.37	12	2.82	1	2,147	3.39	12	2.84	1	n.s.	n.s.
9	2,242	3.69	11	2.66	2	2,147	3.67	11	2.68	2	n.s.	n.s.
10	2,242	3.87	10	2.66	2	2,147	3.91	10	2.67	3	t=-1.66†	n.s.
11	2,242	4.42	1	2.43	6	2,147	4.49	1	2.43	5	t=-3.32**	n.s.
12	2,242	4.38	5	2.49	4	2,147	4.41	4	2.50	4	n.s.	n.s.
		4.17		2.41			4.20		2.43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 | | |
|--|---|
| 여성인력 잠재력 증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외국직능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

〈부표 3-8〉 지역별 성장동력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¹⁾	동부					읍면부					지역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3,838	4.32	8	2.40	6	550	4.34	3	2.46	5	n.s.	n.s.
2	3,838	4.38	5	2.35	7	550	4.34	3	2.41	8	n.s.	n.s.
3	3,223	4.40	3	2.20	10	776	4.30	6	2.39	9	t=2.86**	t=-5.81***
4	3,223	4.42	2	2.15	12	776	4.32	5	2.22	12	t=3.15**	t=-2.00*
5	1,321	4.37	6	2.18	11	480	4.27	7	2.37	10	t=2.47*	t=-4.55***
6	3,223	4.33	7	2.22	9	776	4.20	9	2.32	11	t=4.27***	t=-3.20**
7	1,321	4.29	9	2.29	8	480	4.24	8	2.42	7	n.s.	t=-3.11**
8	3,838	3.39	12	2.84	1	550	3.32	12	2.80	1	n.s.	n.s.
9	3,838	3.71	11	2.68	2	550	3.47	11	2.61	3	t=5.11***	t=1.83†
10	3,838	3.90	10	2.66	3	550	3.82	10	2.65	2	t=1.82†	n.s.
11	3,838	4.44	1	2.42	5	550	4.49	1	2.46	5	n.s.	n.s.
12	3,838	4.40	3	2.49	4	550	4.39	2	2.50	4	n.s.	n.s.
		4.20		2.41			4.13		2.47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 | | |
|--|---|
| <p>여성인 김세남을 참여 촉진</p> <p>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p> <p>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p> <p>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직 고령인 시스템 구축</p> <p>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p> <p>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p> <p>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p> <p>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p> <p>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p> | <p>외국직능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p> <p>8. 외국인 동포의 활용</p> <p>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p> <p>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p> <p>인적 사원의 감성력 및 활용도 제고</p> <p>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p> <p>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p> |
|--|---|

〈부표 3-9〉 가구소득별 성장동력 영역 중요도 및 실행도

(단위 : 명, 점)

번호	150만원 미만					150만원~399만원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차이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N	중요도	순위	실행도	순위	중요도	실행도
1	467	4.24	7	2.55	4	2,687	4.34	8	2.38	6	1,021	4.33	8	2.40	5	F=3.97*	F=9.20***
2	467	4.28	6	2.49	5	2,687	4.38	5	2.32	7	1,021	4.39	5	2.36	7	F=5.54**	F=8.40***
3	1,163	4.33	3	2.33	9	1,839	4.41	3	2.24	9	754	4.38	6	2.15	11	F=3.70*	F=11.38***
4	1,163	4.33	3	2.20	12	1,839	4.42	2	2.14	12	754	4.43	3	2.17	10	F=6.35**	n.s.
5	892	4.29	5	2.28	11	583	4.40	4	2.20	11	178	4.40	4	2.13	12	F=5.54**	F=4.10*
6	1,163	4.20	9	2.31	10	1,839	4.34	8	2.22	10	754	4.34	7	2.19	9	F=15.15***	F=6.74**
7	892	4.21	8	2.35	8	583	4.35	7	2.29	8	178	4.30	9	2.31	8	F=6.82**	n.s.
8	467	3.15	12	2.95	1	2,687	3.37	12	2.85	1	1,021	3.52	12	2.73	1	F=21.67***	F=14.43***
9	467	3.48	11	2.72	3	2,687	3.67	11	2.68	3	1,021	3.81	11	2.60	2	F=20.07***	F=4.82**
10	467	3.70	10	2.73	2	2,687	3.87	10	2.69	2	1,021	4.02	10	2.57	3	F=22.83***	F=10.78***
11	467	4.41	1	2.40	7	2,687	4.45	1	2.44	5	1,021	4.48	1	2.38	6	n.s.	n.s.
12	467	4.36	2	2.44	6	2,687	4.38	5	2.50	4	1,021	4.46	2	2.48	4	F=6.04**	n.s.
		4.08		2.48			4.20		2.41			4.24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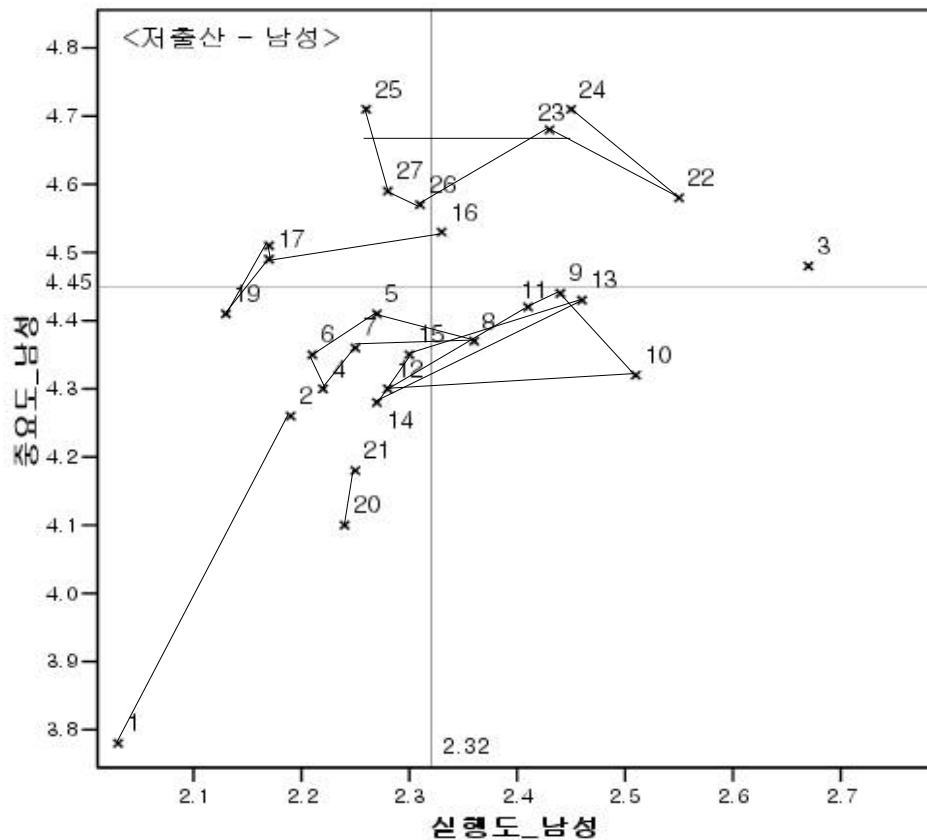
† p<.1 * p<.05 ** p<.01 *** p<.001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 | | |
|---|--|
| 여성인 김세권등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외국직능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김생년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

부록 4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집단별 중요도·실행도 mapping 분석

[부도 4-1] 저출산 IPA 그래프 - 남성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산전·후기 준비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아가는 '신·농·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업신·출신에 대한 지원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 도우미 지원

인내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조성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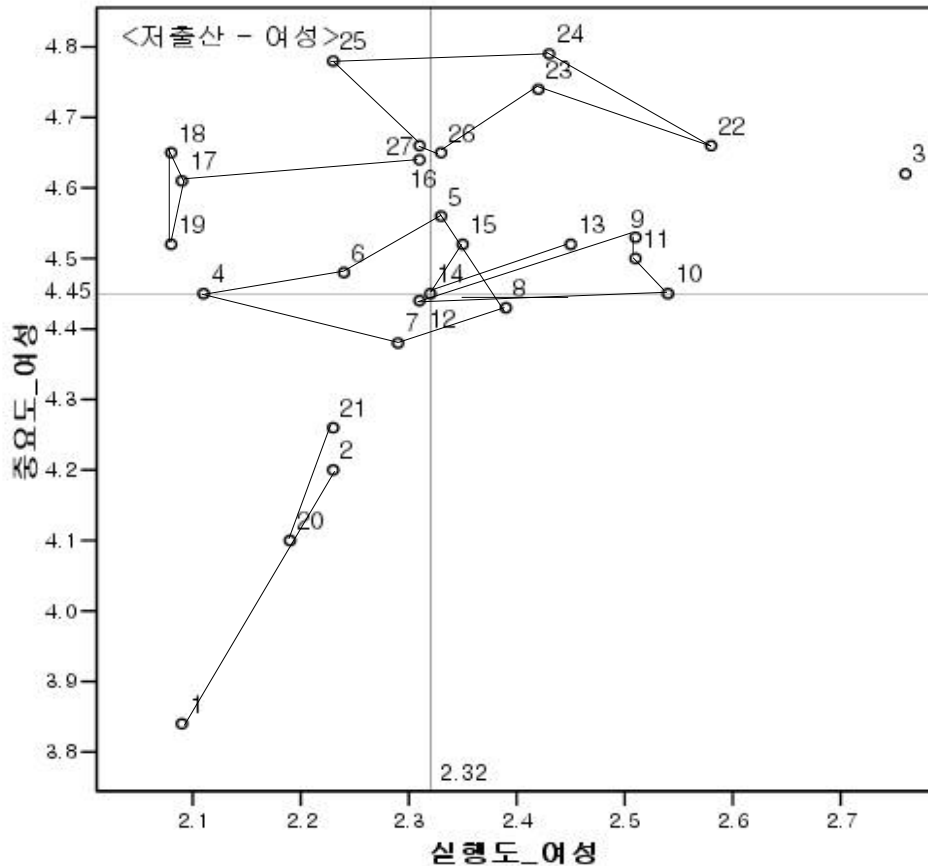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2] 저출산 IPA 그래프 - 여성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출민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다양한 신·노년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 도우미 지원

인·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사·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조성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의 인·생심정인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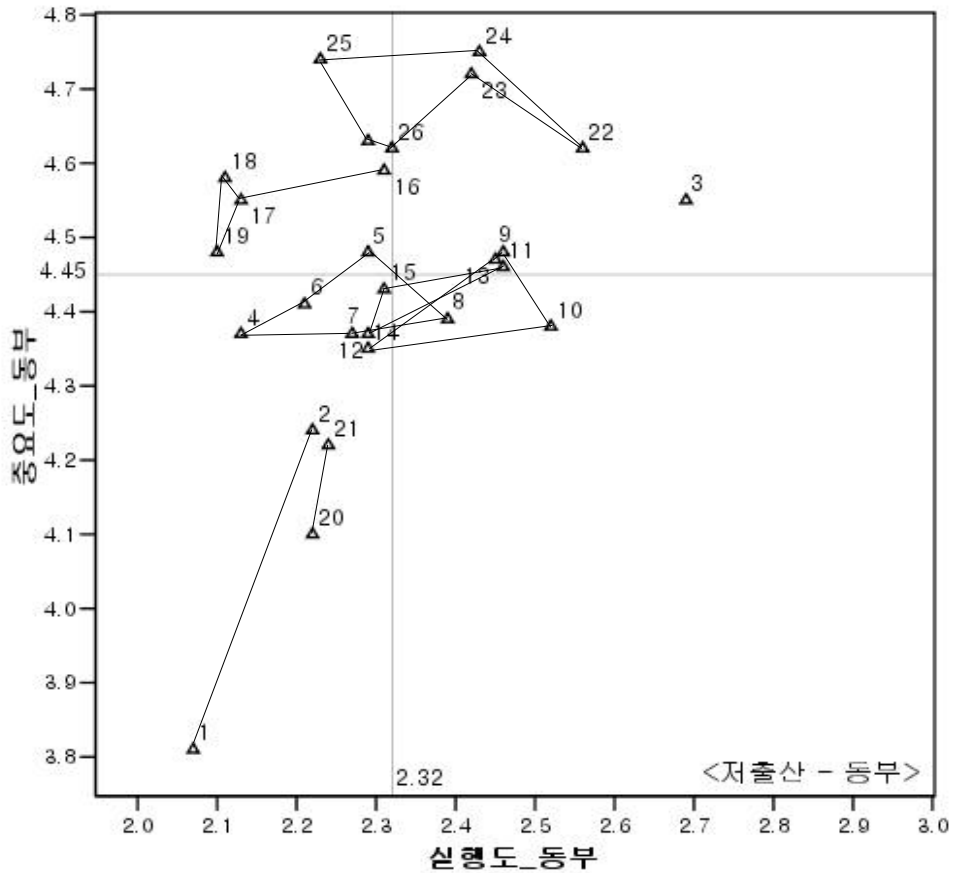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3] 저출산 IPA 그래프 - 동부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준비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신·돌봄·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도우미 지원

인내 가정의 양립 인력 지원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사·육·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조성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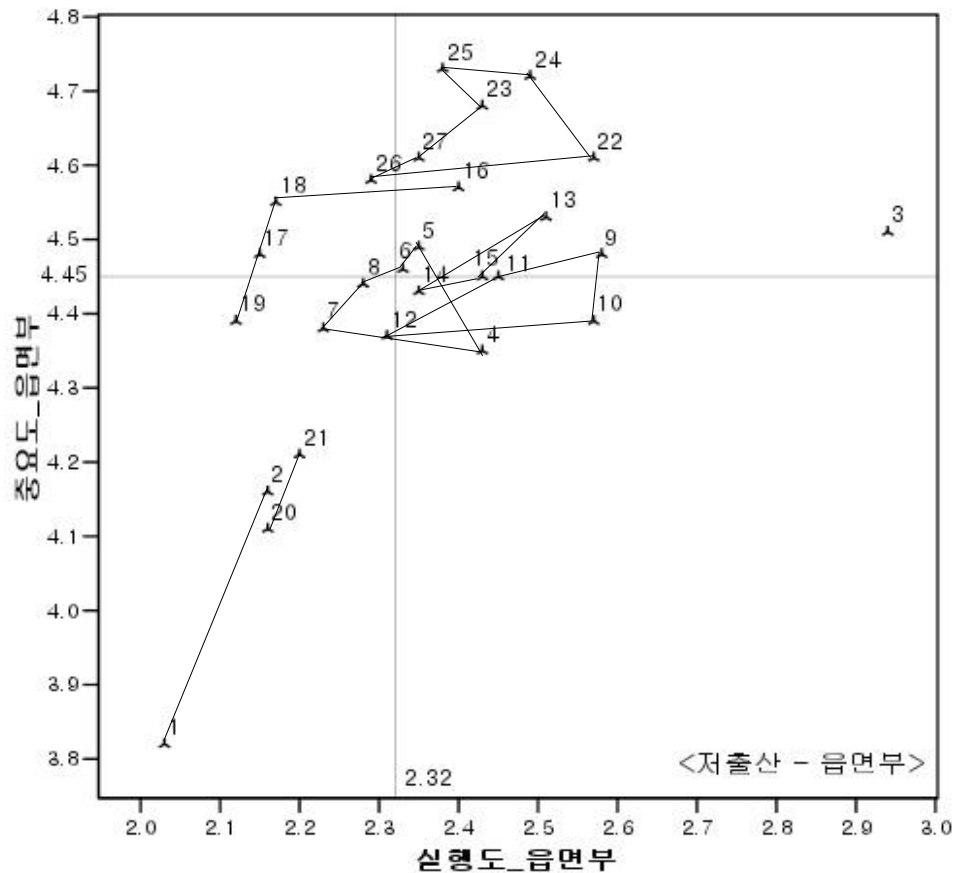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4] 저출산 IPA 그래프 - 읍면부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출산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적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가 신농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 도우미 지원

인·가정의 양립 인경 조성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교육·사적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조성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의 인·가정 심정인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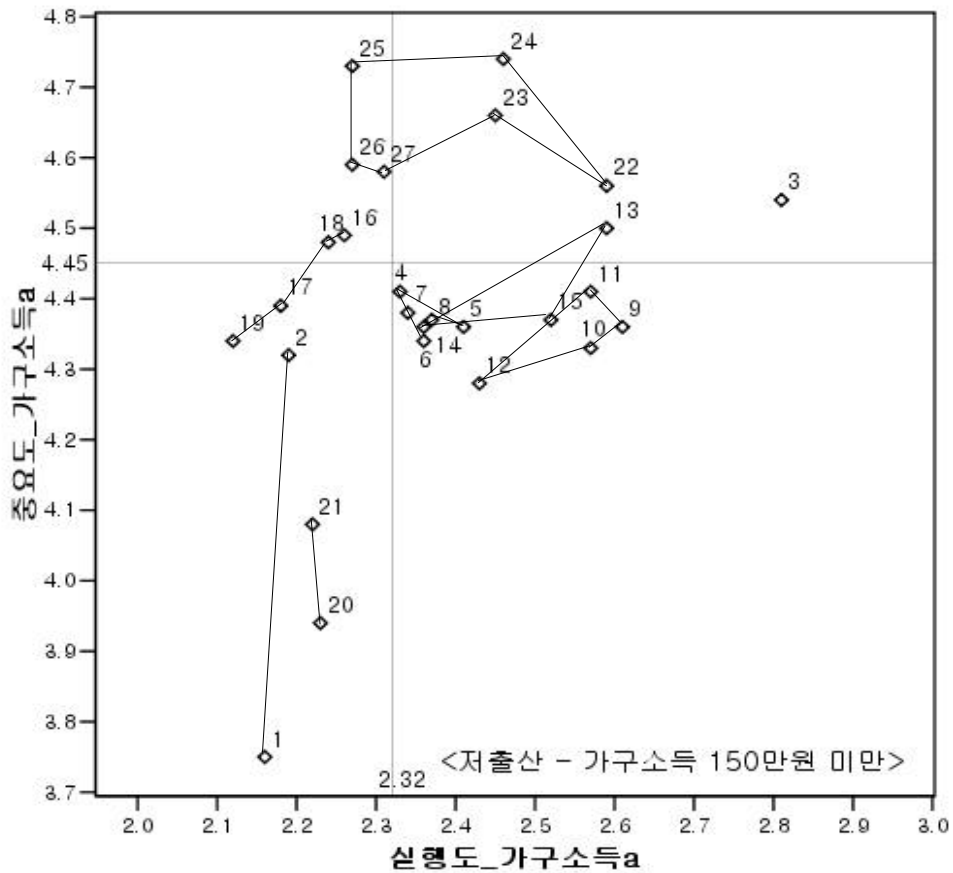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5] 저출산 IPA 그래프 -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준비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신·돌봄·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도우미 지원

인내 가정의 양립 인력 수급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사·육·교·육·강·화 및 가족·교·육·수·급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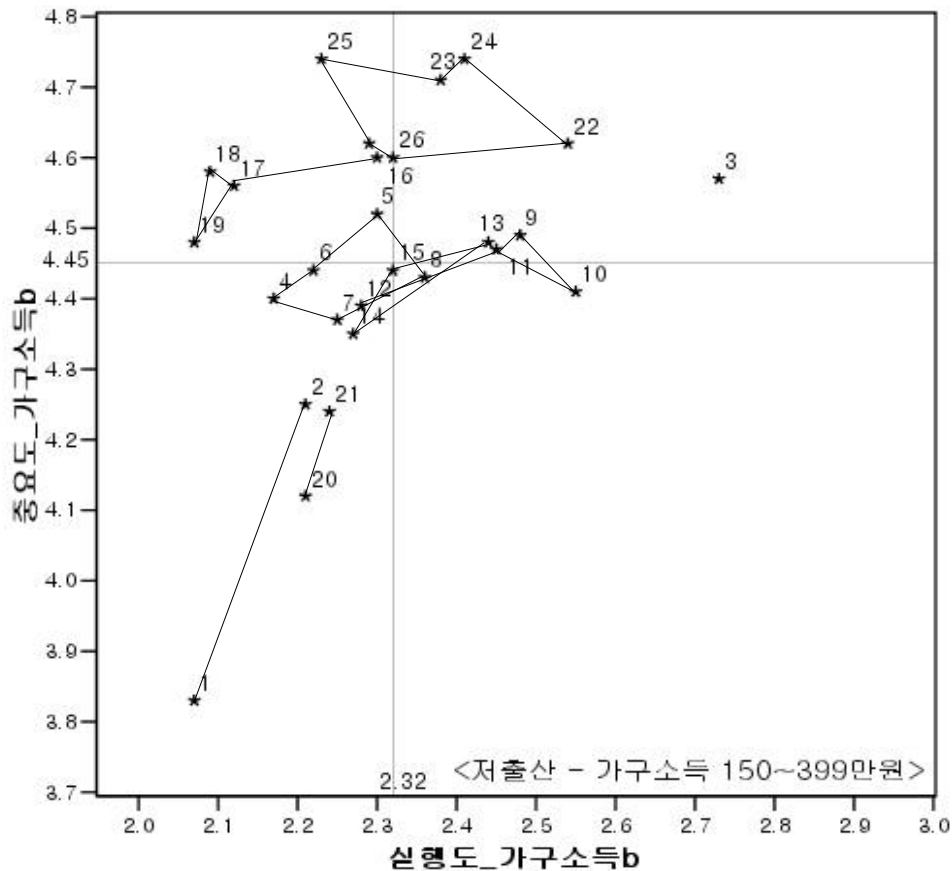
아·청·정·년·의·인·진·진·심·정·인·력·수·급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청·정·년·의·간·접·인·심·정·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6] 저출산 IPA 그래프 - 가구소득 150~399만원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준비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적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가 신·노년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 도우미 지원

인·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학·사·육·교 강화 및 가족친화 조성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의 인·가정 심정·인·가정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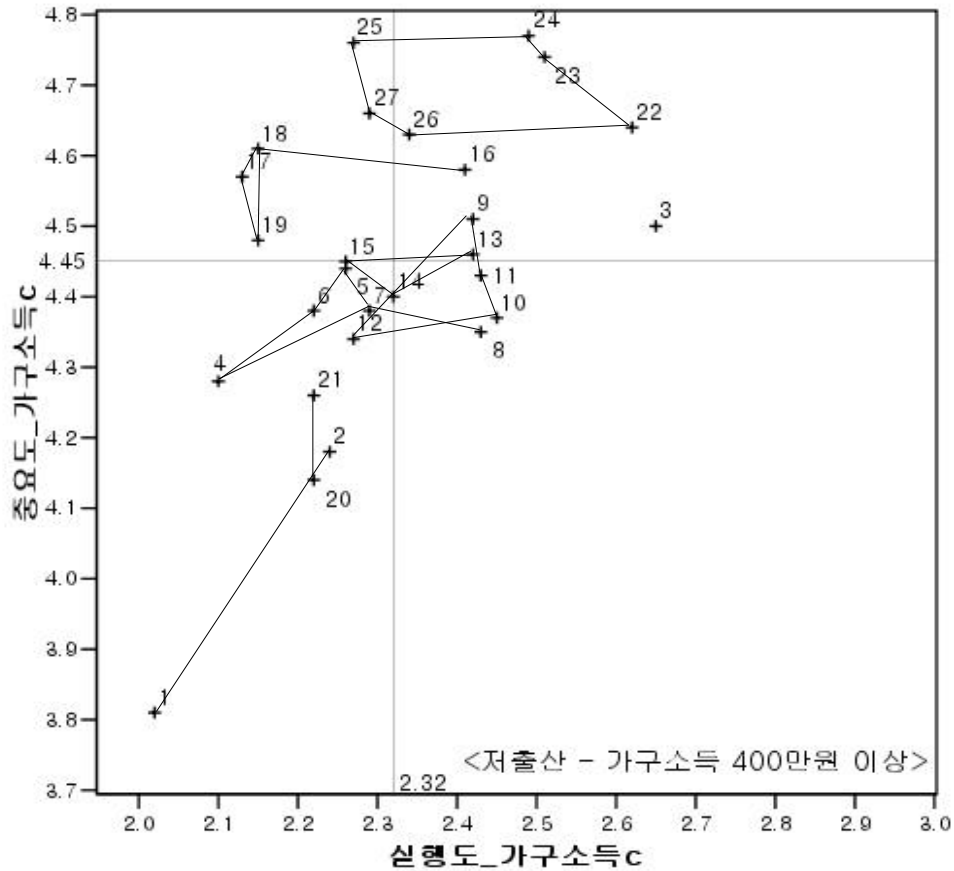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교·육·교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7] 저출산 IPA 그래프 -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출산지원

1.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및 지원제도 도입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4. 양육수당 지원
5.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
6.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충
7.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 보험 확대
8.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나양육·신·노년·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10.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11. 야간 보육 활성화
12. 시간제 보육 활성화

임신·출산에 내린 지원 확대

1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4. 불임부부 지원
15. 산모도우미 지원

연내 가정의 양립 인경 수심

1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7.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8.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9.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리·사·리 교육 강화 및 가족친화 수심

2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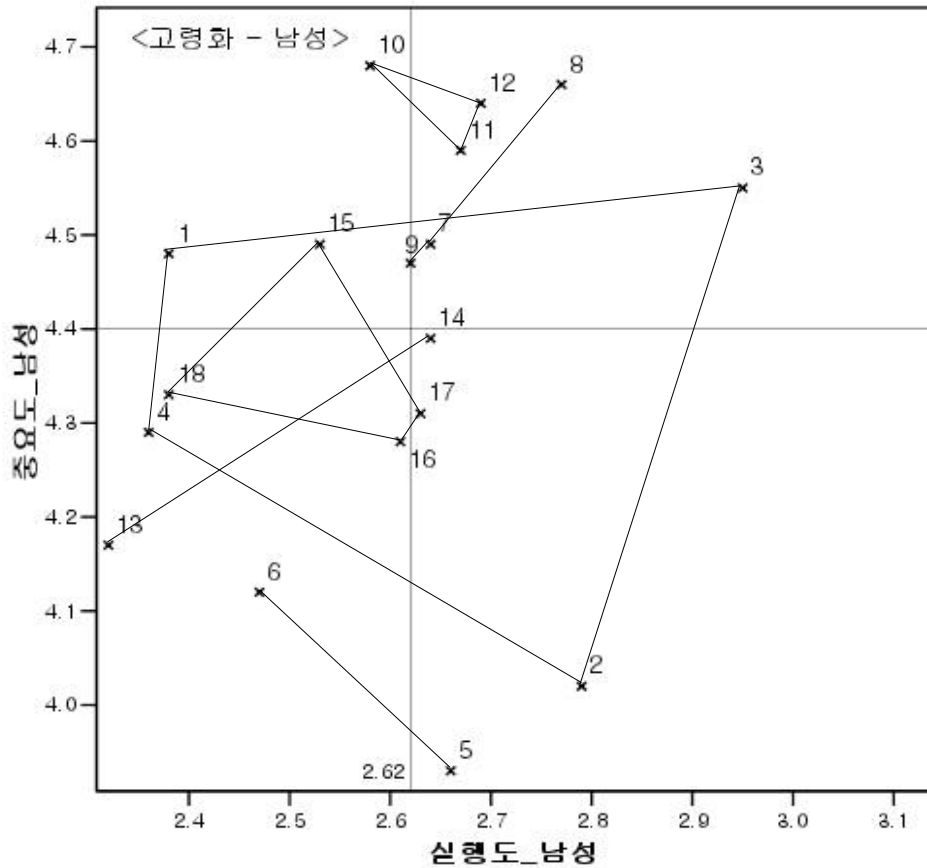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인성인 심정인경 수심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2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24.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25.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27. 빈곤아동의 발달·자활·자립 지원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세부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8] 고령화 IPA 그래프 -남성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능보상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사회적 교통안전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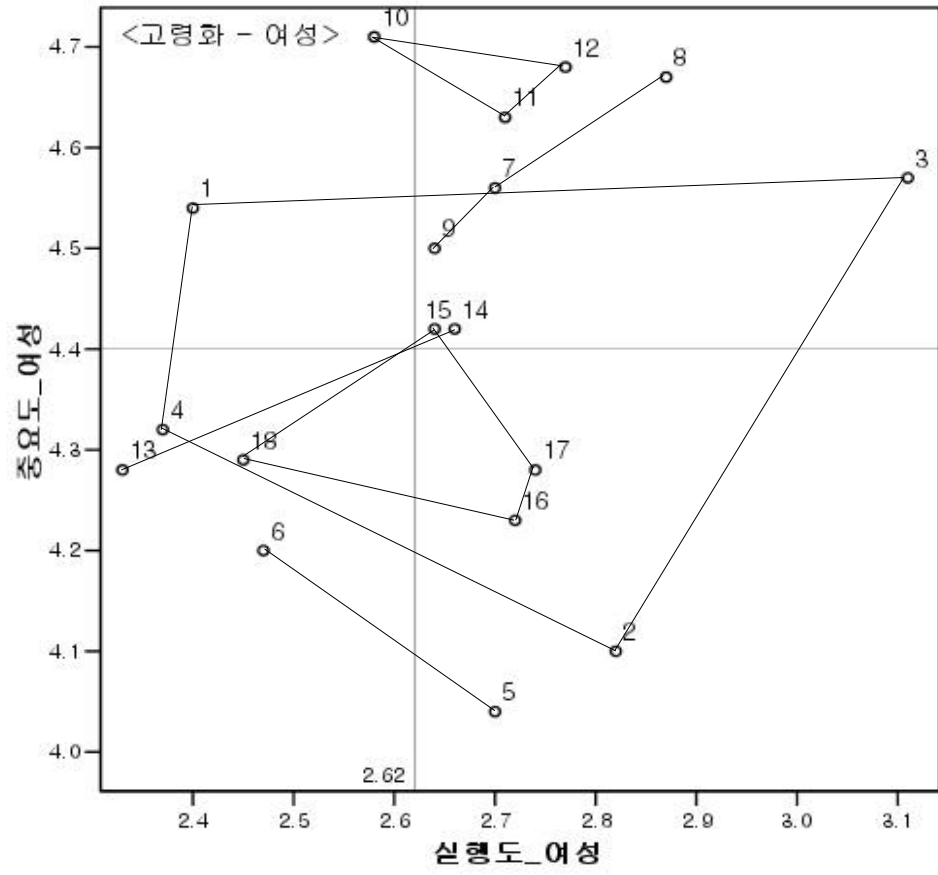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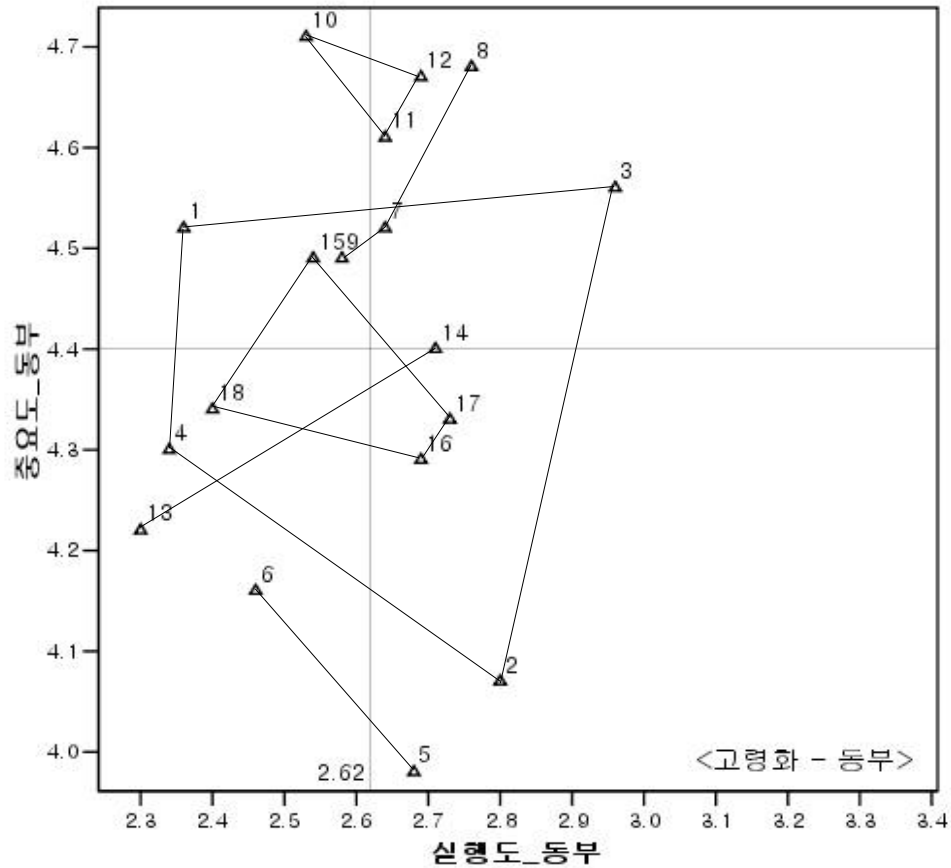
[부도 4-9] 고령화 IPA 그래프 -여성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 | | |
|---|---|
| <p>공직연금제도 내실화</p> <p>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p> <p>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p> <p>3. 기초노령연금 확대</p> <p>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p> <p>사직수능보상제도 확충</p> <p>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p> <p>6. 개인연금 활성화</p> <p>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p> <p>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p> <p>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p> <p>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p> | <p>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p> <p>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p> <p>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p> <p>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p> <p>안전한 주거공간 확보</p> <p>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p> <p>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p> <p>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p> <p>노인 일자리 창출</p> <p>15. 노인 일자리 창출</p> <p>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p> <p>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p> <p>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p> <p>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p> <p>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p> |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0] 고령화 IPA 그래프 -동부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적소득보장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관심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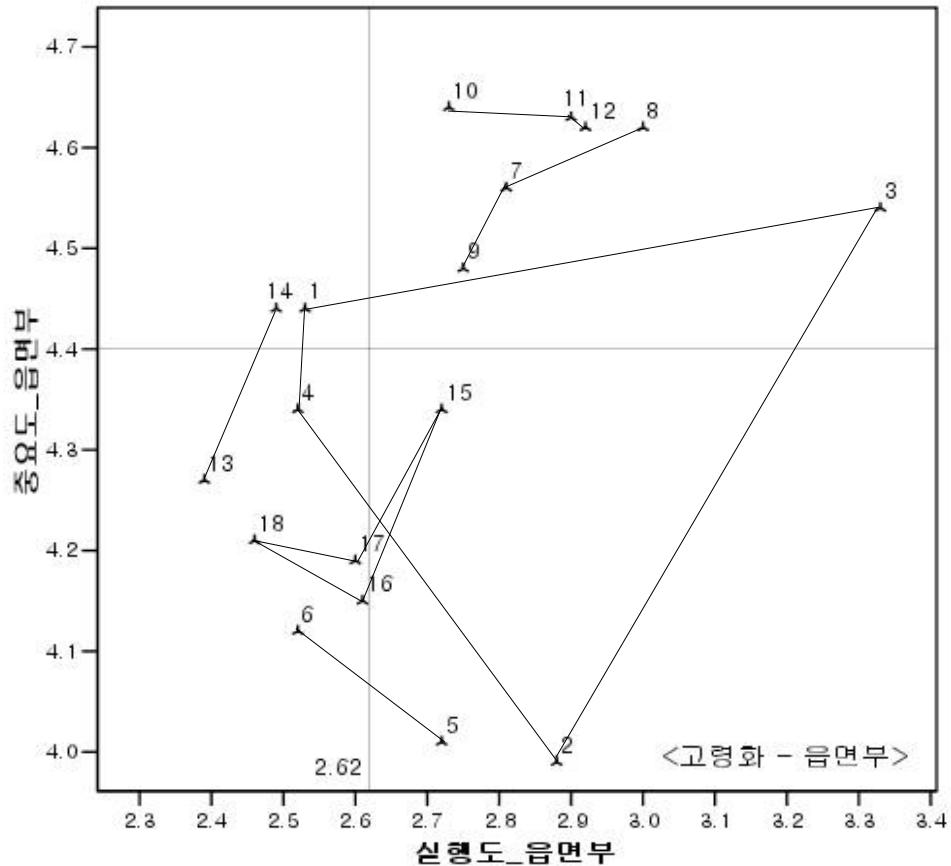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1] 고령화 IPA 그래프 -음면부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적연금제도 내신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적소득보장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수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관심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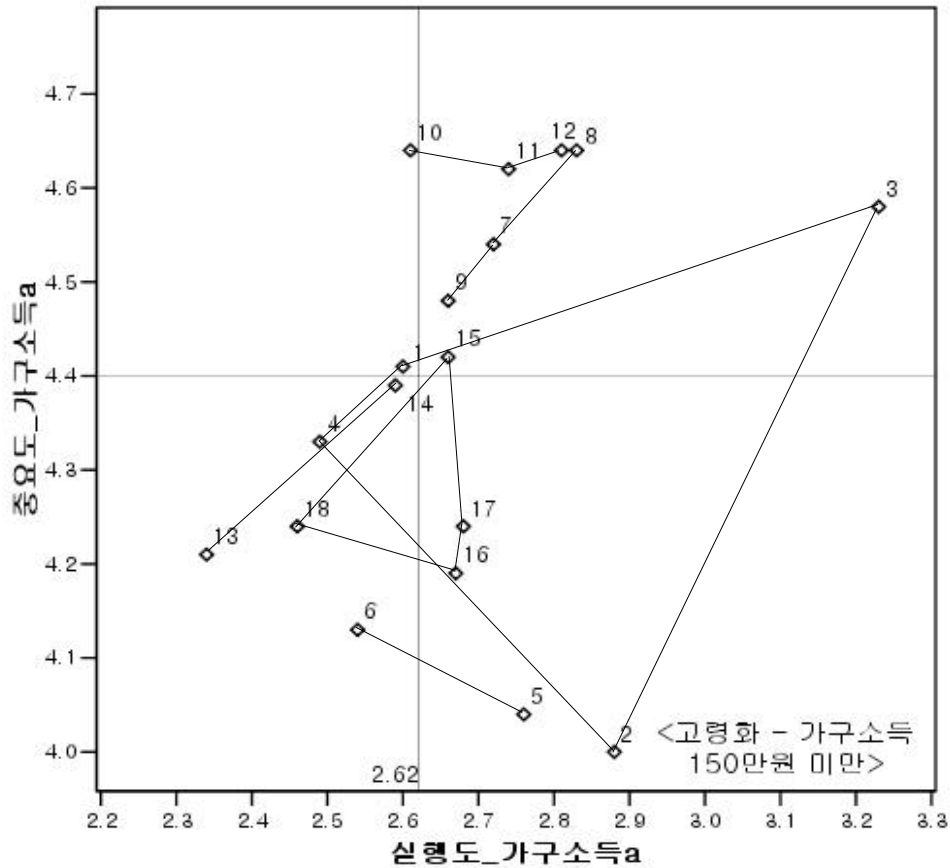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2] 고령화 IPA 그래프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급보상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경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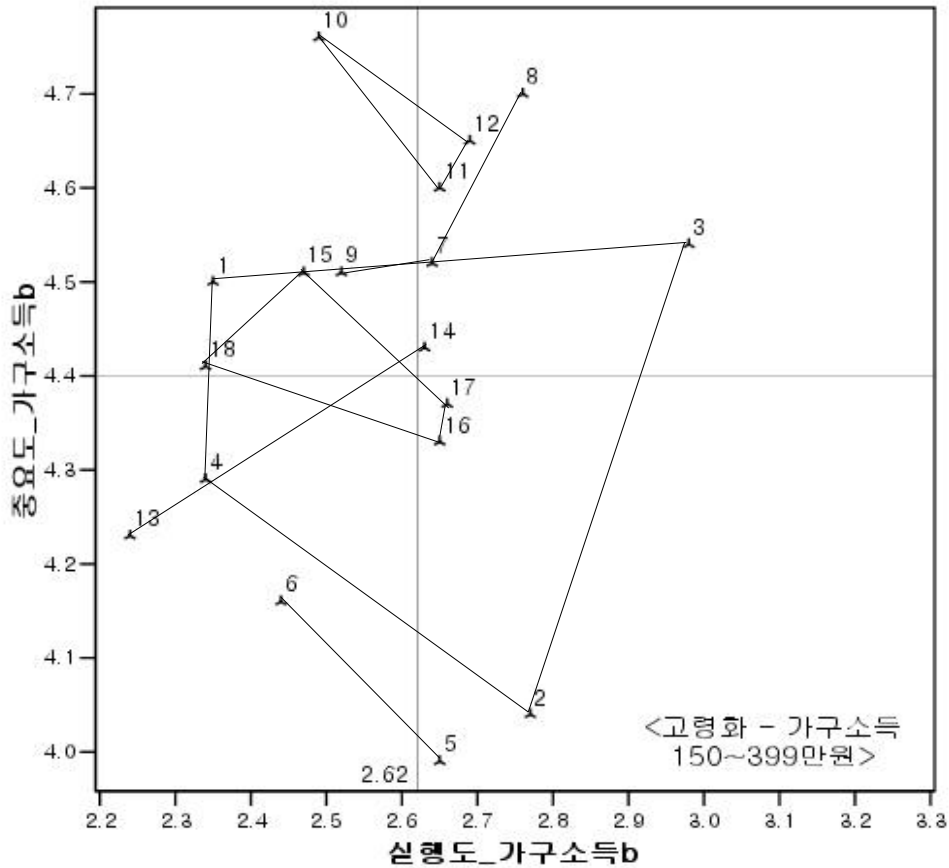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3] 고령화 IPA 그래프 가구소득 150~399만원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능보상제도 복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복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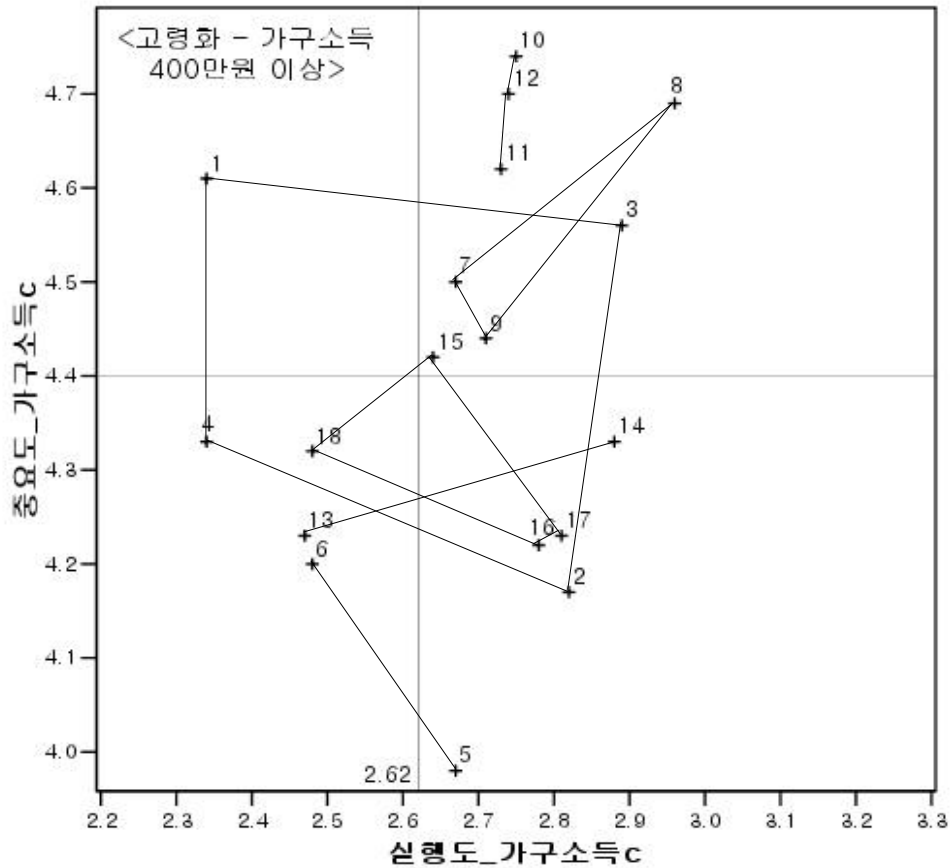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4] 고령화 IPA 그래프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¹⁾²⁾



주 : 1)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공직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3. 기초노령연금 확대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직수능보상제도 확충

5.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6.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2.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 개조 지원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4.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15.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16.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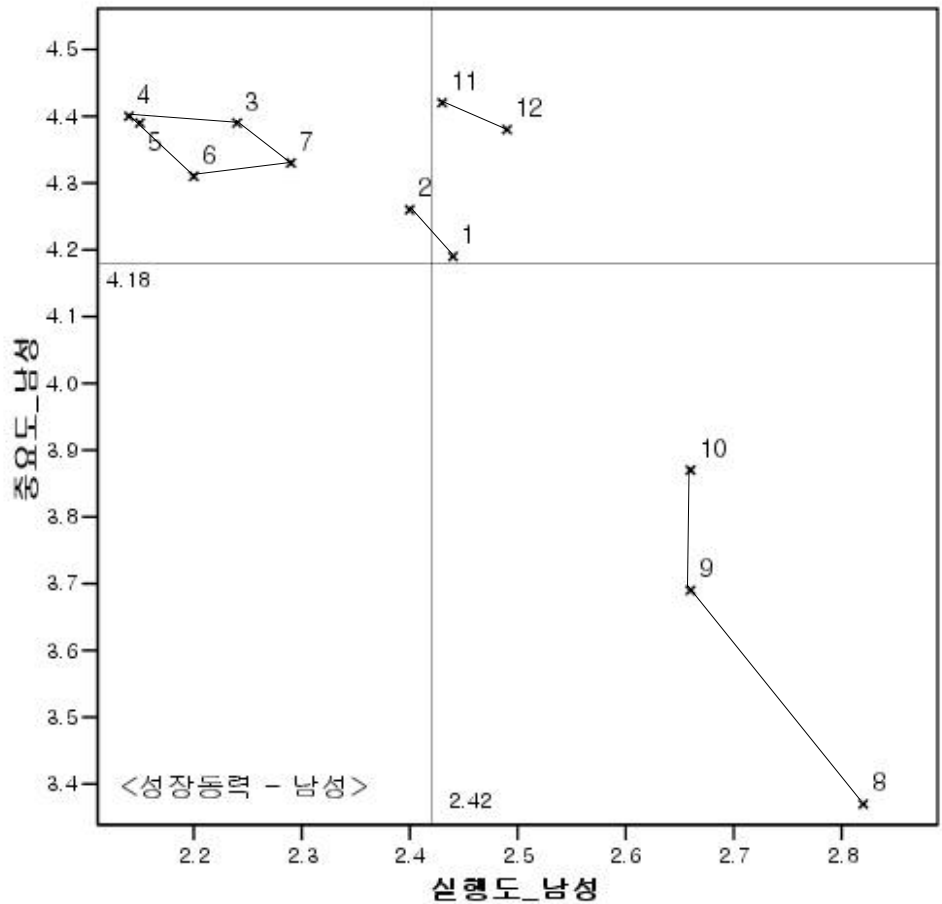
1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18.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2) 동일한 소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영역 정책들을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정책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의 세부 영역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의 세부 영역 사업은 함께 그룹으로 묶어 도식화함.

[부도 4-15] 성장동력 IPA 그래프 -남성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직 고령인력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적 동포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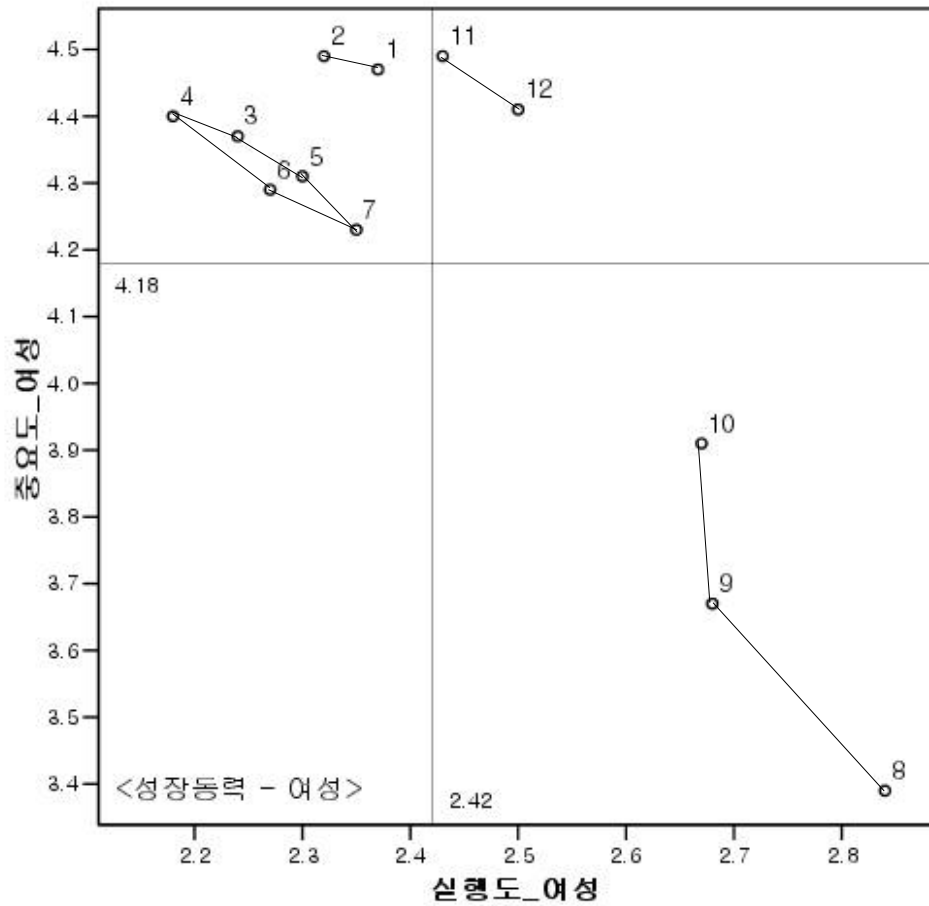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감성역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16] 성장동력 IPA 그래프 -여성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노동·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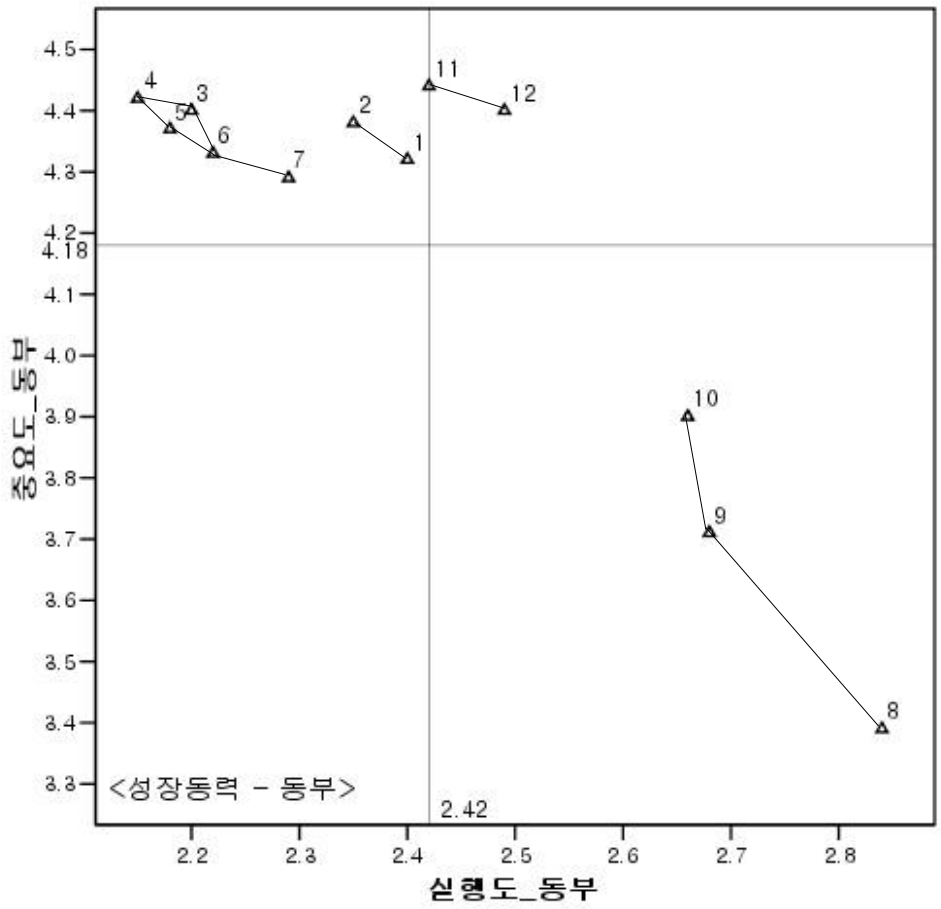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17] 성장동력 IPA 그래프 -동부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인 김세관농 잠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동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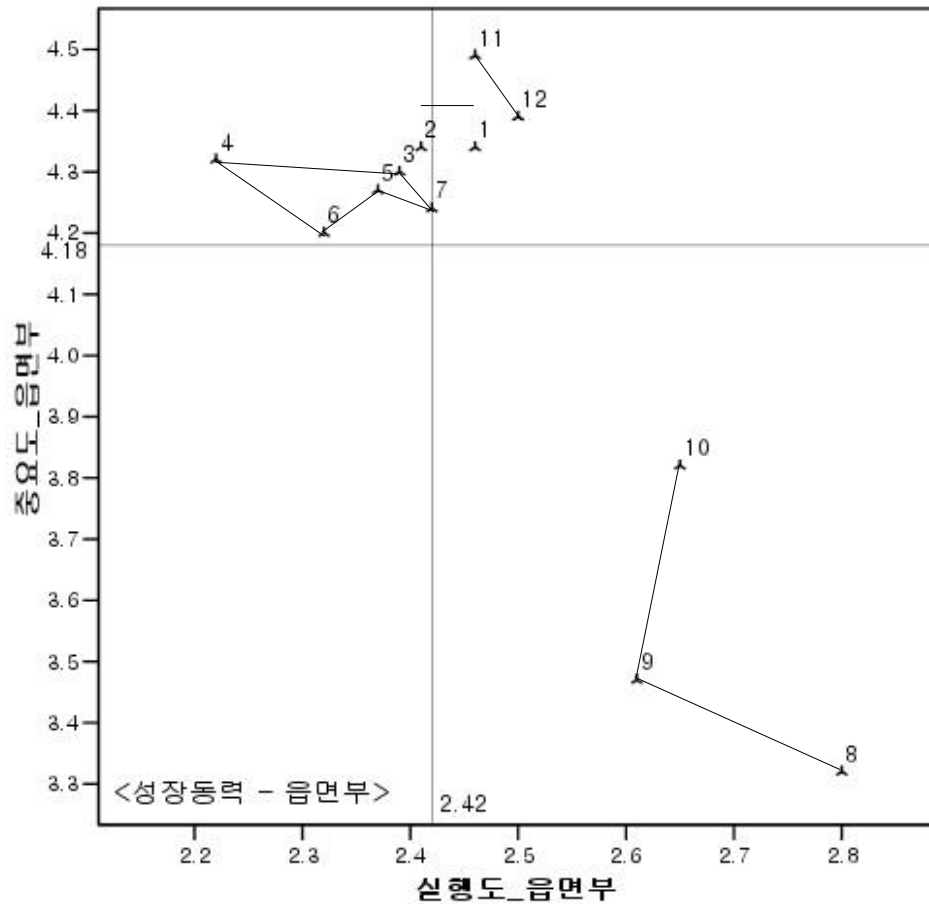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직 사원의 김생력 및 판용도 세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18] 성장동력 IPA 그래프 -읍면부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인 김세원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동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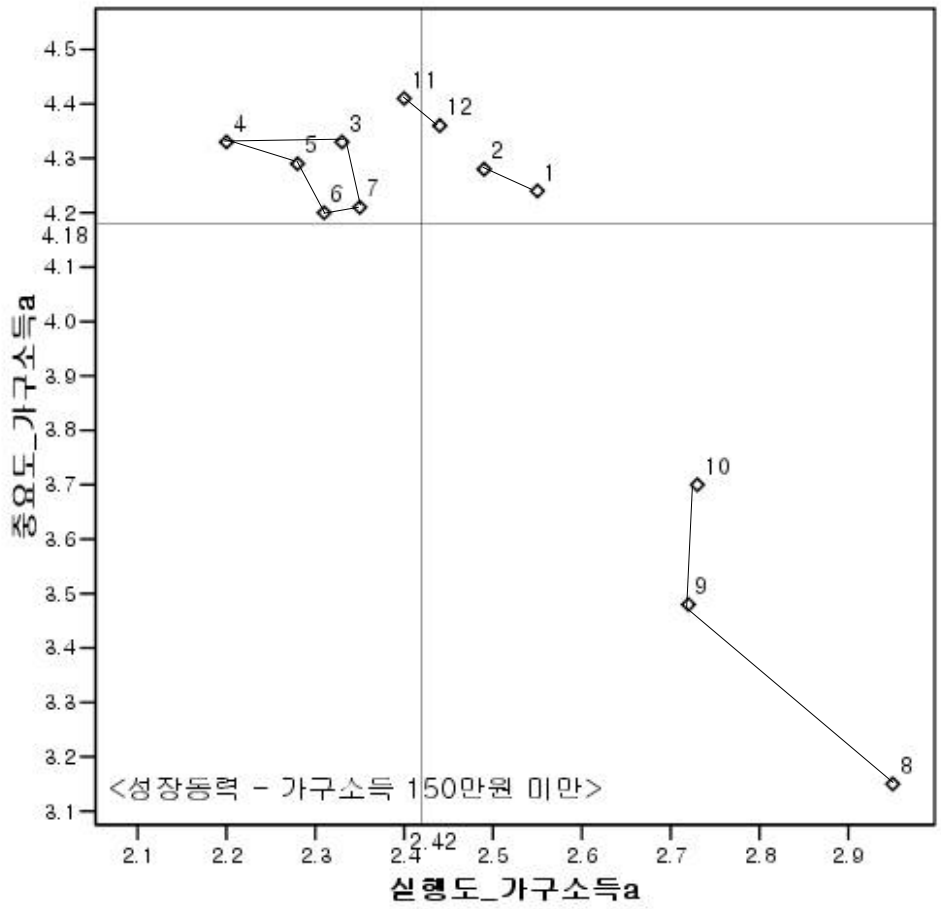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김생력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19] 성장동력 IPA 그래프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인 김세관동 잠대 속신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동부·외국인력의 관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적 동포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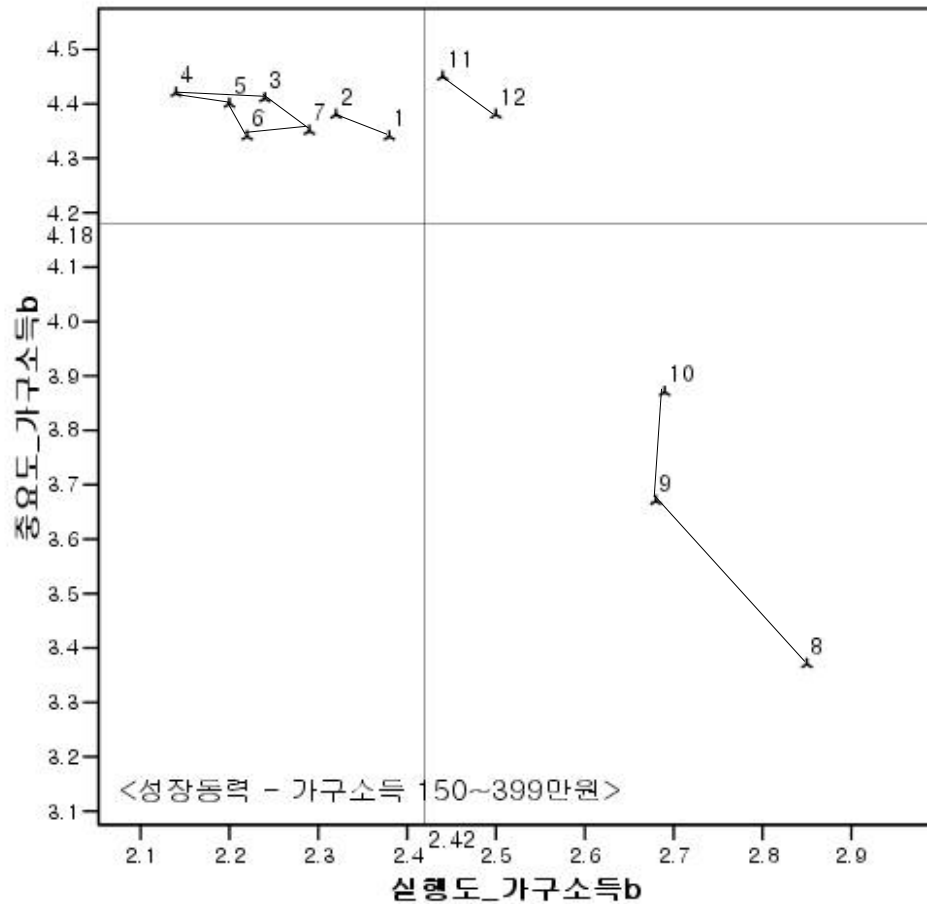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김생력 및 관용도 세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20] 성장동력 IPA 그래프 -가구소득 150~399만원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인 김세원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노동·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인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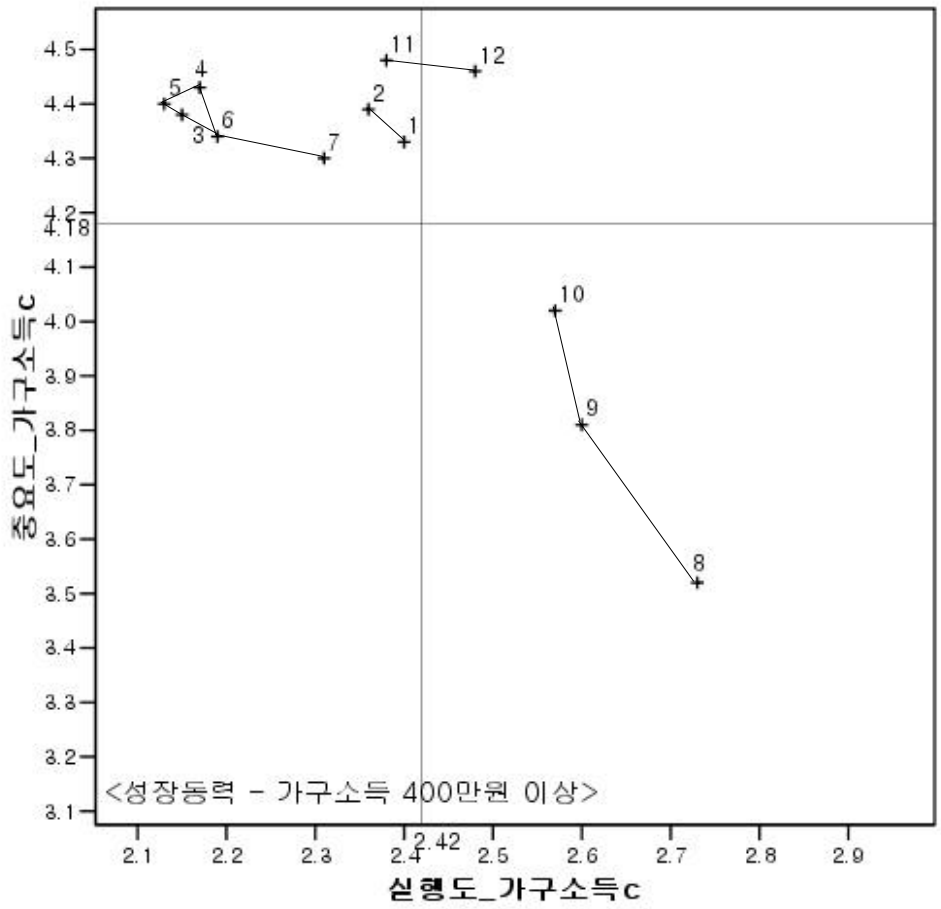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김생력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부도 4-21] 성장동력 IPA 그래프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¹⁾



주 1)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 정책 명칭은 아래와 같음.

여성인 김세관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5.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6.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외국직동부·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외국적 동포의 활용

9.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0.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 사원의 감성력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ID



승인(협의)번호
제 09002 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로 우리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
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쭙볼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
입니다.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주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김세나 사무관 02-2023-8463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신윤정 박사 02-380-8137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유은정 과장 02-3014-0084

응답자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____세 (만25세 미만 면접 중단)
응답자 전화번호	- -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세부 주소	____시/도 ____구/시/군 ____동/읍/면 ____번지 ____호 (____아파트 ____동 ____호)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동안	
면접원성명			면접원 코드		
검증결과					

A.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A1. ____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④ 상당히 관심이 있다

문A2. ____님께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심각하다 ④ 상당히 심각하다

문A2-1. (문A2에서 ③, ④ 응답자만)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A3. ____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심각하다 ④ 상당히 심각하다

문A3-1. (문A3에서 ③, ④ 응답자만)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A4. ____님께서는 지난 6개월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TV뉴스나 신문기사**를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 ① 거의 본 적이 없다 ② 한두 번 보았다
③ 서너 번 보았다 ④ 다섯 번 이상 보았다

문A5. ____님께서서는 지난 6개월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광고나 홍보물**은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 ① 거의 본 적이 없다 ② 한두 번 보았다
③ 서너 번 보았다 ④ 다섯 번 이상 보았다

문A5-1. (문A5에서 ②, ③, ④ 응답자만) 지난 6개월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보신 **광고나 홍보물**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보신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TV광고 ② 라디오광고
③ 지하철, 버스 광고 ④ 홍보 팜플렛 · 홍보책자
⑤ 인터넷사이트 ⑥ 전광판, 옥외광고

문A6. ____님의 인생에서 ‘결혼’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④ 상당히 필요하다

문A7. ____님의 인생에서 ‘자녀’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④ 상당히 필요하다

문A8. 현재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직장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②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 ④ 상당히 조성되어 있다

문A9. 다음 문항들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상당히 그렇다
문A9-1	자녀가 1명이건 두 명 이상이건 느끼는 행복과 보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A9-2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보다 1명만 잘 키우는 것이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문A9-3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녀를 여러 명 갖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문A10. ____님께서는 현재 노후준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④ 상당히 관심이 있다

문A11. ____님께서는 노후생활에 있어서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되십니까? 가장 염려되는 것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
② 아프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것
③ (은퇴 후) 마땅히 할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④ 나갈 곳이 없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것
⑤ 직장에서의 사회관계가 없어져 만나고 교류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⑥ 집에서 배우자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되는 것
⑦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⑧ 가사일 등 매일의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기 벅찬 것

문A12. 다음 중 어떤 것이 ___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위
- ② 퇴직연금(퇴직금을 매월 연금지급) 또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위
- ③ 개인연금 (저축·보험·펀드) ()위
- ④ 예금·저축·펀드·주식 ()위
- ⑤ 부동산 ()위
- ⑥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위

문A13. ____님께서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② 준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음
- ③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음
- ④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노후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음

문A1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플랜2010)’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처음 마련되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매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정책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노후에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②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③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④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A15. ____님께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④ 상당히 바람직하다

B.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B1. ____님께서서는 젊은이들이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고, 신혼집을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1	[만25~만44세만 응답]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위한 좋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신랑신부에게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2	[만25~만44세만 응답]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며, 주택을 청약할 때 우선 순위를 주는 등 혜택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2. ____님께서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2-1	[만25~만44세만 응답]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데 필요한 보육비를 일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2-2	[만25~만44세만 응답]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육비용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2-3	[만25~만44세만 응답] 초·중고 방과 후 학교의 교육비용을 사립학원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높이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2-4	[만25~만44세만 응답] 일하는 엄마를 둔 초·중·고·대학생을 방과 후에 학교에서 맡아 돌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2-5	[만25~만44세만 응답] 자녀가 많을수록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2-6	[만25~만44세만 응답]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에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3. ____님께서서는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3-1	[만25~만44세만 응답]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3-2	[만25~만44세만 응답] 민간 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3-3	[만25~만44세만 응답] 일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3-4	[만25~만44세만 응답] 필요할 때 아이를 동네 어린이집에서 몇 시간 동안 시간제로 맡아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4. ____님께서서는 건강하게 임신하고 잘 출산하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4-1	[만25~만44세만 응답] 임과 아기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4-2	[만25~만44세만 응답]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비용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4-3	[만25~만44세만 응답]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이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5. ____님께서서는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5-1	[만25~만54세만 응답] 출산한 직장여성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관계없이 누구나 3개월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5-2	[만25~만54세만 응답] 어린이가 있는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5-3	[만25~만54세만 응답] 출산 후, 또는 아이를 키운 후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5-4	[만25~만54세만 응답]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퍼져 나가도록 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6. ____님께서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6-1	[민25~민54세만 응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6-2	[민25~민54세만 응답] 지역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7. ____님께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7-1	[민25~민54세만 응답]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7-2	[민25~민54세만 응답]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서 보호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7-3	[민25~민54세만 응답]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7-4	[민25~민54세만 응답] 어린이와 청소년을 음란물, 음주, 흡연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8. ____님께서서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8-1	[민25~민54세만 응답]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보호해 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8-2	[민25~민54세만 응답]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9. ____님께서서는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하여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9-1	[만25~만64세만 응답]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오래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9-2	[만25~만64세만 응답]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회연금 등이 안정적으로 오래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9-3	[만40세 이상만 응답]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확대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9-4	[만25~만64세만 응답]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주고, 오랜 기간 납부하지 못하여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0. ____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하여 노후에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0-1	[만25~만64세만 응답] 직장 퇴직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계속 받도록 해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0-2	[만25~만64세만 응답]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도록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1. ____님께서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는 등 나
이 들어서도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
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1-1	[민40세 이상만 응답] 나이 들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젊 은 시절부터 미리 체계적으로 건강 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1-2	[민55세 이상만 응답] 아픈 노인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1-3	[민55세 이상만 응답] 노인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2. ____님께서서는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시설 수를 늘리고, 보다
좋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2-1	[민55세 이상만 응답]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 하고, 치료비용도 낮추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2-2	[민40세 이상만 응답]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정착시켜 더 많 은 노인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2-3	[민40세 이상만 응답]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양시설을 많이 짓고 집에 방문 하여 돌봐 주는 서비스를 충분히 늘리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드리거나, 가정에 계시면서 주기적인 방문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이면 누구나 등급판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최대 총 이용비용의 약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욕창치료, 주사, 약 복용 지도와 같은 간호서비스, 식사차려주기, 식사 도와 주기, 목욕시켜 주기,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B13. ____님께서서는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3-1	〔만55세 이상만 응답〕 문턱 없애기 등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집 짓는 기준을 정하고, 기존주택을 이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을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4. ____님께서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4-1	〔만55세 이상만 응답〕 버스·지하철 타고내리기, 횡단보도 건너기 등 대중교통 환경을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하도록 바꾸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5. ____님께서서는 나이 들어서도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5-1	〔만55세 이상만 응답〕 원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5-2	〔만55세 이상만 응답〕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5-3	〔만55세 이상만 응답〕 노인들이 취미생활 등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5-4	〔만55세 이상만 응답〕 은퇴 후 노후생활을 보람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후생활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6. ____님께서서는 보다 많은 직장에서 여성을 고용하도록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6-1	〔만25~만54세만 응답〕 기업들이 여성을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6-2	〔만25~만54세만 응답〕 여성들의 직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7. ____님께서서는 경험과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7-1	〔만40세 이상만 응답〕 가능한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도록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7-2	〔만40세 이상만 응답〕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높아지는 현 임금체계를 보완하여, 55세 전후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낮추는 대신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는 임금피크제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7-3	〔만55세 이상만 응답〕 5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어 일자리를 잃은 중고령자들이 다시 취직할 수 있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7-4	〔만40세 이상만 응답〕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직장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7-5	〔만55세 이상만 응답〕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직장의 업무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직장내에서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8. ____님께서서는 외국동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8-1	〔만25~만54세만 응답〕 외국동포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필요한 곳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8-2	〔만25~만54세만 응답〕 우수한 기술과 실력을 가진 외국인 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8-3	〔만25~만54세만 응답〕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19. ____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이 (1)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 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②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이루 어짐	⑤ 상당 히 이루 어짐
문B 19-1	〔만25~만54세만 응답〕 학교에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 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직업체 험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B 19-2	〔만25~만54세만 응답〕 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자기에게 필 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항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C1.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쪽
(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기	-2	-1	0	+1	+2	(나)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족을 보다 중요시하고,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2	-1	0	+1	+2	(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기
(나)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을 보다 중요시하고,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2	-1	0	+1	+2	(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문C2.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쪽
(가) 젊은이들이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고, 신혼집을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2	-1	0	+1	+2	(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다)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기	-2	-1	0	+1	+2	(가) 젊은이들이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고, 신혼집을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가) 젊은이들이 적절한 나이에 결혼하고, 신혼집을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2	-1	0	+1	+2	(라) 건강하게 임신하고 잘 출산하도록 돕기
(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2	-1	0	+1	+2	(다)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기
(라) 건강하게 임신하고 잘 출산하도록 돕기	-2	-1	0	+1	+2	(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다) 좋은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기	-2	-1	0	+1	+2	(라) 건강하게 임신하고 잘 출산하도록 돕기

문C3.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족을 보다 중요시하고,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쪽
(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하기	-2	-1	0	+1	+2	(나) 가족의 소중함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강화하기

문C4.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쪽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문C5.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쪽
(가)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2	-1	0	+1	+2	(나) 나이가 들어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다)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2	-1	0	+1	+2	(가)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가)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2	-1	0	+1	+2	(라) 나이 들어서도 직업활동,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나) 나이가 들어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다)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라) 나이 들어서도 직업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나이가 들어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다)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2	-1	0	+1	+2	(라) 나이 들어서도 직업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문C6.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안정되고 충실하게 하기	-2	-1	0	+1	+2	(나)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하여 노후에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문C7. 나이가 들어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는 등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 시설 수를 늘리고, 보다 좋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문C8.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2	-1	0	+1	+2	(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문C9. 나이 들어서도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원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여가활동 혹은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나) 여가활동 혹은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다) 은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 실시
(다) 은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도와 주는 교육 실시	-2	-1	0	+1	+2	(가) 원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문C10. 곧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가정주부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원하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높이기
(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2	-1	0	+1	+2	(가) 가정주부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원하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기
(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높이기	-2	-1	0	+1	+2	(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문C11. 가정주부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원하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왼 쪽	왼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왼쪽이 다소 더 중요함	둘 다 똑같이 중요	오른쪽이 다소 더 중요함	오른쪽이 상당히 더 중요함	오른 쪽
(가) 보다 많은 직장에서 여성을 고용하도록 하고,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하여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나) 경험과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다) 외국동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가) 보다 많은 직장에서 여성을 고용하도록 하고,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하여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기
(나) 경험과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계속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2	-1	0	+1	+2	(다) 외국동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D.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여쭙겠습니다

문D1. (연령이 만25~만44세인 응답자만) 현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 저소득층은 보육비 전액을,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소득 수준의 가정까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이러한 정부지원**이 더 확대된다면, 다음 중 어떤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 ②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③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

문D2. (연령이 만25~만44세인 응답자만) ____님께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액수가 적은 것
- ② 저소득층에게만 거의 지원이 되는 것
- ③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 ④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 ⑤ 기타

문D3. (연령이 만25~만44세인 응답자만) 올해 7월부터 저소득 가정의 만1세 이하 아기에게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양육수당의 혜택범위나 대상을 확대**한다면, 어떤 면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양육수당 :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저소득가정의 만 1세(12개월)까지 아기에 대해 월10만원씩 지원됩니다.

- ① 소득기준 완화 : (예) 현재 저소득층 → 대부분의 중산층까지 지원 ()위
- ② 지원연령 확대 : (예) 현재 만1세 이하 → 만5세 이하 ()위
- ③ 지원금액 확대 : (예) 현재 10만원 → 20만원 ()위

문D4. 현재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인해 대부분이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여성들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이들에게 필수적인 보육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어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⑤ 상당히 동의한다

문D5. 현재 저소득층이나 셋째 아이 중심의 우리나라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해, 앞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닌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비용이나 양육경비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둘째 아이’에 대해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⑤ 상당히 동의한다

문D6.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직장에서 가급적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근로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시 퇴근문화의 정착’**이 직장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잘 꾸려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D7.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09년 약 360만명)에게 매월 8만8천원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감안하여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바뀐다면 어떤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로 대상을 좁히되, 연금액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서 지급함
② 지원 대상을 모든 노인들로 확대하되, 연금액은 현재 수준 또는 낮게 유지
③ 지급대상이나 연금액 모두 현행 수준 유지

문D8. 최근 들어 조선족 등 외국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____님께서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⑤ 상당히 바람직하다

문D9.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____님께서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⑤ 상당히 동의한다

E.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문E1. ____님 맥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원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척, 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 등은 포함하고,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_____명

문E2. 귀 맥의 가족 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 | | |
|--|---------|
| ① 가구주 부부 | |
| ② 가구주 부부(또는 가구주) + 가구주의 자녀(또는 가구주의 자녀 부부) | |
| ③ 가구주 부부의 부모(또는 가구주의 편친) + 가구주 부부(또는 가구주) | |
| ④ 가구주 부부의 부모(또는 가구주의 편친) + 가구주 부부(또는 가구주) + 가구주의 자녀(또는 가구주의 자녀 부부) | |
| ⑤ 가구주 부부(또는 가구주) + 가구주의 손자녀(또는 가구주의 손자녀 부부) | |
| ⑥ 미혼형제 · 자매 · 친척 | ⑦ 1인 가구 |
| ⑧ 비혈연 가구 | ⑨ 기타 |

문E3. ____님의 혼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문E3-1. (문E3에서 ②인 응답자만) ____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문E3-2. (문E3에서 ②, ③, ④, ⑤인 응답자만) ____님의 자녀는 몇 명이십니까?

_____명

문E3-3. (문E3-2에서 1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만) ____님의 자녀의 연령과 성별, 취학상태는 어떠합니까?

출생 순위	연령	성별	취학상태		
첫째	만_____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④ 대학생	② 초등학생 ⑤ 대학원 이상	③ 중고등학생 ⑥ 학생 아님
둘째	만_____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④ 대학생	② 초등학생 ⑤ 대학원 이상	③ 중고등학생 ⑥ 학생 아님
셋째	만_____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④ 대학생	② 초등학생 ⑤ 대학원 이상	③ 중고등학생 ⑥ 학생 아님
· ·	만_____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④ 대학생	② 초등학생 ⑤ 대학원 이상	③ 중고등학생 ⑥ 학생 아님

문E3-4. (문E3-3에서 자녀 취학상태가 ①인 응답자만)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들은 어떠한 보육시설 또는 사교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 놀이방 ② 유치원 ③ 사설 학원
④ 개인교습 ⑤ 기타 ⑥ 다니지 않음

문E3-5. (문E3-3에서 자녀 취학상태가 ②, ③인 응답자만) 초, 중,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어떠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학원 ② 복지관,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등 방과 후 교실
③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④ 학습지나 재택과외 등 개인교습
⑤ 기타 ⑥ 없음

문E3-6. (문E3-3에서 자녀 취학상태가 ①, ②, ③인 응답자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① 9만원 이하 ② 10 ~ 29만원 ③ 30 ~ 49만원
④ 50 ~ 69만원 ⑤ 70 ~ 99만원 ⑥ 100 ~ 119만원
⑦ 120 ~ 149만원 ⑧ 15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문E4. (연령이 만25~만44세인 응답자만) ____님께서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있다 ⑤ 상당히 있다

문E5. ____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기카드의 직업분류표를 참고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무직/퇴직

문E5-1. (문E5 ①~⑩인 응답자만) ____님의 일자리는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파견 및 용역직)입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비임금근로자

문E5-2. (문E3에서 ②, 문E5 ①~⑩인 응답자만) ____님께서 직장생활과 매일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드십니까?

-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별로 힘들지 않다
③ 약간 힘들다 ④ 상당히 힘들다

문E5-3. (문E3에서 ②, 문E5 ①~⑩인 응답자만) 귀댁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E5-4. (문E5에서 ⑪~⑬인 응답자만) ____님께서 취업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느 정도 있다 ⑤ 상당히 많다

문E6. ____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으신 사회보험에 ○표해 주시고, 가입되어 있으신 것 중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가입하고 있다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①	①
특수직역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일시금)	②	②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장해일시금)	③	③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급여)	④	④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없다	⑤	-

문E7. ____님께서 다음의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구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산전 진찰 지원 서비스	①
산모 도우미 서비스	②
아이 돌보미 서비스	③
출산 휴가	④
육아 휴직	⑤
다자녀 양육비 지원 혹은 출산 축하금	⑥
취학전 자녀 보육비·교육비 지원	⑦
국민기초생활수급	⑧
기초노령연금	⑨
노인일자리사업	⑩
지원 받아본 경험이 없다	⑪

문E8. ____님의 가족 중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드리거나, 가정에 계시면서 주기적인 방문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이면 누구나 등급판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최대 총 이용비용의 약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욕창치료, 주사, 약 복용 지도와 같은 간호서비스, 식사차려주기, 식사 도와 주기, 목욕시켜 주기,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E9. ____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의료서비스 : 보건소의 예방접종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당뇨관리사업, 일반진료사업, 치과진료사업, 한방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 건강증진서비스 : 보건소의 비만,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 등

문E10.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응답자만) ____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뭇

⑤ 매우 나쁨

문E11. ____님께서서는 현재 본인의 매일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②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③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④ 상당히 만족스럽다

문E12. ____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중학교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⑨ 모름/무응답

문E13. 귀 닥의 한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너스, 이자, 임대료 수입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49만원 이하

② 50 ~ 99만원

③ 100 ~ 149만원

④ 150 ~ 199만원

⑤ 200 ~ 249만원

⑥ 250 ~ 299만원

⑦ 300 ~ 399만원

⑧ 400 ~ 499만원

⑨ 500 ~ 799만원

⑩ 800만원 이상

99 모름/무응답

●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